

국무조정실 · KDI 공동주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 일시: 2006년 12월 1일(금)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국무조정실 · KDI 공동주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 일시: 2006년 12월 1일(금)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목 차 】

| | |
|----------------------------------|-----|
| 발표 1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개요 | 1 |
| 발표2 IMD·WEF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 61 |
| 발표3 유럽강소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 131 |
| 발표4 아시아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 162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_061201)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개요

2006. 12

우 천 식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분야별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 3 |
| 1. 부패·신뢰 및 투명성 | 3 |
| 가. PWC의 불투명지수(The Opacity Index) | |
| 나. 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
| 2. 경제자유도 | 12 |
| 가. CATO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
| 나. Heritage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
| 다. A.T Kearney의 FDI 신뢰도 지수(FDI Confidence Index)/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 | |
| 3. 신용평가 | 22 |
| 가. Moody's 신용등급(Creating Rates) | |
| 나. S&P의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s) | |
| 4. 산업경쟁력 | 28 |
| 가. UNIDO의 산업개발보고서(Industrial Development Series) | |
| 나. OECD의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
| 5. 기업경쟁력 | 34 |
| 가. WB의 Doing business Index | |
| 나. WB의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s) | |
| 다. WB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 | |
| 6. 종합평가기관 | 46 |
| 가. IMD의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
| 나. 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
| III. 결론 | 53 |

제 1장 서론

-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음.
- 많은 노력으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가 상당 부문 상승하였지만, 우리의 노력에 비해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는 아직 부진하다는 인식이 국내에 강함
- 이는 우리의 자체 노력에 대해 과도하게 평가한 측면도 있고,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의 개혁 노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음.
-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음.
- IMD, WEF 등과 같은 종합경쟁력 평가 전문기관부터, World Bank, OECD, UNDP 등과 같은 국제기구, CATO, Heritage재단, IPS과 같은 연구소, Moody's 나 S&P같은 신용평가기관, A.T. Kearney, PriceWaterhouse Cooper(PWC) 등과 같은 컨설팅회사, 그리고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TI)와 같은 국제NGO 등 매우 다양
- 이들 기관들은 모두 경제전반 내지 사회 주요부문의 경쟁력과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 내지 정책의 질을 평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평가기관이 IMD, WEF이며 이 두 기관은 종합국가경쟁력 지수를 통해 국가별 순위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국가 간 단순비교가 용이하여 활용도가 높음.
- 위기 이후 이 두 기관의 순위 상승과 하락에 따라 그해 정부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정도로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 정부의 반응은 뜨거움
- 그러나 그 등락의 원인 규명이 불투명하고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평가결과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소모적인 논란에 불과할 수 있음.
- 많은 국제사회평가기관들을 살펴보면, 같은 분야일지라도 평가방법과 평가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IMD·WEF를 포함하여 각종 해외 국제평가기관들을 분야별로 분류, 그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짚어봄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제 2장 분야별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현황

- 본 장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를 평가하고 있는 12개 기관에서 발간한 16개의 국제경쟁력 평가보고서의 개요 및 평가방법, 한국의 평가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1. 부패 및 투명성

가. PWC(Price Waterhouse Coopers)의 불투명 지수 (The Opacity Index)

<개요>

- 세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기구인 PWC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투명지수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내 자본비용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 정도를 평가했음.¹⁾
- PWC가 규정하고 있는 불투명(opacity)이란 “기업, 금융, 정부가 접촉하는 광범한 분야에서 명확성(clear), 정확성(accurate), 공식성(formal), 인식의 용이성(easily discernible),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관행(widely accepted practices)의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기업이나, 금융, 정부부문과 관련 있는 제도나 관행이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또 지나치게 모호하여 인식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 불투명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임.
 - 결국, 불투명성은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임

<평가방법>

- PWC는 각국의 불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자료와 통계자료 그리고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이용.
- PWC은 불투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을 다음 3단계를 통해 평가함.
 - 먼저 PWC 조사팀이 조사 대상국가의 최고 기업 재무경영자(CFOs), 은행임원, 증권

1)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PricewaterhouseCoopers 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구로써,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150개국 15만 명 이상의 지식과 기술들을 동원하여 비즈니스 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임.(<http://www.pwcglobal.com>)

분석가 그리고 PWC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입수함.

- PWC는 20명 이상의 CFO와 5명의 은행원, 3명의 증권분석사, 그리고 5명의 PWC 직원과 인터뷰를 실시.

○ 그 다음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불투명 점수를 나타내는 O-Factor를 작성하여 대상 국가에 대한 다섯 가지 분야별 점수를 계산. O-Factor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고자 PWC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종합.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대상국가의 자본비용과 유용성에 미칠 불투명성의 경제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와 같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된 종합적인 불투명 점수를 이용함.

□ PWC의 구체적인 평가는 “O-Factor”, “유사조세(tax equivalent)”, “리스크 프리미엄” 등 3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

○ O-Factor은 PWC가 매년 발표하는 불투명 지수로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① 부패 ②법률체제 ③경제 및 재정정책 ④회계기준과 관행 ⑤규제체제 등 5가지 변수를 측정.

- 예를 들어 나라에 따라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뇌물이 존재하기도 함. 관료의 부패로 인해 정치적으로 유착된 대출이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대출을 가로막아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음.

- 그리고 주주에 대한 보호정도, 예측가능한 법률구조, 규제 및 소유권의 보호 정도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재정, 금융, 외환정책 등 정부의 정책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임의적이면 결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위험부담율(Risk Premium)을 증가시킴. 그리고 회계기준의 투명화로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발표되고 공개되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될 수 있음.

- 이밖에도 각종 영업규제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적용된다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임.

○ 유사조세는 불투명성의 영향으로 인해 잠재적 세금(hidden tax)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는 불투명성으로 인한 손실로 이해될 수 있음.

- PWC는 유사조세 값을 평가함에 있어 싱가포르를 벤치마크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유사 조세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음.
 - 따라서 PWC가 평가하는 유사조세의 값이 30이라면 이는 한 나라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기업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싱가포르보다 30% 추가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이는 불투명성으로 인한 손실로 이해될 수 있음.
- o 마지막으로 PWC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는데 이는 한 국가가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불투명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프리미엄임.
-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정부는 때로는 지출을 충당하거나 교육, 국방,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아젠다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 자본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얻기도 하는데, 이 때 정부는 국채(sov​er​eign bonds)를 발행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과 거래를 하게 됨.
 - 채권은 정부의 확실한 믿음과 신용으로 뒷받침하는 채권이므로 국가의 투명성에 의존하기 쉬움.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좀 더 불투명한 관행을 보이는 국가는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보상하여야 함. 따라서 PWC는 자산의 가치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평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 가치는 불투명 요소로 인해 초래되는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 가격을 분석한 것임.

<표 1> PWC의 불투명정도 측정을 위한 항목들

| 주요항목 | 보고변수 | 세부변수 |
|--------------------------|--|---------------------------------------|
| O-Factor | 부패 | 자본비용에 끼치는 부패의 영향 |
| | 법률체제 | 주주 보호 사법상의 예측 가능성 법, 규제, 재산권 집행 |
| | 경제 및 재정정책 |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
| | 회계기준과 관행 | 공개기준 공개적인 교역기업 정보 접근성 |
| | 규제체제 | 규제절차의 일관성 및 변경에 관한 규율 |
| 유사조세(tax equivalent) 리스크 | 불투명성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 |
| 프리미엄 | 한 국가가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담하는 프리미엄이다. | |

주) O-Factor은 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합으로서 불투명지수를 의미함.

<한국의 평가결과>

- 2004년 PWC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규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및 자의성 항목에서 37점으로 평균 27.13점을 크게 상회했고 전체 순위는 평가대상국가 48개국 중 41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부분별로는 리스크 프리미엄 값은 967로서 PWC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9.67%의 추가이자율을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시 말하면 국제자본시장에서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국가로 평가된 싱가포르가 기체할 수 있는 이자율보다 한국은 9.67% 높은 위험요소를 추가 부담해야함을 의미함.
- 또한 한국의 유사조세의 값이 35 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투명성으로 인해 법인세 등의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35%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나타냄.
- 특히 회계부문에서는 한국이 48개국 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국의 조건부 회계(contingency accounting)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음.

나.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 부패인지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개요>

- 국제투명성위원회는 1993년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세계 비영리, 비정치 연합체로 '95년에 이후 매년 부패인지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음.
- CPI의 부패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부 조달 사업에서의 리베이트, 공적 자금의 횡령을 포함하는 사적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됨.
- 그리고 ‘부패 수준’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첫째는 부패의 빈도이고 둘째는 지불된 뇌물의 총 가치임. 이 두 가지 측면은 보통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뇌물공여 및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들이 기업 수익의 많은 부분을 뇌물로 제공하고 있음.

<평가방법>

- CPI 평가방법은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7개의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14개의 데이터 소스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합성지수임.
- CPI의 장점은 단일 지수에 다중 데이터 소스를 조합하여 개별 국가의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 점에 있으며, 가용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세 개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평가에서 제외시킴.
- CPI의 데이터 소스로 포함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국가들이 순위를 제공해야하고, 둘째, 전반적인 부패 수준을 측정해야만 함.
- 각각의 소스는 제공되는 국가 순위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TI는 개별 국가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해결.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개별 소스간의 높은 일치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임.

- o CPI에 포함되는 14개의 데이터의 가중치는 신뢰성과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표 2> TI의 CPI 설문조사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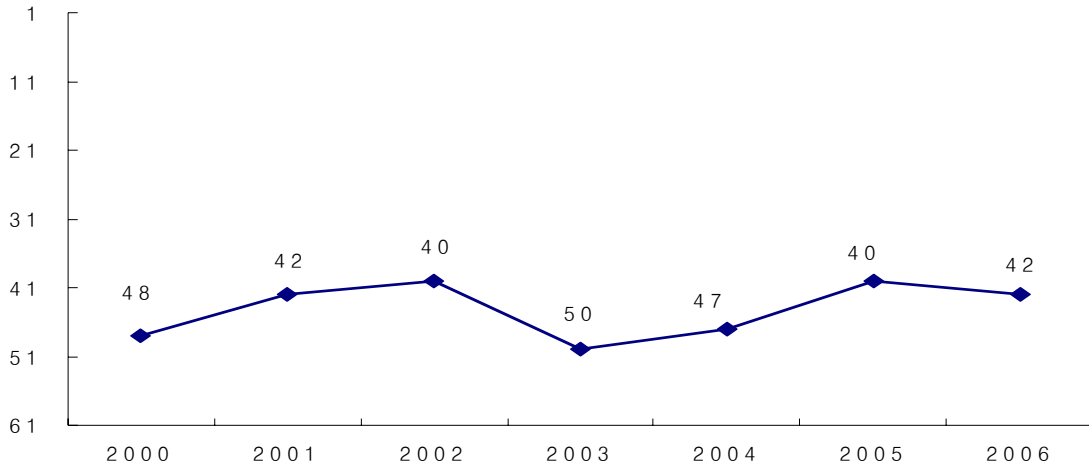
| 출처 기관 | 출처 자료명 | 출처기관의 설문 질문 |
|------------------------|---|--|
| PERC | Asian Intelligence Issue | 외국회사에 대한 사업 환경을 저하시키는 부패의 정도 전반적인 주거 및 작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부패의 질에 의한 부패 평가 방법 |
| IMD |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공공부문에 있어서 뇌물 공여 및 부패 존재 여부 |
| World Bank |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 | 뇌물 공여 빈도 및 사업에 대한 제한요인으로서 부패 |
| PricewaterhouseCoopers | Opacity Index | 다양한 부문(예를 들면, 수출입 허가 또는 보조금 획득, 세금 포탈)에서 부패 빈도 |
| EIU | 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부패 만연 정도 평가 |
| Freedom House | Nations in Transit | 부패 수준(Level) |
| WEF | Africa Competitiveness Report | 부패가 문제가 되는 정도, 비 정기적인 추가 지불이 필요한지 여부, 뇌물의 양 |
|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수출입 허가, 공익 사업 및 계약, 사업 면허 취득, 세금 지불 또는 대출 신청과 관련된 부정기적인 추가 지불이 통상적인지의 여부 |

<한국의 평가>

- TI는 PERC를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함.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은 아시아 기업들은 대부분 공개경쟁보다는 부정합 타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술 및 건전한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만연되어왔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밀착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함.

<그림 1> TI의 연도별 CPI 순위(한국)



②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

<개요>

- TI의 CPI가 수요측면에서의 부패를 측정한다면,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는 뇌물을 공여하는 국제적인 기업들의 상대적인 성향 즉, 공급측면을 측정하는 지수임.
- “경험상 당신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를 질문하여 조사한 결과

<평가방법>

- BPI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19개 주요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음.

- GIA는 비 OECD 국가의 모든 수입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4개 주요 신흥 시장 경제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및 태국-에서 활동하는 779 민간 부문 리더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개별 국가별로 약 55명이 인터뷰에 참가하였음.
- 0~10점으로 수치화돼 점수가 높을수록 뇌물제공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 즉, 뇌물지수도 수치가 낮을수록 그만큼 더 뇌물을 많이 준다는 것을 뜻함.

<한국의 평가>

- 2006년 BPI발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조사대상인 세계수출 주도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기업들의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
- 한국의 BPI는 '99년 3.4점, '02년 3.9점이었으나 '06에는 5.83점으로 상승. 이에 따라 '02년도 점수와 단순 비교한 개선도는 1.9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러시아(2.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99년과 '02년에는 각각 19개국 중 18위,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여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06에는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그룹에서 벗어났음.
 - TI는 '06년도 BPI에 따라 30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국은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제 3그룹에 포함.
 - BPI가 가장 높은 제 1그룹에는 스위스(전체1위, 7.81점),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었고, 가장 낮은 제 4그룹에는 대만, 터키,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포함
-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청렴도 경쟁상대인 말레이시아(5.59점, 25위), 대만(5.41점, 26위)보다 우리기업들이 더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경제자유도

가. CATO

<개요>

- 미국 CATO 연구소는 미국의 기본 원리인 정부개입 축소, 개인의 자율성 보장, 시장경제 등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워싱턴 D.C.에 소재.
 - CATO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자율성에 대해 평가하는 세계 경제자유도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경제자유도 보고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후원과 전세계 50여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 지원을 받아 발간되고 있는데 주로 7개 경제분야의 21개 변수를 기준으로 경제자유도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보고서는 경제자유도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UN의 인간개발지수 (HDI), 수명 등과 양(+)의 관계가 있으며, 부패, 빈곤 등과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CATO 연구소는 경제자유도지수 외에 종합지수(Comprehensive Index), 무역 개방지수(Trade Openness Index)²⁾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평가방법>

- CATO는 경제자유도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 되는 7개 분야의 21개 변수를 활용.

2) 무역개방지수는 CATO 연구소가 경제자유도지수에 추가적으로 1980~1998년 동안의 109개 국가의 무역정책을 검토하여 새로 산출한 지수임. 무역개방지수는 관세율, 암시장에서의 환율 프리미엄, 자본이동의 제한, 교역 규모 등 4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의 자유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임.

<표 3> 경제자유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7개 분야

| | 분야 | 주요 변수 |
|---|-----------------|--------------------------------------|
| 1 | 정부의 규모 | 정부의 소비지출, 양도 및 보조금 등 |
| 2 | 경제구조 및 시장여건 | 국영기업, 가격통제, 최고세율 등 |
| 3 | 통화정책 및 가격안정 | 통화공급 증가율, 인플레이션 변화율 등 |
| 4 | 대체통화 사용 정도 | 외국통화 보유, 암시장 환율 등 |
| 5 | 법률구조 및 사적재산권 보호 | 법적 보호, 법률 등 |
| 6 | 대외교역 | 평균관세율, 교역규모 등 |
| 7 | 금융 거래에 대한 자유 | 민간인의 은행 소유권, 민간부문의 신용한도, 외국인의 자본거래 등 |

- 경제자유도지수가 높을수록 제도 및 정책이 경제적 자유와 보다 일관성을 갖는 것임. 경제자유도지수의 범위는 0~10까지이며, 0은 자유도가 가장 낮은 경우이고 10은 자유도가 가장 높은 경우임
- 각 변수의 실제값이 기준년도 최고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0점이 주어지며, 실제값이 기준년도의 최소값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0점이 주어짐.
- 다만 인플레이션, 정부의 규모 항목의 경우에는 위 공식을 적용할 경우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자유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므로 변형된 공식을 적용.

<한국의 평가결과>

-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구조 및 시장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분야별 한국의 경제자유도(2006년 기준년도)

| | 정부규모 | 경제구조 / 시장 | 통화정책 / 가격안정 | 대체통화 사용 | 법률구조 / 재산권 | 대외교역 | 자본시장 | 전체 |
|-------|------|-----------|-------------|---------|------------|------|------|-----|
| 자유도지수 | 8.1 | 3.5 | 8.9 | 7.5 | 6.8 | 7.7 | 8.0 | 7.1 |

- 한국의 종합지수 순위는 전체 조사 대상국 130개국 중 3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 자본의 건전성 부분의 경제자유도가 높은 반면 정부, 법률, 금융, 기업 분야에서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유재산권에 대한 법률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은행·금융·자본시장 등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금융부분에서도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업 부문에서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규제적인 조치, 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표 5> 분야별 한국의 종합지수(Comprehensive Index) 현황

| | 정부규모 | 법률구조 /재산권 | 자본의 건전성 | 대외교역 | 금융/자 본시장 | 노동시장 | 사업 환경 | 전체 |
|------|------|--------------|------------|------|-------------|------|----------|-----|
| 종합지수 | 6.5 | 6.3 | 9.5 | 7.2 | 7.4 | 4.9 | 5.1 | 7.1 |
| 순위 | 50 | 43 | 27 | 48 | 72 | 79 | 52 | 35 |

주: 1) 종합지수의 범위는 0~10까지이며, 0은 자유도가 가장 낮은 경우이고 10은 자유도가 가장 큰 경우임.
2) 순위는 2006 기준으로 130개국의 종합지수에 따른 나열임.

나. Heritage

<개요>

- 세계적인 공공정책 수립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1973년 에드윈 풀너에 의해 설립되어 매년 『경제 자유도 지수』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도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음.
-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 및 제약이 없는 상태” 라고 정의함.
- 헤리티지 재단은 경제적 자유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도가 경제적 번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즉, 경제적 자유로 통해 경제 발전 및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실제로 보다 많은 경제 자유도를 기록한 국가들이 보다 높은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평가방법>

- 2006년도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적 자유도 지수』는 총 16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크게는 10개의 대분류 항목과 이하 3~7개의 세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개의 대분류는 무역정책, 정부 재정 부담,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통화정책, 자본흐름과 외국인 투자, 금융, 임금 및 물가, 재산권 보호, 규제, 그리고 암시장으로 구성되며, 경제 자유도 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 동일한 비중을 갖음.
-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각각 점수가 매겨지는데, 평가 점수는 1점에서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1점이 가장 높은 경제적 자유도를 의미하고 5점이 가장 낮은 경제적 자유도를 의미함.
- 이렇게 매겨진 10개의 평가점수를 더하여 평균을 구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 자유도 점수가 나오는데 한 국가의 경제 자유도는 점수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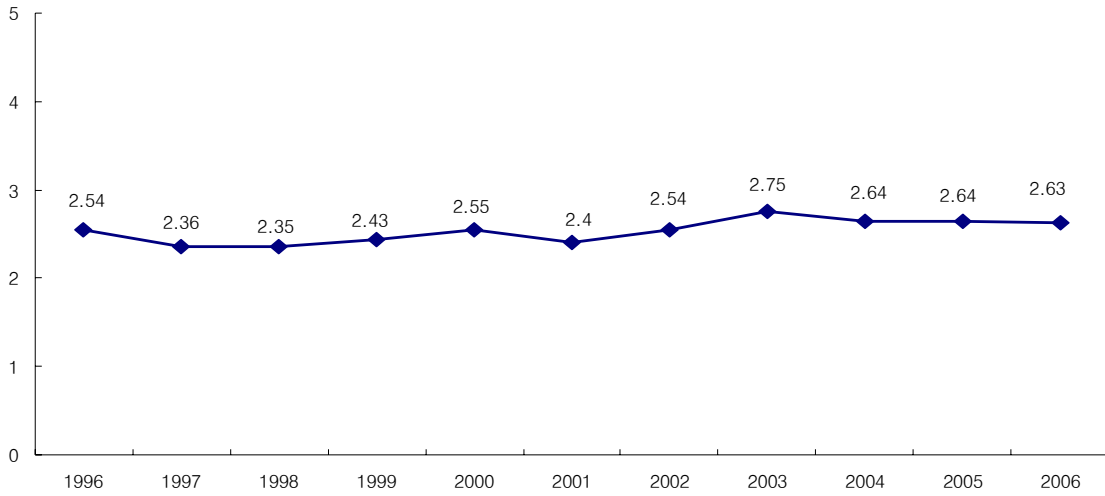
<표 6 > 점수에 따른 경제적 자유도의 범주

| 범 주 | 점 수 범 위 |
|------------------------|--------------------------|
| 자유로움(Free) | 평균 점수가 1.95점 이하인 국가 |
| 거의 자유로움(Mostly free) | 평균 점수가 2.00에서 2.95까지인 국가 |
| 거의 억압적임(Mostly unfree) | 평균 점수가 3.00에서 3.95까지인 국가 |
| 억압적임(Repressed) | 평균 점수가 4.00점 이상인 국가 |

<한국의 평가결과>

- 헤리티지의 2006년도 『경제 자유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총 165개국 중에서 45위로 비교적 경제자유도가 높은 편임. 그리고 평가 점수에 따른 분류범주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2번째 범주인 “거의 자유로운 국가”(Mostly Free)로 평가받았음.

<그림 2 > 헤리티지의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에 대한 평가(자유도 점수)



- 부분별로는 통화정책, 재산권보호, 외국인 투자, 임금 및 물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반면, 무역정책, 금융, 규제, 암시장, 정부채정부담, 정부개입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음.
- 특히 헤리티지는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번거로운 투자절차, 기업투명성의 부족, 그리고 노조 활동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음.

<표 7> 부문별 자유도 점수

| 무역 | 재정부담 | 정부간섭 | 통화정책 | 외국인 투자 | 은행 | 임금 & 물가 | 지적 재산권 | 규제 | 지하시장 |
|-----|------|------|------|--------|-----|---------|--------|-----|------|
| 3.5 | 3.3 | 2.5 | 2.0 | 2.0 | 3.0 | 2.0 | 2.0 | 3.0 | 3.0 |

다. A.T Kearney

① FDI 신뢰도 지수

<개요>

- A.T. Kearney는 e-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중 하나로 CEO들의 의사결정에 관

련된 이슈나 경영자문을 목적으로 1930년에 설립되어 세계 각지에서 5000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매년 전세계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60여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FDI 신뢰도 지수(FDI Confidence Index)』를 발표해 오고 있음.
- A. T. Kearney가 평가하고 있는 대상국가 60여개국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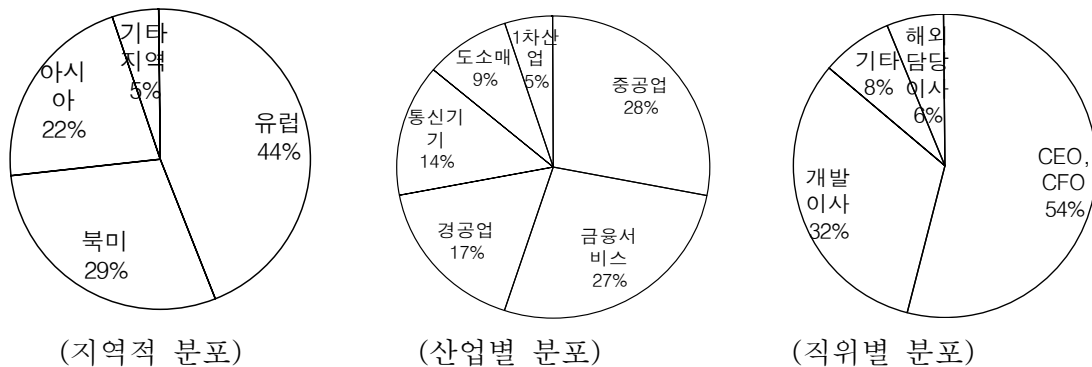
<평가방법>

- A.T. Kearney의 설문지 조사 대상기업들은 모든 지역과 모든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1000여개 기업으로서, 이들 기업은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 매출액도 16조 달러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임.
- A.T. Kearney의 FDI Confidence Index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치, 경제 그리고 규제변화의 영향분석과 세계 우수기업 내 CEO들의 FDI 선호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기준표임.
- A.T. Kearney의 FDI Confidence Index는 현재의 관점에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CEO가 각 국가의 FDI의 매력도에 대한 인상을 정리한 것임
- FDI Confidence Index는 세계 1000대 기업의 CEO와 CFO등 선임 경영진에 대한 proprietary 설문조사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은 2004년 수익에 따른 Global 1000 기업이며 SIC 코드의 분류에 따르면 24개의 산업, 그리고 47개국에 대해 행해짐. 대상 기업들은 전 세계 FDI 흐름의 70% 가량을 차지.
- 지수는 향후 1-3년간 직접 투자의 가능성에 대해 “높음,” “보통,” “낮음,” “없음”의 네 가지 대답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구성. 한 국가의 지수 값은 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그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해 응답한 것을 기초로 계산됨.
- 지수값은 0에서 3까지의 범위로 계산되며, 3은 “매우 매력적(highly attractive)”임

을 뜻하며 0은 “매력적이지 않음(not attractive)”을 뜻함.

- 2차 자료는 유엔무역발전회의(UNCTAD), 세계은행, IMF, OEC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EIU, 각국의 투자진흥청, 중앙은행, 경제와 무역 관련 정부 부처 및 언론으로부터 얻음.
- 2005년의 FDI Confidence Index는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 시장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3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FDI 대상국임.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신흥시장과의 경쟁으로 인해 순위 하락했고 러시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및 터키의 약진이 두드러짐. 브라질과 멕시코 또한 순위 상승

<그림 3> A.T. Kearney의 설문지 조사대상 분석



<한국의 평가결과>

-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발달된 내수 시장 및 기술경제의 주도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DI 매력도는 꾸준한 하락(2003년 18위, 2004년 21위, 2005년 23위)
- 2004년 한국의 FDI는 77억 달러를 기록, 증가세를 보였으나 FDI 투자의 상당 부분은 M&A 거래로부터 기인.
- 규제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모펀드들이 올린 상당한 면세수익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인식도 나빠짐.
 - 은행 이사의 절반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또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며, 재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혁은 아직 많은 진전이 필요.

- FDI 매력도, 특히 R&D 분야의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낮은 R&D 비용, 우수한 인적 자원,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학과 연구 센터 등 교육 및 연구 시스템, IT 인프라 및 규제 환경 등이 지적됨.

<표 8> FDI Confidence Index의 상위 24개국

| | | |
|------------|-------------|--------------------|
| 1. 중국(1) | 9. 독일(5) | 17. 스페인(13) |
| 2. 인도(3) | 10. 홍콩(8) | 18. 싱가포르(18) |
| 3. 미국(2) | 11. 헝가리(19) | 19. 이탈리아(9) |
| 4. 영국(4) | 12. 체코(14) | 20. 태국(20) |
| 5. 폴란드(12) | 13. 터키(29) | 21. 캐나다(16) |
| 6. 러시아(11) | 14. 프랑스(6) | 22. 두바이/아랍에미리트(-)* |
| 7. 브라질(17) | 15. 일본(10) | 23. 한국(21) |
| 8. 호주(7) | 16. 멕시코(22) | 24. 중앙아시아**(27) |

자료: 2005 FDI Confidence Index

() 안은 2004년 순위

* 두바이/아랍에미리트는 첫 진입

** 중앙아시아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

②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

<개요>

- A.T.Kearney는 FDI 신뢰도 이외에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를 발표해 오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세계화라 함은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등의 면에서 거리 개념을 뛰어 넘어 상호의존의 정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별히 A.T. Kearney는 미국의 국제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³⁾사와 공동으로 1998년에 50개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의 세계화 정도를 정보기술, 금융, 무역, 정치, 여행, 그리고 인적 교류 부문으로 나누어 '세계화지수'를 개발함.

3) Foreign Policy紙 미국의 국제전문잡지로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한 잡지의 이름임.

- 조사결과 A.T. Kearney는 ①가장 세계화된 국가들은 세계화가 정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소득균형이 높고, ② 가장 세계화된 경제는 소국인 경향이 있으며 ③세계화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자유도 더 많이 누리며 ④ 세계화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공무원 부패정도도 낮다는 사실을 밝혀냄.

<평가방법>

- A.T. Kearney의 세계화지수는 해당국가의 거시지표와 국제적인 기관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통계데이터만을 이용함.
 - 주로 UNCTAD, World Bank, IMF, OECD, EBRD, UN-ECLAC, EIU 등 국가기관의 통계를 이용하고, 개별국가별로는 투자진흥청, 중앙은행, 재정부, 통상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수집함.
 - A.T. Kearney의 세계화 지수는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음.
- 구체적인 지수계산 방법으로 대부분의 변수들은 연도별로 유입량과 출입량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그 합계를 그 국가의 명목경제산출량(nominal economic output) 또는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표 9> A.T. Kearney의 세계화지수 평가 항목

| 주요항목 | 세부 항목 |
|---------|---|
| 경제적 통합 | 교역,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비거주 고용인 급여와 소득, 해외자산취득 및 지불비용(income earned and paid on assets held abroad) 등을 포함한 수입지급(income payment), 수령액(receipts) |
| 인적 교류 | 해외 여행, 국제 전화 통화량, 국외이동(cross-border transfer) |
| 기술 | 사업 거래나 통화를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호스트 수, 안전서버(secure server) 수 |
| 국제정치 참여 |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 참여도, 국내의 외국 대사관 설치 수 |

<한국의 평가결과>

- 2005년 세계화 지수 순위 결과에서 한국은 30위를 기록하여 2004년 대비 2단계 상승했음.

- 기술적 연결성, 특히 인터넷 사용자 수(2위)와 인터넷 호스트 수(13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통합 부문의 해외직접투자(47위), 정치적 개입 부문의 정부 이전 지출과 이전소득(42위), 다자간 국제조약 비준 수(41)위 등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임.
-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서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세계화 지수가 높게 나타남. 일본은 경제적 통합(62위)과 개인적 접촉(58위) 분야의 순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국제무역(62위)과 해외직접투자(52위)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보임.

<표 10> 세계화지수의 상위 30개국

| | | |
|-------------|---------------|---------------|
| 1. 싱가포르(2) | 11. 뉴질랜드(8) | 21. 독일(18) |
| 2. 아일랜드(1) | 12. 영국(12) | 22. 포르투갈(16) |
| 3. 스위스(3) | 13. 호주(13) | 23. 헝가리(26) |
| 4. 미국(7) | 14. 노르웨이(17) | 24. 파나마(27) |
| 5. 네덜란드(4) | 15. 체코(14) | 25. 슬로바키아(21) |
| 6. 캐나다(6) | 16. 크로아티아(23) | 26. 스페인(24) |
| 7. 덴마크(10) | 17. 이스라엘(22) | 27. 이탈리아(25) |
| 8. 스웨덴(11) | 18. 프랑스(15) | 28. 일본(29) |
| 9. 오스트리아(9) | 19. 말레이시아(20) | 29. 그리스(28) |
| 10. 핀란드(5) | 20. 슬로베니아(19) | 30. 한국(32) |

자료: *Measuring Globalization 2005*

() 안은 2004년 순위

<표 11> 아시아 경쟁국 및 주요 선진국의 2005년 부문별 순위

| 평가부문 | 국가 | | | | | | | | | |
|-----------|----|----|----|------|----|----|----|----|-----|------|
| | 한국 | 일본 | 중국 | 싱가포르 | 대만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 ① 경제통합 | 38 | 62 | 26 | 1 | 18 | 60 | 32 | 43 | 24 | 47 |
| ② 개인접촉 | 46 | 58 | 57 | 3 | 25 | 40 | 12 | 29 | 17 | 27 |
| ③ 기술적 연결성 | 19 | 15 | 50 | 11 | 18 | 1 | 10 | 17 | 21 | 25 |
| ④ 정치적 개입 | 45 | 18 | 54 | 32 | 62 | 43 | 5 | 8 | 3 | 6 |
| 종합 | 30 | 28 | 54 | 1 | 36 | 4 | 12 | 21 | 18 | 27 |

자료: *Measuring Globalization 2005*

3. 신용평가

가. Moody's

<개요>

- Moody's는 리서치 및 리스크 분석을 통해 고정 수입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 증권 발행자(issuers of securities), 그리고 기타 채무 (credit obligation)에 관한 신용 평가 및 신용등급 부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임.
- 무디스는 광범한 신용 채무에 관한 등급 발표와 리서치를 진행하며 여기에는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기업 및 정부의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에는 전통적인 채권 등급 측정 이외에 채권 발행자, 보험회사 채무, 은행 대출, 파생상품, 은행예금, 기타 은행 부채, 운영자금 등을 바탕으로 한 등급을 측정해옴.

<평가방법>

- Moody's의 평가원칙은 ①정량분석(quantitative)을 강조하고 ②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하며 ③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④신용등급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글로벌한 일관성을 가지며 ⑤현금 흐름의 수준과 예측가능성을 평가하고 ⑥합리적인 반대급부 시나리오를 설정하며 ⑦국내 거래 현황을 관찰함.
- Moody's의 주요 평가항목은 부채, 채무자, 은행예금, 보험 재정, 국가규모, 펀드, 시장리스크, 경영수준, 기타 등임.

<표 12> Moody's의 주요 평가항목

| 주요 변수 | 세 부 변 수 |
|-------|---|
| 부 채 | 공채와 선호주식 |
| 채무자 | 기관의 수행능력, 채무자의 재정능력, 은행의 재정 능력,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
| 은행 예금 | 장기,단기 채무이행 능력, 재무기반, 자산 분산, 경제력과 기대실적, 재무제도 구조, 은행감독 정도 |
| 보험 재정 | 보험사의 상환능력, 자본시장 구조, 재무 부채의 수익 마진, 대체 유동성의 출처, 채무시장권 접근 |
| 국가규모 | 경영수준, 시장입지, 재무상의 유연성, 투명도, 규제 환경, 채무 감당능력 |
| 펀드 | 자회사나 정부의 지원, 공개 펀드 투자 대상과 정책, 펀드 운영 특징 |
| 시장리스크 | 이자율 및 선지급금 유예 리스크, 유동성, 집중도 리스크, 통화 리스크, 파생상품 |
| 경영수준 | 기업의 재정, 리스크 경영과 통제, 정보기술(IT), 작동가능 통제와 절차 규제와 내외부적 협력, 고객 서비스 |
| 기타 | 채권발행인의 계약 이행 능력, 신뢰도, 현금 흐름 보호, 유도성 지원, 자금시장 접근 |

- 무디스의 장기신용등급은 크게 투자적격 등급과 투자부적격, 즉 투기등급으로 구분됨. Baa이상은 투자 적격등급이고 Ba 이하는 투기적 등급임. 그리고 이때 평가대상 채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회사채, 지방채, 국채 등 장기채권임.
- 무디스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기호는 일정등급 범위내에서 한 등급을 3가지로 구분하는 등급세분화 방법임. 즉, Aaa, Aa, A, Baa, Ba, B, Caa, Ca의 기본등급을 다시 1, 2, 3 등급으로 세분함.

<표 13 > 단기 신용등급 범위

| | 신용등급 | 내 용 |
|--------|-----------|--------------|
| 투자적격등급 | Prime-1 | 단기채무상환 가장 확실 |
| | Prime-2 | 단기채무상환 능력 충분 |
| | Prime-3 | 단기채무상환 가능 |
| 투기적 등급 | Not Prime | |

* 단기 신용등급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채권에 적용.

* 단기신용등급은 부도확률은 예측하지만 부도 발생 시 손실의 심각성은 고려하지 않음.

<표 14> 장기 신용등급 범위

| | 신용등급 | 내 용 |
|---------|------|---|
| 투자적격 등급 | Aaa | 원리금 상환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투자위험최소 |
| | Aa1 |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나 모든 기준에서 양질의 채권 |
| | Aa2 | |
| | Aa3 | |
| | A1 | 우량한 투자조건을 갖춘 중, 상급 채권, 미래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 | A2 | |
| | A3 | |
| | Baa1 | 불황시 주의를 요하는 중급채권 |
| | Baa2 | |
| | Baa3 | |
| 투기적 등급 | Ba1 | 장래가 불확실, 투기적 채권 |
| | Ba2 | |
| | Ba3 | |
| | B1 |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B2 | |
| | B3 | |
| | Caa1 | 원리금 상환이 위험, 지급불능가능성 |
| | Caa2 | |
| | Caa3 | |
| | Ca | 지극히 투기적, 지급불능 |

- * 장기신용등급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적용.
- * 장기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확률(부도확률)과 채무불이행 발생시 손실비율을 측정.
- * 부도확률은 채무상환에 필요한 충분한 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의존

<한국의 평가결과>

- Moody's는 지난 2002년 3월 한국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으로 두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채 네차례의 전망만 수정
 - 한·미간 FTA 추진과 안보위험 완화, 양호한 재정 건전성, 거시적역여건 호조 등을 이유로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 무디스는 실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과 6

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추가 달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

<표 15> Moody's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 | | | | | | | |
|-----|----------|----------|----------|---------|----------|---------|---------|
| 종 전 | 97.11.28 | 97.12.11 | 97.12.21 | 98.2.12 | 99.12.16 | 02.3.28 | 06.4.25 |
| A1 | A3 | Baa2 | Ba1 | Baa3 | Baa2 | A3 | A3 |

자료: 재정경제부

나. S&P

<개요>

- Standard & Poor's 의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s)은 77개국 정부와 지역에서 발행되는 국내외채권(local and foreign currency debt)을 다루고 있으며, 기간에 따른 정부의 부채 상환 가능성과 그 의지를 평가한 것임.
- Sovereign 각각의 대출신용(creditworthiness)에 대해 S&P는 양적, 질적인 분석 평가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정량분석은 경제적, 재정적 성과 수치들을 합한 것이고, 정성분석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S&P의 등급이 미래의 부채 지불(debt service)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임.

<평가방법>

-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서는“하향식(Top down)”과 “상향식(bottom up)” 분석이 모두 사용됨.
 - “Top down”식 분석은 글로벌 시스템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써, 과거 경험이 한 국가의 채무불이행(sovereign defaults)의 시기와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견해임.
 - “Bottom up” 분석은 각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기반(credit fundamentals)들에 초점을 둔 것임.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은 총 8개의 개별 범주로 나누어서 이들 요소들을 차례로 고려한 것임.

- 개별 범주들은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들로서 이들은 신용 리스크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들임. 왜냐하면 경제적인 리스크는 정부의 적시 채무 상환 능력여부를 의미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그 국가의 채무 상환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임.
- 각각의 분석 범주는 가장 높은 1부터 가장 낮은 6 사이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 스코어를 조합하는 정확한 공식이 있지는 않음. 분석 변수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국가의 국내화폐부채(local currency debt)와 외환부채(foreign currency debt)의 신용 리스크 정도를 차별화 할 경우, 주요 변수가 바뀔 수도 있음.

□ S&P의 신용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바람)

<표 16> Standard & Poor's 의 신용평가 항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
| 정치 리스크 | 정부형태의 적합성, 대중 참여 정도, 지도자 승계 규칙성, 경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세계 교역과 재정 시스템의 통합, 내외적 안보 위협 |
| 경제구조 | 생활수준, 부의 분배, 시장 대 非시장 경제, 보유 자원과 다양화 정도 |
| 경제 성장 | 저축과 투자 규모와 구성, 경제성장률과 성장패턴 |
| 회계 유연성 | 전체적인 정부 역할과 예산 균형, 세계 경쟁성과 조세인상의 유연성 지출 압력 |
| 공공 부채 부담 | 정부재정 자산, 공공부채와 이자율 부담, 통화 구성과 공공부채의 구조 연금 부채, 은행, 기업, 기타 불확정 부채 |
| 물가 안정 | 가격 인플레이션 경향, 통화와 신용 성장률, 환율 정책, 중앙은행의 자치정도 |
| 지급균형 | 대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와 통화 정책, 경상수지 구조, 자본흐름 구성 |
| 대외부채와 유동성 | 대외부채의 규모, 채무상환 부담, 준비금과 기타 공공대외자산 수준과 구성 채무상환기록 |

<한국의 평가결과>

- S&P는 2006년 11월 기존의 신용등급(A)을 유지한다고 발표.
 -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수지가 견실하다는 긍정적 요인과 우발적인 위협이 높고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의 부정적인 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 S&P는 북한관련 지정학적 위협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발표했으며 확률이 적지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등급이 폭락한 것으로 하향

조정

<표 17> S&P의 한국 평가결과

| 종전 | 97.11.25 | 12.11 | 12.23 | 98.2.17 | 99.1.25 | 99.11.11 | 01.11.13 | 02.4.5 | 05.7.15 | 06.11.8 |
|-----|----------|-------|-------|---------|---------|----------|----------|--------|---------|---------|
| AAo | A- | BBB- | B+ | BB+ | BBB- | BBB | BBB+ | A- | A | A |

4. 산업경쟁력

가. UNIDO의 ITA (Industrial-cum-Technological-Advance) 지수

<개요>

- UNIDO는 2002년부터 발간되는 산업개발보고서는(Industrial Development Series) 국제적 경제 개발에 대해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향상과 이를 통한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의 형성, 실행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정책결정자, 민간 및 공공의 이해관계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 보고서는 각국의 개발 경험을 분석함은 물론, 현재의 국제적 규칙과 기준, 국가별 특수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들을 분석

<평가방법>

- 산업개발보고서는 매년 새로운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고, 새로운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옴
- 2002/2003년 보고서는 혁신과 학습이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책 결정자가 세계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의 산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발전 스코어보드를 도입.
- 2004년 보고서는 환경문제, 산업화, 남 사하라 아프리카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빈곤 퇴치에 초점.
- 2005년 보고서는 catch-up을 위한 경쟁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사의 catch-up 경험을 통한 시사점과 정책 분석들을 제안. 또한 이전 보고서들과 같이 세계 산업의 추이를 보고.
- 여섯 개의 성과지표(Six Performance Indicators) 모델은 기존의 경쟁 산업성과(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지수가 확장된 개념으로 2005년 보고서부터 도입

- CIP 지표는 제조물을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i) 일인당 제조부가가치(MVA), (ii) 일인당 제조수출, (iii) MVA에서 중급 및 고급기술 활동의 비율, (iv) 제조수출에서 중급 및 고급기술 활동의 비율의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
 - 여섯 개의 성과지표 모델은 여기에 (v)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vi)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두 가지 지표를 추가한 것
- ITA (Industry-cum-Technological-Advance) 지수는 산업과 기술의 동반적 발전이 제조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5년 보고서에 처음으로 도입
- 여섯 개의 성과지표 중 한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가 ITA 산출에 사용됨.
 - 그 중 두 가지는 “산업 발전” 지표의 산출에 사용되며, 한 국가의 경제를 산업 차원에서 평가(0-1 사이의 값을 가짐)
 - 나머지 두 가지는 “기술 발전” 지표의 산출에 사용되며, 한 국가의 경제를 기술 차원에서 평가(0-1 사이의 값을 가짐)
 -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의 상호작용은 ITA라는 새로운 지수로 평가(0-1 사이의 값을 가짐)

<한국의 평가결과>

<표 18>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별 ITA 지수

| | ITA 지수 | | 산업발전지수 | | 기술발전지수 | |
|------|--------|----|--------|----|--------|----|
| | 값 | 순위 | 값 | 순위 | 값 | 순위 |
| 싱가포르 | 0.520 | 1 | 0.620 | 6 | 0.832 | 1 |
| 일본 | 0.456 | 3 | 0.590 | 13 | 0.772 | 2 |
| 한국 | 0.439 | 4 | 0.652 | 1 | 0.674 | 7 |
| 대만 | 0.410 | 5 | 0.632 | 3 | 0.649 | 10 |
| 중국 | 0.324 | 16 | 0.631 | 4 | 0.515 | 27 |

| | | | | | | |
|------|-------|----|-------|----|-------|----|
| 홍콩 | 0.247 | 29 | 0.518 | 33 | 0.477 | 30 |
| 독일 | 0.417 | 6 | 0.589 | 14 | 0.690 | 6 |
| 미국 | 0.371 | 11 | 0.529 | 27 | 0.702 | 4 |
| 영국 | 0.353 | 14 | 0.509 | 35 | 0.694 | 5 |
| 프랑스 | 0.315 | 18 | 0.525 | 28 | 0.600 | 15 |
| 이탈리아 | 0.308 | 22 | 0.586 | 16 | 0.527 | 26 |

나. OECD의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STI) Scoreboard

<개요>

- OECD가 1995년 개발하여 격년으로 발행되는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STI) Scoreboard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식과 세계화 사이의 증대되는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국가들의 과학, 기술, 세계화 및 산업에 있어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분석틀.
 - 과학, 기술, 산업, 지식 세계화와 관련한 주요한 이슈를 평가부문별로 엮어 각 세부항목별로 국가별 성과에 대한 심화 분석을 구체화된 수치와 그래프로 제공
 - OECD의 STI 스코어보드는 전세계 추세와 국가 간 비교 자료는 제공, 그러나 국가별 순위나 상세한 국가별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음
 - 보고서는 200개가 넘는 그래프를 통해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통계 자료 및 데이터 원천에 대한 접근이 용이

<평가방법>

- 평가 부문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항목의 수는 2003년 보고서 이후 대폭 증가.
 - 2005년의 보고서는 7번째 발간물로서 평가부문과 평가항목이 대폭 추가됨.
- 대부분의 평가는 OECD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표 19> 평가부문 및 항목 수

| 2003 | | 2005 |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수 | 평가부문 | 평가항목 수 |
| 지식경제 기반의 성장 | 27 | R&D와 혁신: 지식의 창출과 확산 | 15 |
| 정보 경제 | 14 |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지식과 기술 | 10 |
| | | 특허: 지식의 보호 및 상용화 | 11 |
| | | ICT: 지식사회로의 원활유 | 17 |
| 경제 활동의 범세계 통합 | 14 | 지식의 교류와 글로벌 기업 | 12 |
| 경제구조 및 생산성 | 12 | 지식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 11 |
| | 계: 67 | | 계: 96 |

<한국의 평가결과>

□ 2005년 보고서는 과학자와 연구자의 국제 이동, 증가된 혁신의 속도, 다국적 기업의 역할 변화, 무역 경쟁력의 새로운 패턴, 정보 경제의 부상과 OECD 이외의 주요한 국가, 특히 중국의 부상 등에 새로이 초점을 맞춤.

○ 2005년 보고서는 비 OECD 국가들에도 분석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① R&D와 혁신: 지식의 창출과 확산

○ 지식에 대한 투자, 연구 활동의 자금 조달 및 성과, 혁신 시스템의 연계, 과학 및 기술 분야 논문 수 등을 평가

○ 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게 나타남.

○ 중국은 연구자의 보수가 급성장하면서, 연구개발 성과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됨.

②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지식과 기술

○ 대학 졸업자 수, R&D 담당자 수, 과학자와 박사과정 학생의 국가간 이동, 비

OECD 국가의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을 평가

- 2004년 중국의 연구자 수(862,000)는 세계 2위로, 일본(675,000)과 러시아 연방(487,000)을 앞지름.
- 총연구자 대비 여성 비중은 25-35% 수준이며, 여성 참여는 산업 부문의 경우 미달됨.
- 인구이동 추이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의 네 군대의 목적지로 수렴.

③ 특허: 지식의 보호 및 상용화

- 유럽 특허청에 대한 특허 신청건수, ICT와 생물공학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특허 건수, 특허 활동에 대한 국제 협력, 국가 간 특허 소유 등을 평가
- 특허 활동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5개국이 차지한 비중은 83.6%에 육박하여, 고도로 집중된 상태임.
- 특허 실적의 전체 급증에는 생명공학과 ICT가 평균 이상으로 기여함.
- OECD 비회원국 중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연방은 국제화 진전도가 대부분의 OECD 국을 앞선 수준임.
- 국내 발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외국 발명에 대한 국내 소유, 외국인과 공동 발명에 의한 특허의 세 가지 사항에 기초하면 영국이 가장 국제화된 국가임.

④ ICT: 지식사회로의 윤택유

- 정보 경제를 위한 자원과 인프라, ICT 산업에 대한 투자, 인터넷의 활용 및 보급과 전자 사업의 발전, ICT 분야의 경제 활동과 국제 무역에의 기여 등을 평가
- OECD 국가들의 기업 부가가치 대비 ICT 비중은 10%로, 이 비율은 핀란드가 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일랜드로 13%임.
- OECD 국가들에서 전체 기업의 1/4은 구매 목적, 1/8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이동 전화와 브로드밴드의 확대로 고정전화 회선 수는 감축세를 보임. 2004년 말 OECD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18억 명으로 2003년 이후 34,000,000 명이 늘어남. 2004년 아이슬란드 가구의 86%가 인터넷 접속 가능

⑤ 지식의 교류와 글로벌 기업

- 국제 무역과 투자의 추세, 외국인 기업의 역할, 다국적 기업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 경제적 통합과 기술 확산을 평가
- 1995-2001년 외국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두드러짐.
- 투자유치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있어 체코와 스웨덴은 외국 기업의 기여도가 최고 수준을 보임.

⑥ 지식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수준의 국가별 비교, 생산성과 산업성과, 기술과 지식 집약적 산업의 중요성 증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 의존성, 제조업의 변화 등을 평가
- 1995-2003년에 ICT 투자는 GDP 성장률에 0.35-0.9% 정도로 기여했으며, ICT 자본의 축매제 역할은 호주, 스웨덴,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지식기반 시장 및 서비스의 비중은 계속 확장 추세이며 현재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의 20% 이상을 차지.
-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고도기술산업 비중은 아일랜드의 경우 50%를 웃돌았고, 스위스, 한국, 미국,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의 경우 30%를 상회.

5. 기업경쟁력

가. WB - Doing Business Indicator

<개요>

-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각 국가별 사업 규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비용, 그리고 투자,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가로막는 특수한 규제들을 분석하는 doing business indicator를 개발하여 발표.
 - o 총 155개국을 대상으로, 10개의 평가부문과 39개의 세부 평가항목에 걸친 분석을 제공.
- Doing Business Indicator는 각 국가의 지역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법과 규제와 관련한 사실적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응답자들로부터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 o 모든 나라에 같은 가정과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임.
 - o 데이터들은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 원천 또한 규명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개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Doing Business Indicator는 한계점을 각 국가별로 시장에 대한 상이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음.
 - o 인프라 및 서비스의 , 안보 및 범죄문제, 거시경제 환경 및 각종 제도적 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음

<평가방법>

- Doing Business Indicator는 정부의 규제와 그 규제가 기업, 특히 국내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 Doing Business 데이터는 각국의 법 및 규정에 대한 연구, 3000명이 넘는 각 지역의 정부 공무원,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또한 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됨.

- o 평가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됨.
- o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10가지의 평가부문에 대한 각국의 백분위 순위를 단순 평균하여 155개국의 순위를 매김⁴⁾.

□ 평가부문의 수는 2004년 5개(사업의 시작, 인력의 고용과 해고, 계약의 이행, 신용의 획득 및 사업의 종료), 2005년 7개(자산의 등록 및 투자자 보호 부문이 추가)에서 2006년 10개 부문(면허와 허가, 세금의 납부 및 국제 거래 부문이 추가)으로 확장.

- o 10가지의 평가부문은 또한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짐.

<표 20> 10개의 평가부문과 세부 평가항목

| 평가부문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수 |
|--------------|--|-----------|
| ① 사업의 시작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및 최소한의 자본 | 4 |
| ② 허가 | 각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 3 |
| ③ 인력의 고용과 해고 | 고용의 어려움 지표, 근무시간의 경직성 지표, 해고의 어려움 지표, 고용비용 및 해고비용 | 6 |
| ④ 자산의 등록 | 사업목적의 부동산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 3 |
| ⑤ 신용의 획득 | 법적 권리의 강도 지표, 신용정보의 깊이 지표 | 4 |
| ⑥ 투자자 보호 | 공시의 정도, 이사회 책임의 정도, 주주 소송의 용이성 관련 지표들 | 4 |
| ⑦ 세금의 납부 | 납부되는 세금의 가짓수, 소득신고서 작성에 연간 소요되는 시간, 경상소득 대비 총 납부 세금 비율 | 3 |
| ⑧ 국제 거래 |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서명의 수 및 소요 시간 | 6 |
| ⑨ 계약의 이행 | 채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 3 |

4) 순위산출 실패: 첫 번째 평가부문인 "사업의 시작(Starting a business)"의 순위는 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및 자본잉여금 요구사항에 대한 백분위(percentile) 순위의 평균치로서 산출됨. 이러한 네 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아이슬랜드가 각각 일곱 번째, 첫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48번째 백분위 순위를 보였다면, 아이슬랜드의 "사업의 시작" 평가부문의 순위는 평균적으로 16위가 됨. 순위가 높을수록 관련 규제가 단순하고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모든 평가 부문에 대한 종합순위도 이와 같이 각 평가부문 순위의 단순한 산술평균을 통해 산출됨. (아이슬랜드의 경우 모든 평가부문에 대한 종합적 백분위 순위는 22%이고, 이는 순위가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12위가 됨) (참조: Doing Business in 2006: Creating Jobs, p. 91)

| | | |
|----------|---------------------------------|---|
| ⑩ 사업의 종료 | 사업의 종료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회생률 | 3 |
|----------|---------------------------------|---|

자료: Doing Business Database

<한국의 평가결과>

- 2005년 1월 자료에 기초한 2006년도의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업의 시작과 자산의 등록 부분의 경우 관련 절차 수는 155개 국가 평균보다 많지만 소요 시간과 비용은 낮게 나타남.
- 허가, 세금의 납부, 국제 거래, 계약의 이행, 사업의 종료 부분의 경우 155개국 평균보다 규제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의 고용과 해고의 경우 경직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우리나라의 항목별 수치

| 평가부문 | 세부 평가항목 | 2003 | 2004 | 2005 |
|--------------|--------------------------|--------------|--------------|--------------|
| ① 사업의 시작 | 관련 절차의 수(개) | 12(9.9) | 12(9.7) | 12(9.5) |
| | 소요시간(일) | 33(53.9) | 23(50.3) | 23(47.5) |
| | 소요 비용(1인당 국민소득대비 비율: %) | 17.8(88.7) | 15.1(79.1) | 15.2(77.7) |
| | 최소소요자본(1인당 국민소득대비 비율: %) | 347.7(198.6) | 332.0(187.3) | 308.8(193.6) |
| ② 허가 | 관련 절차의 수(개) | - | - | 14(18.3) |
| | 소요시간(일) | - | - | 60(209.0) |
| | 소요 비용(1인당 소득대비 비율: %) | - | - | 232.6(646.2) |
| ③ 인력의 고용과 해고 | 고용의 어려움 지표(0-100) | - | 44(35.7) | 44(36.7) |
| | 근무시간의 경직성 지표(0-100) | - | 60(51.2) | 60(51.1) |
| | 해고의 어려움 지표(0-100) | - | 30(35.9) | 30(35.9) |
| | 고용의 경직성 지표(0-100) | - | 45(41.1) | 45(41.2) |
| | 고용비용(급여에 대한 비율: %) | - | - | 17(16.3) |
| | 해고비용(급여지급 주 수: weeks) | - | 90(49.5) | 90(49.3) |
| ④ 자산의 등록 | 관련 절차의 수(개) | - | 7(6.2) | 7(6.19) |
| | 소요시간(일) | - | 11(84.5) | 11(85.6) |
| | 비용(자산가치에 대한 비율: %) | - | 6.3(6.8) | 6.3(6.6) |

| | | | | |
|----------|--|------------|-------------|------------|
| ⑤ 신용의 획득 | 법적권리 지표(0-10) | - | - | 6(4.9) |
| | 신용정보 지표(0-6) | 5(2.5) | 5(2.5) | 5(2.7) |
| | 공공기관에 신용등록된 개인 또는 기업 수(성인 인구에 대한 비율: %) | 0.0(1.6) | 0.0(2.9) | 0.0(3.6) |
| | 사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개인 또는 기업 수(성인 인구에 대한 비율: %) | 53.0(12.0) | 100.0(15.6) | 80.7(16.8) |
| ⑥ 투자자 보호 | 공시정도 지표(0-10) | - | - | 7(5.1) |
| | 이사회 책임의 정도 지표(0-10) | - | - | 2(4.5) |
| | 주주 소송의 용이성 지표(0-10) | - | - | 5(5.6) |
| | 투자자 보호 지표(0-10) | - | - | 4.7(5.1) |
| ⑦ 세금의 납부 | 납부되는 세금의 가짓수(개) | - | - | 26(35.3) |
| | 소득신고서 작성시간(시간) | - | - | 290(354.3) |
| | 총 납부 세금(경상소득에 대한 비율: %) | - | - | 29.6(46.5) |
| ⑧ 국제 거래 | 수출을 위한 자료 수(개) | - | - | 5(7.4) |
| | 수출을 위한 서명 수(개) | - | - | 3(11.0) |
| | 수출 소요시간(일) | - | - | 12(31.9) |
| | 수입을 위한 자료 수(개) | - | - | 8(10.8) |
| | 수입을 위한 서명 수(개) | - | - | 5(16.5) |
| | 수입 소요시간(일) | - | - | 12(39.9) |
| ⑨ 계약의 이행 | 관련 절차의 수(개) | 29(31.7) | 29(31.7) | 29(31.5) |
| | 소요시간(일) | 75(406.6) | 75(400.0) | 75(394.4) |
| | 소요비용(부채 가치에 대한 비율: %) | 5.3(30.9) | 5.3(30.6) | 5.4(30.6) |
| ⑩ 사업의 종료 | 소요시간(년) | - | - | 1.5(3.2) |
| | 소요비용(자산가치에 대한 비율: %) | - | - | 4(16.4) |
| | 회수율(1달러당 센트) | - | - | 81.7(31.4) |
| 종합순위 | | | | 27 |

자료: <http://www.doingbusiness.org/CustomQuery/>

() 안의 수치는 155개국의 평균치임.

□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서는 싱가포르(2위), 홍콩(7위), 일본(10위), 한국(27위),

대만(35위), 중국(91위) 순으로 기업관련 규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아시아 경쟁국 및 주요 선진국의 2005년 부문별 순위

| 평가부문 | 국가 | | | | | | | | | | |
|--------------|-----|----|-----|----|------|-----|----|----|-----|-----|------|
| | 한국 | 일본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 ① 사업의 시작 | 97 | 81 | 126 | 6 | 5 | 79 | 3 | 9 | 47 | 13 | 45 |
| ② 허가 | 25 | 5 | 136 | 77 | 7 | 126 | 17 | 29 | 20 | 23 | 93 |
| ③ 인력의 고용과 해고 | 105 | 20 | 87 | 3 | 7 | 108 | 6 | 15 | 131 | 142 | 138 |
| ④ 자산의 등록 | 64 | 36 | 24 | 70 | 14 | 26 | 12 | 23 | 33 | 144 | 48 |
| ⑤ 신용의 획득 | 25 | 18 | 113 | 2 | 8 | 58 | 15 | 1 | 5 | 115 | 51 |
| ⑥ 투자자 보호 | 87 | 14 | 100 | 4 | 2 | 65 | 7 | 9 | 57 | 56 | 86 |
| ⑦ 세금의 납부 | 44 | 50 | 119 | 2 | 9 | 32 | 30 | 84 | 54 | 35 | 102 |
| ⑧ 국제 거래 | 16 | 12 | 48 | 26 | 6 | 54 | 17 | 21 | 3 | 44 | 90 |
| ⑨ 계약의 이행 | 18 | 3 | 47 | 16 | 11 | 27 | 10 | 30 | 25 | 13 | 76 |
| ⑩ 사업의 종료 | 13 | 1 | 59 | 14 | 2 | 5 | 17 | 10 | 30 | 32 | 40 |
| 종합순위 | 27 | 10 | 91 | 7 | 2 | 35 | 3 | 9 | 19 | 44 | 70 |

자료: www.doingbusiness.org

나. 세계은행의 Enterprise Surveys

<개요>

- 세계은행은 2002년도부터 각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하며, 고용의 창출이나 혁신 및 생산성의 증대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Enterprise Surveys를 실시.
 - o 5만여 개 기업에 대한 서베이에 근거한 71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 o 국가별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
- Enterprise Surveys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제약의 중요도를 알 수 있으므로 한 국가의 미시적, 제도적 조건과 이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유용한 분석들이 됨.
 - o 150개가 넘는 지표에 대한 수치를 국가별, 연도별, 주제별로 선택하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제공.

- 국가별 자료를 기업크기, 수출/비수출기업, 외국/국내기업, 부문별로 나누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각 평가지표별 자료를 제공하지만 부문별 평균치나 전체 평균치 또는 순위를 제공하지 않아 한 눈에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계은행은 Enterprise Survey와 Doing Business 등의 결과를 통해 국가별로 투자환경평가(Investment Climate Assessments) 보고서를 발간, 200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여,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등의 개도국 38개국에 대한 보고서가 이용가능

<평가방법>

- Enterprise Surveys는 기업들이 인식하는 성장에 대한 장애물, 고용과 생산성의 증대에 대한 여러 제약들의 상대적 중요도, 한 국가의 투자환경이 국제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서베이는 기업의 경영진, 회계사,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핵심 서베이가 그 중심이 됨. 국가별 필요성에 따라 특수한 모듈로 서베이가 확장되기도 함.
- 핵심 서베이는 기업이 처한 주요한 제약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부분과 회계사와 인사담당자에 의한 생산성의 측정부분으로 구성됨
- 서베이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계층화된 랜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며 부문별 하위 샘플은 다른 나라의 같은 부문의 샘플과 비교됨.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비중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므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샘플에 많이 포함시킴. 국가별 샘플의 크기는 250-1500개 가량임
- 투자환경의 분석을 위해 11개의 표준화된 주요 주제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 11가지의 평가부문은 총 3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지며, 150개가 넘는 평가지표를 포함.

<표 23> 11개의 평가부문과 세부 평가항목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수 |
|---------------------------|--|--------|
| ① 관료제 (Bureaucracy) | 정부 규제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소요하는 시간(%) | 2 |
|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내용을 해석할 때 경영진들이 보이는 일관성/예측가능성(%) | |
| ② 부패 (Corruption) | 기업이 사업을 위해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 및 비공식적 지출(연간 매출액에 대한 비율: %) | 3 |
| | 기업이 세금조사자에게 선물을 주는 비율(%) | |
| |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선물의 액수(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 | |
| ③ 사법제도 (Courts) |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 3 |
| | 분쟁 해결을 위해 걸리는 시간(주) | |
| | 소비자가 지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분쟁해결정도(%) | |
| ④ 범죄 (Crime) | 보안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매출액에 대한 비율: %) | 2 |
| | 절도, 약탈, 기물파괴 행위, 방화로 인한 손실액(매출액에 대한 비율: %) | |
| ⑤ 금융 (Finance) | 내부적 원천으로부터의 신규 투자자금조달(%) | 6 |
| | 은행으로부터의 신규 투자자금조달(%) | |
| | 가족, 친지 등 비공식적 수단으로부터의 신규 투자자금조달(%) | |
| | 공급자나 고객으로부터 운전자본이 조달되는 정도(%) | |
| | 대출을 위해 요구되는 담보액수(대출금액에 대한 비율: %) | |
| | 담보를 요구하는 대출(%) | |
| ⑥ 정보보고 (Informality) | 세금관련 목적으로 기업이 보고하는 매출액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1 |
| ⑦ 인프라 (Infrastructure) | 전기 연결의 지연 일수(일) | 6 |
| | 전기공급이 정지된 일수(일) | |
| | 전기공급 정지로 인한 손해(매출액에 대한 비율: %) | |
| | 용수 공급의 중단(일) | |
| | 전화선 연결의 지연(일) | |
| | 고객 및 공급자와의 상호작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 | |
| ⑧ 혁신 (Innovation) | ISO 인증을 보유한 기업(%) | 2 |
| | R&D 지출(매출액에 대한 비율: %) | |
| ⑨ 고용 (Jobs) | 공식적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 3 |
| | 작년에 공식적 훈련을 받은 정규직 숙련 노동자(%) | |
| | 과거 3년 간 고용증가율(%) | |
| ⑩ 세금 (Tax) | 세금관련 공무원과의 접촉을 위해 기업이 소요하는 시간(일) | 1 |
| ⑪ 무역 | 수출품의 출발(항구 또는 공항)에서 배송까지 소요되는 | 5 |

| | | |
|---------|--------------------------------------|--|
| (Trade) | 평균시간(일) | |
| | 수출품의 출발에서 배송까지 소요되는 최장시간(일) | |
| | 수입품이 도착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일) | |
| | 수입품이 도착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최장시간(일) | |
| |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기업(%) | |

자료: Enterprise Surveys 웹사이트 (www.enterprisesurveys.org)

<한국의 평가결과>

-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기업들이 인식하는 10개의 가장 심각한 제약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정책의 불안정성, 반경쟁적 관행, 자금조달비용, 높은 세금, 세금행정, 부패, 전기, 교통, 사업관련 허가 순으로 나타남.
- 11개의 평가부문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패와 인프라 관련 수치는 전체(71개국) 및 동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혁신 부문에서 R&D 지출비중, 고용 부문에서 공식적 훈련의 제공과 고용창출이 미흡하며 무역 부문에서 수출 및 수입 시 소요시간이 지역 및 전체 평균에 대해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세계은행-기업지배구조 보고서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개요>

- IMF의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ROS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이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따라 작성하는 각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각국의 상장기업에 대한 법/규제, 감사 체계 및 관행을 국제적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조사 및 분석.
- ROSC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
- 2000년부터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한국 등 37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42개 보고서가 발간.

- 세계은행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일관된 모형(template)을 적용·평가하고 각 국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향상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인덱스를 제공, 정책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평가방법>

- 국가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OECD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⁵⁾에 기초한 평가모형에 의해 이루어짐.
 - OECD 원칙과 이에 따른 평가모형은 주로 상장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며, 다음의 여섯 가지의 부문으로 이루어짐: (i)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확립, (ii) 주주의 권리와 주요한 소유권 기능, (iii)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iv)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v) 공시와 투명성, (vi) 이사회의 책임
 - 각국은 ROSC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세계은행에 요청을 하면, 세계은행은 각국의 컨설턴트에게 설문지 형식의 템플릿을 작성하도록 함. 설문지가 작성되면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이 그 국가를 방문하여 공무원, 시장 참여자, 투자자 등을 직접 만나보고 평가보고서를 작성.
 -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감사 체계 및 관행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한국의 평가결과>

- 2003년 9월에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발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가 강화되었으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주식 시장이 덜 발달됨.

5)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파산 이후 OECD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재계 대표들, 세계은행, IMF, BIS 등에 의해 채택된 기업지배구조 원칙. 1999년에 채택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으로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에 의해 사용됨. 또한, 이 원칙은 Financial Stability Forum의 12개의 Core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 중의 하나로 채택됨. World Bank와 IMF가 실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이 원칙에 기초한 템플릿에 의해 이루어짐.

- 회계와 감사 기준과 관행, 기준 제정과 감사 제도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고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회계 기준과 회계/감사 관행의 발전이 좀더 요구됨.
- 규모가 큰 상장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되었으나 아직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못함.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지식 제고가 필요.
- 재벌 기업들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인센티브의 변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소수주주의 권리와 주주의 권한 행사에 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보다 많은 발전이 요구됨. 이사의 선임에 관한 소수주주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집중투표제의 실시 등이 권고되며 독립사외이사의 선임 프로세스에 개선이 요구됨.
- 형식적 기업지배구조 규칙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지만 실질적 관행은 뒤쳐짐. 기업문화와 관행의 개선과 효율적 실행이 중요시됨.

<표 24>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른 평가모형 및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

| 평가부문 | 하위 평가부문 | 평가 문항 수 | 평가 결과* |
|------------------------|---|---------|--------|
| ①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확립 | A. 자본시장 개관 | 16 | - |
| | B. 법적/규제적 환경 | 10 | - |
| | C. 기업지배구조 감독과 집행(당국간 책임의 분담) | 20 | - |
| | D. 증권시장의 규제자, 정직성 및 자원 | | |
| ② 주주의 권리와 주요한 소유권 기능 | A. 주주의 기본적 권리: ㉠ 소유권의 안전한 등록, ㉡ 지분의 양도, ㉢ 기업에 대한 관련성 있고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적시에 획득, ㉣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 ㉤ 이사회 멤버의 선출, ㉥ 기업 이익의 공유 | 26 | ● |
| | B. 기본적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정관의 변경, ㉧ 주식의 추가 발행, ㉨ 모든 자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한 사건 | 19 | ◐ |
| | C.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 ㉩ 주주총회 일시, 장소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의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리, ㉫ 이사회 멤버의 선출과 같은 중대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부채중 투표의 권리 | 23 | ● |
| | D.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불평등하게 증가시키는 자본 구조의 공개 | 11 | ● |
| | E. 기업지배권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 기업지배권의 획득과 인수합병 등 특수거래에 대한 규칙과 정보의 제공, | 21 | ● |

| | | | |
|-----------------------|--|----|---|
| | ④ 경영진의 M&A 방어 전략 남용 방지 | | |
| | F.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지배권 행사: ㉞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배구조와 투표정책을 공개해야 함, ㉟ 기관투자자들은 주요 지배권과 관련한 이해관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개해야 함 | 5 | ☉ |
| | G. 주주들이 기본적 주주 권리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을 받을 권리 | 1 | - |
| ③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 A. 모든 주주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㉞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의 매수 전에 모든 등급의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㉟ 소수주주들은 지배주주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㊱ 보관기관이나 명의주주에 의한 투표는 실질주주와 합의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함, ㊲ 해외 투표에 대한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함, ㊳ 주주 총회의 투표 절차가 용이하고 공정해야 함 | 21 | ● |
| | B. 내부자 거래나 자기거래의 방지 | 10 | ☉ |
| | C. 이사회 멤버나 최고경영진은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래나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함. | 8 | ☉ |
| ④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 A. 법이나 상호 협의에 의한 이해관계자 권리의 존중 | 5 | ☉ |
| | B. 이해관계자들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 1 | ☉ |
| | C.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 시스템 | 2 | ● |
| | D.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참여할 경우, 그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 2 | ☉ |
| | E. 이해관계자들이 불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이사회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 1 | - |
| | F.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파산 프레임워크와 채권자 권리의 효율적 행사 | 5 | - |
| ⑤ 공시와 투명성 | A. 공시가 포함해야 하는 정보: ㉞ 기업의 재무 및 운영 정보, ㉟ 기업목표, ㊱ 지배권과 투표권 정보, ㊲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정책, 이사회 멤버의 자격과 선출과정, ㊳ 관계자간 거래, ㊴ 위험요소, ㊵ 피고용인과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주요한 사건, ㊶ 지배구조와 정책 | 22 | ● |
| | B. 높은 재무/회계 및 비재무적 공시 기준에 따른 정보 공시 | 1 | ☉ |
| | C. 독립적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에 의한 연간 감사 | 14 | ● |
| | D. 외부감사인이 주주와 기업에 대해 가지는 전문가적 감사 실시의 의무 | 13 | - |
| | E. 정보공개에의 창구가 사용자들에게 적시에 동등하며 | | ☉ |

| | | | |
|-----------|---|--------|---|
| | 비용효율적인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의무 | | |
| | F.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를 애널리스트, 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의 분석 및 조언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통해 보완 | 2 | - |
| ⑥ 이사회의 책임 | A.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 | 11 | ● |
| | B. 이사회가 여러 주주집단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칠 사항을 결정할 경우, 모든 주주 집단을 공정하게 대할 의무 | 6 | ◐ |
| | C.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할 의무 | 5 | ◐ |
| | D. 이사회의 기능: ㉠ 기업 전략, 사업 계획, 위험 정책, 연간 예산에 대한 심사, 성과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효율성 모니터링, ㉢ 최고경영진의 선출, 보수 지급 및 교체 관련 의사결정, ㉣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보수와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의 연계, ㉤ 공식적이며 투명한 이사회 선임 프로세스, ㉥ 기업자산의 남용과 관계자간 거래 등 이사회,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감사의 독립성과 위험관리 시스템, 법과 기준 준수를 포함한 재무/회계 보고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 공시와 의사소통 프로세스의 감시 | 18 | ● |
| | E. 기업사건에 대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 12 | ◐ |
| | F. 정확하며 관련성과 적시성을 가진 정보에의 접근 | 2 | ◐ |
| | | 계: 316 | |

* 주) ◐: 부분적 준수(partially observed) ◑: 준수(observed) ●: 대부분 준수(largely observed)

6) 여기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주주를 제외한 피고용인, 노동조합, 채권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을 뜻함.

6. 종합평가기관

가. IMD

<개요>

-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을 발간, 26개국의 OECD회원국과 기타 신흥 20여 개국 순위를 산정.
 - 초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하여 순위를 발표하다가 94년 이후에는 통합순위를 발표.
 - 2001년부터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가 2006년에는 조사대상국을 기존 국가 외에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등 지역경제를 포함시킨 총 61개로 확대
-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환경능력)으로 정의⁸⁾.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에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음.⁹⁾

<평가방법>

7) 독일의 바이에른,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프랑스의 론알프스,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브라질의 상파울루, 중국의 저장성 등이 포함.

8)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9) 2000년부터 IMD는 FDI 대상국으로서 한 국가의 입지매력도를 나타내는 입지매력도 순위(Location Attraction Ranking)를 종합경쟁력 및 부문별경쟁력 순위와 별도로 산출·공표하고 있는데, 이는 IMD가 국가경쟁력의 기업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지매력도는 제조업, 연구개발, 서비스 및 경영의 3개활동으로 나누어 산정.

- IMD는 일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 각 분야를 다시 5대 부문으로 나누어 총 20개 부문을 분석함
- 20개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은 총 314개 항목으로 이 중 경성자료(hard data)는 201개 항목, 설문자료(survey)는 113개 항목임
 - 이 중, 설문자료 113개 항목은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 반면, 경성자료는 201개 항목 중에서 128개 항목만이 평가에 반영되며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지표로 활용함
 - 경성자료는 통계치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수인 반면, 설문자료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인 기업가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서에 근거한 지수임

<표 25> 전체 구성(종합순위, 4대 분야, 20개 부문, 314개 항목)

| 종합순위 | | | | | |
|--------------------|---------|--------|--------------------|----------|--------|
| 경제운영성과분야 | | | 정부행정효율분야 | | |
| 부문별 (77개 항목) | 국내경제 | 28개 항목 | 부문별(7 3개 항목) | 공공재정 | 11개 항목 |
| | 국제무역 | 20개 항목 | | 재정정책 | 15개 항목 |
| | 국제투자 | 17개 항목 | | 제도적 여건 | 16개 항목 |
| | 고용 | 8개 항목 | | 기업관련법 | 20개 항목 |
| | 가격 | 4개 항목 | | 사회적 제반여건 | 11개 항목 |
| 기업경영효율분야 | | | 발전인프라분야 | | |
| 부문별 (69개 항목) | 생산성·효율성 | 9개 항목 | 부문별(9 5개 항목) | 기본인프라 | 22개 항목 |
| | 노동시장 | 21개 항목 | | 기술인프라 | 20개 항목 |
| | 금융 | 21개 항목 | | 과학인프라 | 22개 항목 |
| | 경영활동 | 11개 항목 | | 보건 및 환경 | 17개 항목 |
| | 행태·가치 | 7개 항목 | | 교육 | 14개 항목 |
| 총 314개 항목 | | | | | |

나. WEF

<평가체제>

-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매년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간¹⁰⁾
 - WEF는 1976년부터 ‘경쟁력 보고서(Competitiveness Report)’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쟁력 관련 평가를 실시
 -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WCY(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발간하였고
 - 1996년부터는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발간하면서 독립적인 평가를 시작
- WEF의 경쟁력 평가지수는 2006년 현재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와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이원평가체제임.
 - 1996~97년에는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를 통해 단일종합순위를 발표
 - 1998년부터는 단기적인 거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경쟁력 지수인 미시경쟁력 지수(Micro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dex: MICI)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CI에 보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경쟁력의 거시 성장론적 측면과 미시 생산적 측면을 구분하여 종합경쟁력에 접근하고 있음
 - 이어 2000년부터는 MICI의 명칭을 경상경쟁력 지수(Current Competitiveness Index, CCI)로 바꾸는 한편 종래의 CI를 폐지하고 이를 새롭게 개발한 성장잠재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GCI)로 변경하였고
 - 2003년부터는 다시 CCI(기존 MICI)¹¹⁾의 명칭을 현재의 Business CI로 변경했으며, 2006년도에는 기존 성장잠재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GCI)를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10) IMD는 “기업의 사업 환경에 초점을 맞춰 국가경쟁력을 파악”

11) 현재의 소득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미시적 기반을 측정하기 위한 것

Index, GCI)로 변경

<표 26> WEF의 경쟁력 보고서 · 경쟁력 지수

| | 경쟁력보고서 | 경쟁력 지수 | |
|-----------|---|-----------|---------------------|
| 1976 | 경쟁력 평가 시작 Competitiveness Report | | |
| 1987-1995 | IMD와 공동 발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 |
| 1996 | 단독 발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CI | |
| 1998 | | Growth CI | Micro Industrial CI |
| 2000 | | Growth CI | Current CI |
| 2003 | | Growth CI | Business CI |
| 2006 | | Global CI | Business CI |

<평가요소>

- WEF는 평가체제 변화와 함께 평가요소도 지속적으로 변화
 - WEF의 평가요소의 구성은 1999년까지는 개방성, 정부, 금융, 기업경영, 사회간접자본, 기술, 노동 등 8 개 부문으로 당시의 IMD와 유사한 구성이었음
 - 이후 2000년에는 기업특성, 국민경제성과, 정부 및 재정 등 12개 부문으로, 2001년에는 국민경제성과, 거시경제지표, 기술혁신 및 확산 등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요소를 달리 했음.
 - 2005년에는 거시경제 환경, 기술력, 공공기관 등 3개 분야로 평가요소를 나누고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표 27> WEF의 부문별 평가 구성요소 변화(GCI기준)

| 1996-1999 | 2000 | 2001 | 2005 | 2006 |
|---|--|--|---|--|
| 개방 정부 금융 기업경영 제도 인프라 기술 노동 | 대외개방 국민경제성과 정부 및 재정 금융 기업특성 기업활동 및 전략 국내 경쟁 환경정책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기술 | 국민경제 성과 거시경제지표 계약 및 법률 부패 국내시장 경쟁도 기업 활동 및 전략 집단발달 환경정책 기술혁신 및 확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 거시경제안전성 국가신용등급 재정 비효율성 계약 및 사법제도 부패지수 기업혁신 기술이전 정보통신기술 |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시장효율성 과학기술수준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
| 161개 | 180개 | 174개 | 35개 | 90개 |

□ 2006년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2005년 35개 항목(3대 분야, 8개 부문)을 90개 항목(3대 분야 9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

○ WEF의 경쟁력 평가요소는 기본요인, 효율성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로 구분되고, 각 분야는 2-4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되어 총 9개 부문 90개 항목(통계 24개, 설문 66개)으로 구성

- 통계자료는 각국의 파트너 기관을 통하지 않고 IMF, World Bank, UN, ITU,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수집·활용
- 설문자료의 경우 세계 각국의 파트너 기관이 WE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의 CE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우리나라의 경우, '06년 총 800개의 설문 중 97개만 응답)

<표 28 > WEF의 2006년도 평가 요소

| 종합순위 | | |
|---------------|-------------|---|
| 1. 기본요인 | | |
| | 제도적요인 | 공공부문, 민간부문 |
| | 인프라 | |
| | 거시경제 | |
| | 보건 및 초등교육 | 보건, 초등교육 |
| 2. 효율성증진요인 | | |
|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 고등교육의 양, 고등교육의 질, 직장훈련 |
| | 시장효율성 | 상품시장의 왜곡, 경쟁 및 규모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개방성 |
| | 과학기술수준 | |
|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 | |
| | 기업활동 성숙도 | 기업네트워크의 질, 기업경영·전략의 성숙도 |
| | 기업혁신 | |

<종합순위 산정절차>

- WEF의 평가방법은 우선 국가규모¹²⁾를 통제한 이후 항목별로 점수 및 순위를 산출한 후 9개 부문별로 해당 항목 평가결과를 표준화하여 합산
 - 3대 분야별 점수 및 순위는 각 2-4개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종합국가 순위는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3대 분야별 가중치를 달리 하여 합산한 후 125개 전체 국가별 순위를 결정

<표 29> WEF의 평가요소 가중치

12) WEF의 평가대상 125개국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국가발전단계별 다른 가중치를 부여

| 구 분 | GDP(per Capita) (US\$) | 기본요인 | 생산성증진 | 기업혁신 및 성숙도 |
|---------------------|---------------------------|--------|--------|---------------|
| 1단계: 생산요소 중심단계 | <2,000 | 50% | 40% | 10% |
| 중간단계(1단계 → 2단계) | 2,000-3,000 | 50~40% | 40~50% | 10% |
| 2단계: 효율성 중심단계 | 3,000-9,000 | 40% | 50% | 10% |
| 중간단계(2단계 → 3단계)* | 9,000-17,000 | 40~30% | 50~40% | 10~30% |
| 3단계: 혁신 중심단계 | > 17,000 | 30% | 40% | 30% |

* 우리나라는 효율성과 혁신의 중간단계에 해당

제 3장 결 론

1. 결과 요약

- 국가경쟁력 내지 관련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기관은 매우 다양.
- 통일된 국가경쟁력의 개념 정립의 어려움, 평가기준항목 선정의 어려움, 데이터 시점과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가변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마다 나름대로의 평가목적에 적절한 상이한 평가방법, 평가항목을 채택하고 있음.
 - IMD나 WEF는 국가경쟁력을 중요시하는 기관으로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나 제도, 정책 등을 중요시하고 헤리티지나 CATO 등은 오직 경제적 자유도만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 개입적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보장과 시장경제 존중을 더 중요시함.
 - 이밖에도 PWC 와 국제투명성위원회(TI) 등은 제도나 정책의 불투명성이나 부패를, 그리고 Moody's나 S&P는 국가의 신용상태 및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각 평가기관들은 평가항목의 수와 평가항목의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가항목의 수는 평가기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을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평가항목의 특성은 평가기관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구성.
 -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IMD와 WEF는 각각 315개 변수와 95여개 변수를 가진 반면,
 -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적 자유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50여개, 투명성이나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PWC나 국제투명성위원회(TI) 등은 10여개의 변수만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
- 자료 구성에 있어서도 IMD와 WEF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가기관들은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포함하여 평가¹³⁾하고 있으나 CATO, A.T Kearney의 세계화지수, 일본경제연구센터 등은 통계자료만을, 세계은행의 Enterprise surveys, 맥킨지 등은 설문조사만을 활용하고 있음.

13) 이외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행하는 기구 중에, 맥킨지(McKinsey) 등은 순수하게 설문데이터에만, 일본경제연구센터 등은 경성데이터에만 의존.

<표 30> 국가경쟁력 내지 거시 경제 환경에 관한 주요 국제비교평가 현황

| | 기관 | 보고서명 | 주요 평가요소(2004년 기준) | 비고 |
|--------------------|----------------------|--|--|------------------------------|
| 부패 및 투명 성 | PWC | The Opacity Index (불투명 지수) | 부패·법적 제도의 투명성, 경제정책의 투명성,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규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및 자의성 | 35개국 대상 |
| | T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부조달사업에서의 리베이트, 공적 자 금의 횡령 등 | 180여개국 대상 |
| | | Bribe Payers Index | | |
| 경 제 자 유 도 | CATO |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정부규모, 경제구조/시장, 통화정책/가격안정, 대체통화사용정도, 법률 구조/재산권, 대외무역, 금융거래 | 120 여개국 대상 |
| | 헤리티지 | Index of Economic Freedom | 무역정책, 한국의 재정부담, 정부의 경제간섭, 통화정책, 외국인투자, 금융, 임금/물가, 재산권보호, 규제, 암시장 | 160여개국 대상 |
| | A.T Kearney | FDI Confidence Index | 경제적 통합, 인적교류, 기술, 국제정치 참여 수준 등 | 다국적기업CEO 및 FDI담당자 |
| | | Globalization Index | 경제적 통합, 인적교류, 기술, 국제정치 참여 | |
| 신 용 평 가 | Moody's | Credit Rating | 부채, 채무자, 은행예금, 보험제정, 국가규모, 펀드, 시장리스크, 경영 수준 등 | |
| | S&P | Sovereign credit ratings | 정치 리스크, 경제구조, 경제성장, 공공부채부담, 물가안정, 지급균형 | |
| 기 업 경 쟁 | World Bank | Doing Business Index | 사업의 시작, 허가, 인력의 고용과 해고, 자산의 등록, 신용 획득, 투자자 보호, 세금의 납부, 국제거래, 계약의 이행, 사업의 종료 | 10개 부문 40여개 평가항목 |
| | | Enterprise Surveys | 관료제, 부패, 사법제도, 범죄, 금융, 정보보고, 인프라, 혁신, 고 용, 세금, 무역 | 11개 부문 35개 평가항목 |
| | | Corporate Governance Report |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확립, 주주의 권리와 주요한 소유권 기능, 주중 P대한 공정한 대우,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 계자의 역할,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 책임 | 6개 부문 316개 평가항목 |
| 산 업 경 쟁 력 | UNIDO | Industrial Development Series | 일인당 제조부가가치, 일인당 제조수출, mva에서 중급 및 고품기 술 활동의 비율, 제조수출에서 중급 및 고급기술 활동의 비율,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 | 6개의 성과지표 활용 |
| | OECD |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R&D와 혁신,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특히, ICT, 지식의 교류와 글로벌 기업, 지식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 평가항목 수 96개 |
| 종 합 | IMD |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경영효율성, 인프라 |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
| | WEF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기술, 공공제도, 거시경제환경, 기업운영과 전략, 기업 환경의 질 |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 중시 |
| 국 가 경 쟁 력 | 산업정책 연구원 (IPS) |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 부존자원, 경영여건, 인프라 등 지원산업, 시장의 크기와 질,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 | 9-Factor 모델 |

주) 평가요소는 2004년 이후 가장 최근 자료

<표 31> 각 기관별 한국의 평가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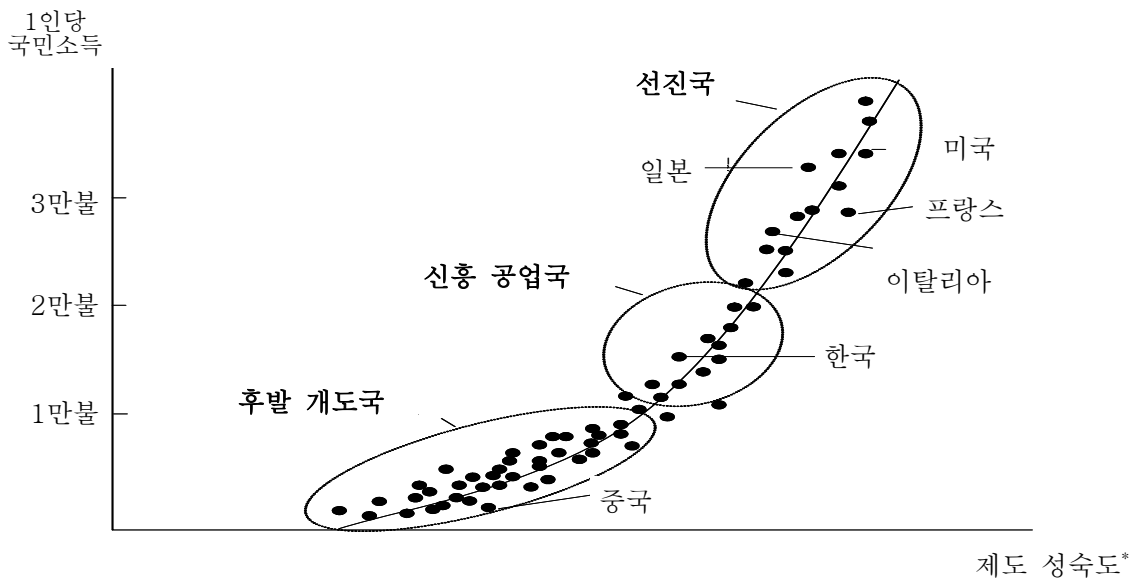
| | 기관 | 평가결과 |
|-----------|--------------------------|--|
| 부패 및 투명성 | PWC(2004) | - 규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및 자의성 항목에서 37점으로 평균 27.13점을 크게 상회 - 전체 순위는 평가대상국 48개 국 중 41위로 낮은 순위으로 평가 |
| | TI(2006) | - CPI는 2006년 42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 - BPI는 2006년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1위를 차지, 미흡하지만 기업들의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 모습 |
| 경제 자유도 | CATO(2006) | - 종합순위는 130개국 중 35위를 차지 - 자본의 건전성 부문의 경제자유도가 높은 반면, 정부, 법률, 금융, 기업분야에서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 헤리티지 | - 종합순위는 총 165개국 중 45위로 경제자유도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님 - 평가점수에 따른 분류범주를 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 범주인 “거의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 | A.T Kearney (2005) | - FDI 신뢰도 지수는 세계 10대 경제규모, 발달한 내수시장 및 기술경제의 주도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하여 2004년 21위에서 2005년 23위 기록 - 2005년 세계화 지수 순위 결과에서 한국은 30위를 기록하여 04년 대비 2단계 상승 |
| 신용 평가 | Moody's(2006) | - 2002년 3월 "Baa2"에서 "A3"으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은 변경하지 않은 채 2006년 4월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만 상향조정 |
| | S&P(2006) | - 2006년 11월 기존의 신용등급 "A"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 |
| 기업 경쟁력 | World Bank (2006) | - doing business에서 사업의 시작과 자산의 등록 부문의 경우 관련 절차수는 155개 국가 평균보다 많지만 소요시간과 비용은 낮게 나타남 - 기업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인식하는 10개의 가장 심각한 제약은 거시경제의 불안정, 정책의 불안정, 반경쟁적 관행, 자금조달비용, 높은 세금, 세금행정, 부패, 전기, 교통, 사업관련 허가 순으로 나타났음 |
| 산업 경쟁력 | UNIDO (2006) | - ITA지수에서 종합순위 4위를 기록, 산업발전지수에서는 1위, 기술발전지수에서는 7위를 기록 |
| 종합 국가 경쟁력 | IMD (2006) | - 2006년 전년대비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 경제성과분야에서는 경제지표의 호전세를 반영하여 소폭 개선되었으나 정부효율성 및 기업경영효율성분야는 크게 하락 |
| | WEF (2006) | - 2006년에는 다시 '05년보다 5단계 하락한 24위 기록, 기본요인 분야, 효율성 증진 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 등 3대 분야 모두 가 '05년 대비 각각 2, 5, 3단계 하락한데 기인 |

2. 정책적 함의

- 다양한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차적으로 순위 자체는 차이가 있어도 그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 한 국가의 경쟁력 평가에서 지적되는 상황은 비교적 동일, 특히 강점과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됨.
-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주제별로 평가요소의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그동안 한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평가요소를 포함해서 몇몇 평가요소들은 여러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음.
 - GDP·경제성장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는 투명성 평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기관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무역·개방 관련 자료도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외 투명성, 세계화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두 반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해외투자도 무역과 같이 경쟁력이나, 시장개방도, 경제자유도, 투명성 등 여러 평가기관들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출과 재정상태도 평가기관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요소임.
 - 정부의 효율성, 부정부패와 규제체계는 최근 각종 평가기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며, 한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 기업의 실적, 정부의 기업정책 등 기업 활동은 경쟁력 평가의 기본적인 평가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조합의 과격한 정도 등 노동에 관련된 요소도 빠지지 않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정부의 합리적인 감독도 경쟁력과 경제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밖에 사회복지제도나 빈부격차 등 사회 환경에 관한 요소와 자연자원, 환경규제 등 환경관련 변수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추세임.
- 해외평가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평가결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노력의 필요성 여부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판단·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요 평가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국내기관인 IPS(산업정책연구원)의 독자적인 평가 모형개발 및 체계적인 조사 실시는 높이 평가할 만하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연구를 강화할 필요
- 무엇보다 IMD나 WEF를 포함한 이들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경쟁력 위상과 중장기적 전망, 그리고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 향상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현재 한국 국가경쟁력의 문제점은 경쟁력과 관련된 제반 국내제도의 낙후성, 선진국에 대비한 우리의 현격한 제도격차 문제로 귀결. 혁신주도 경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제도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 소요

< 제도성숙도와 소득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6, IMF) >



* 지배구조, 공공부문 효율성, 규제 등을 IMF에서 지수화

- 우리의 경쟁력 위상과 전망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커다란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임
- 금융위기 이후 IMD·WEF의 종합순위는 물론 세부평가항목까지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과도하게 치중하는 경향

- 이들이 공표하는 절대적인 순위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이들의 평가에 국가 정책차원에서의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거의 모든 국제기관의 평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며, 조사기관의 이념적인 편향은 물론 조사방법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이제는 주제별, 분야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되는 또 다른 전문평가기관들을 발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함.
- 일례로, 최근 발표된 ‘비전2030 (시안)’ 보고서는 VAP (Vision Action Program)의 틀 안에서 5대 전략별로 복수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 (Indicators)들이 설정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상당수가 IMD와 WEF의 평가항목에 의존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사용된 “삶의 질” 순위와 같은 경우는 IMD평가 중 “당신의 삶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라는 10점 척도의 단일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응답자의 편향이 매우 심하여 정부정책 목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음. 오히려 논리적 근거나 객과성이 높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Report)¹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 다른 예로서, ‘사회응집력’이란 지표 또한 IMD의 평가 중 “정부가 사회응집력에 반응하는 정도”를 묻는 10점 척도의 단일 설문에 불과한 항목으로 오히려 World Value Survey나, Asian Barometer Survey와 같은 사회자본 국제비교 연구 결과나 이들 조사에 대한 국내 심층 연구조사 성격으로서 최근 1차 조사가 완료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매년 최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질’과 같은 항목도 또한 IMD의 단일 설문항목으로써 이 평가항목 하나를 정책이나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12개 평가기관의 16개 국제평가보고서 외에도 NGO,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지닌 해외기구에 의한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1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가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이며 이들 기관들의 평가방법과 결과도 널리 공표하여 종합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확인할 필요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관련 평가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밖에도 사회개발지수 부문 등 복지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관들도 다수.
-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한계에 달했으며 경제·사회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의미의 선진국,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이미 OECD(Health dat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등), UNDP(HDI) 등 사회개발지수 부문에서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음. 이제 경제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평가에도 지속적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때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_06120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 IMD · WEF를 중심으로 -

2006. 12

조 병 구

한국개발연구원

I. 개요

1. 서론

-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평가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IMD· WEF는 종합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일국의 경제 환경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
 -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국제사회 평가 내지 시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IMD· WEF의 경쟁력 순위가 발표되면 평가결과의 수용, 특히 절대 경쟁력 순위의 등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 '06년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IMD는 38위로 '05년에 비해 9단계 하락했으며, WEF는 24위로 '05년 19위에 비해 5단계하면서 그 논란이 더욱 가시화 되었으며
 - 그 원인을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과 부정에서 찾는 견해와 단순히 설문데이터의 순위하락에 있다는 견해가 상충

- 이러한 논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경쟁국 그리고 유럽강소국을 비교· 분석하여 강약점을 도출하고,
 - 국가별로 경쟁력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
 - 선진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아시아 경쟁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 유럽강소국 :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 우리나라 순위하락 원인을 세부항목별로 분석('05~'06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IMD ·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가. IMD

1) 평가체제

-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을 발간, 26개국의 OECD회원국과 기타 신흥 20여 개국 순위를 산정하였다. 초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하여 순위를 발표하다가 1994년 이후에는 통합순위를 발표
-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능력인 국력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여건들이 주요 평가 대상임.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에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음.

2) 평가요소

- IMD는 일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 각 분야를 다시 5대 부문으로 나누어 총 20개 부문을 분석함.

- ▶ **경제운영성과분야**(국내경제의 거시경제적 평가) :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가격 등 5개 부문
- ▶ **정부행정효율분야**(정부정책의 경쟁력 기여도 평가)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제반여건 등 5개 부문
- ▶ **기업경영효율분야**(기업의 혁신성·수익성·책임성 평가) :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행태·가치 등 5개 부문
- ▶ **발전인프라분야**(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적·기술적·과학적 인프라와 인적자원 평가) :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5개 부문

□ 20개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은 총 314개 항목으로 이 중 경성자료(hard data)는 201개 항목, 설문자료(survey)는 113개 항목임.

- 이 중, 설문자료 113개 항목은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 반면, 경성자료는 201개 항목 중에서 128개 항목만이 평가에 반영되며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 지표로 활용함.
- 경성자료는 통계치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수인 반면, 설문자료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인 기업가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서에 근거한 지수임.

<표 1> IMD 종합경쟁력 평가 요소

| 종합순위 | | | | | |
|--------------------|---------|--------|--------------------|----------|--------|
| 경제운영성과분야 | | | 정부행정효율분야 | | |
| 부문별 (77개 항목) | 국내경제 | 28개 항목 | 부문별 (73개 항목) | 공공재정 | 11개 항목 |
| | 국제무역 | 20개 항목 | | 재정정책 | 15개 항목 |
| | 국제투자 | 17개 항목 | | 제도적 여건 | 16개 항목 |
| | 고용 | 8개 항목 | | 기업관련법 | 20개 항목 |
| | 가격 | 4개 항목 | | 사회적 제반여건 | 11개 항목 |
| 기업경영효율분야 | | | 발전인프라분야 | | |
| 부문별 (69개 항목) | 생산성·효율성 | 9개 항목 | 부문별 (95개 항목) | 기본인프라 | 22개 항목 |
| | 노동시장 | 21개 항목 | | 기술인프라 | 20개 항목 |
| | 금융 | 21개 항목 | | 과학인프라 | 22개 항목 |
| | 경영활동 | 11개 항목 | | 보건 및 환경 | 17개 항목 |
| | 행태·가치 | 7개 항목 | | 교육 | 14개 항목 |
| 총 314개 항목 | | | | | |

3) 평가방법

- IMD는 2000년도까지는 경성데이터와 설문데이터간에 3 : 2¹⁵⁾의 가중치 차이를 두었으나 2001년부터는 4개의 분야 이하에 존재하는 20개의 부문 항목 모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나. WEF

1) 평가체계

-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매년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간¹⁶⁾
 - WEF는 1976년부터 ‘경쟁력 보고서(Competitiveness Report)’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쟁력 관련 평가를 실시
 -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WCY(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발간하였고
 - 1996년부터는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발간 하면서 독립적인 평가를 시작
- WEF의 경쟁력 평가지수는 2006년 현재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와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이원평가체제임.
 - 1996~97년에는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를 통해 단일종합순위를 발표
 - 1998년부터는 단기적인 거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경쟁력 지수인 미시경쟁력 지수(Micro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dex: MICI)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CI에 보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경쟁력의 거시 성장론적 측면과 미시 생산적 측면을 구분하여 종합경쟁력에 접근하고 있음.

15) 1/3 대 2/3의 가중치는 자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왔기 때문에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음.

16) IMD는 “기업의 사업 환경에 초점을 맞춰 국가경쟁력을 파악”

- 이어 2000년부터는 MICI의 명칭을 경상경쟁력 지수(Current Competitiveness Index, CCI)로 바꾸는 한편 종래의 CI를 폐지하고 이를 새롭게 개발한 성장잠재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GCI)로 변경하였고
- 2003년부터는 다시 CCI(기존 MICI)¹⁷⁾의 명칭을 현재의 Business CI로 변경했으며, 2006년도에는 기존 성장잠재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GCI)를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로 변경

<표 2> WEF의 경쟁력 보고서 · 경쟁력 지수

| | 경쟁력보고서 | 경쟁력 지수 | |
|-----------|--|-----------|---------------------|
| 1976 | 경쟁력 평가 시작 Competitiveness Report | | |
| 1987-1995 | IMD와 공동 발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 |
| 1996 | 단독 발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CI | |
| 1998 | | Growth CI | Micro Industrial CI |
| 2000 | | Growth CI | Current CI |
| 2003 | | Growth CI | Business CI |
| 2006 | | Global CI | Business CI |

2) 평가요소

□ WEF는 평가체제 변화와 함께 평가요소도 지속적으로 변화

- WEF의 평가요소의 구성은 1999년까지는 개방성, 정부, 금융, 기업경영, 사회간접자본, 기술, 노동 등 8 개 부문으로 당시의 IMD와 유사한 구성이었음
- 이후 2000년에는 기업특성, 국민경제성과, 정부 및 재정 등 12개 부문으로, 2001년에는 국민경제성과, 거시경제지표, 기술혁신 및 확산 등 11개 부문으

17) 현재의 소득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미시적 기반을 측정하기 위한 것

로 구분하여 평가요소를 달리 했음.

- 2005년에는 거시경제 환경, 기술력, 공공기관 등 3개 분야로 평가요소를 나누고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표 3> WEF의 부문별 평가 구성요소 변화(GCI기준)

| 1996-1999 | 2000 | 2001 | 2005 | 2006 |
|---|--|---|---|--|
| 개방 정부 금융 기업경영 제도 인프라 기술 노동 | 대외개방 국민경제성과 정부 및 재정 금융 기업특성 기업활동 및 전략 국내 경쟁 환경정책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기술 | 국민경제 성과 거시경제지표 계약 및 법률 부패 국내시장 경쟁도 기업 활동 및 전략 집단발달 환경정책 기술혁신 및 확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 거시경제안전성 국가신용등급 재정 비효율성 계약 및 사법제도 부패지수 기업혁신 기술이전 정보통신기술 |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시장효율성 과학기술수준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
| 161개 | 180개 | 174개 | 35개 | 90개 |

- 2006년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2005년 35개 항목(3대 분야, 8개 부문)을 90개 항목(3대 분야 9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

- WEF의 경쟁력 평가요소는 기본요인, 효율성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로 구분되고, 각 분야는 2-4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되어 총 9개 부문 90개 항목(통계 24개, 설문 66개)으로 구성

- 통계자료는 각국의 파트너 기관을 통하지 않고 IMF, World Bank, UN, ITU,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수집·활용
- 설문자료의 경우 세계 각국의 파트너 기관이 WE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의 CE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표 4> WEF의 2006년도 평가 요소

| 종합순위 | | |
|---------------|-------------|---|
| 1. 기본요인 | | |
| | 제도적요인 | 공공부문, 민간부문 |
| | 인프라 | |
| | 거시경제 | |
| | 보건 및 초등교육 | 보건, 초등교육 |
| 2. 효율성증진요인 | | |
|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 고등교육의 양, 고등교육의 질, 직장훈련 |
| | 시장효율성 | 상품시장의 왜곡, 경쟁 및 규모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개방성 |
| | 과학기술수준 | |
|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 | |
| | 기업활동 성숙도 | 기업네트워크의 질, 기업경영·전략의 성숙도 |
| | 기업혁신 | |

3) 종합순위 산정절차

- WEF의 평가방법은 우선 국가규모¹⁸⁾를 통제한 이후 항목별로 점수 및 순위를 산출한 후 9개 부문별로 해당 항목 평가결과를 표준화하여 합산
 - 3대 분야별 점수 및 순위는 각 2-4개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종합국가 순위는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3대 분야별 가중치를 달리 하여 합산한 후 125개 전체 국가별 순위를 결정

18) WEF의 평가대상 125개국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국가발전단계별 다른 가중치를 부여

<표 5> WEF의 평가요소 가중치

| 구 분 | GDP(per Capita) (US\$) | 기본요인 | 생산성증진 | 기업혁신 및 성숙도 |
|------------------|---------------------------|----------|----------|---------------|
| 1단계: 생산요소 중심단계 | <2,000 | 50% | 40% | 10% |
| 중간단계(1단계 → 2단계) | 2,000-3,000 | 50 ~ 40% | 40 ~ 50% | 10% |
| 2단계: 효율성 중심단계 | 3,000-9,000 | 40% | 50% | 10% |
| 중간단계(2단계 → 3단계)* | 9,000-17,000 | 40 ~ 30% | 50 ~ 40% | 10 ~ 30% |
| 3단계: 혁신 중심단계 | > 17,000 | 30% | 40% | 30% |

* 우리나라는 효율성과 혁신의 중간단계에 해당

II. 주요국의 경쟁력 현황과 특징¹⁹⁾

1. 주요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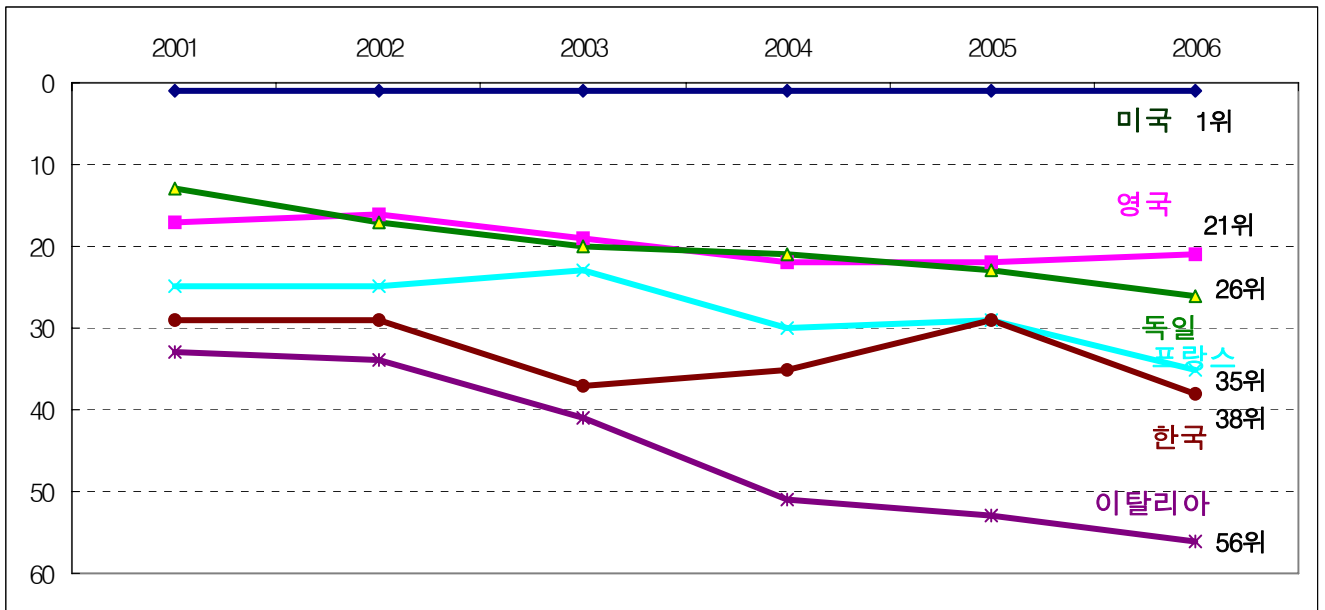
가. 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 IMD의 종합경쟁력 평가 순위상, 지난 5년('02년~'06년) 선진국의 경쟁력은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두 하락세

○ 미국은 IMD 평가 시작('92) 이후 부동의 1위를 유지

○ 영국은 '06년 전년대비 상승(1단계)했으나 미미하고, 독일(17위→26위), 프랑스(25위→35위), 이탈리아(34위→56위)는 지속적인 하락세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IMD 종합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2001~2006)



□ WEF의 평가 결과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쟁력 순위는 대체로 하락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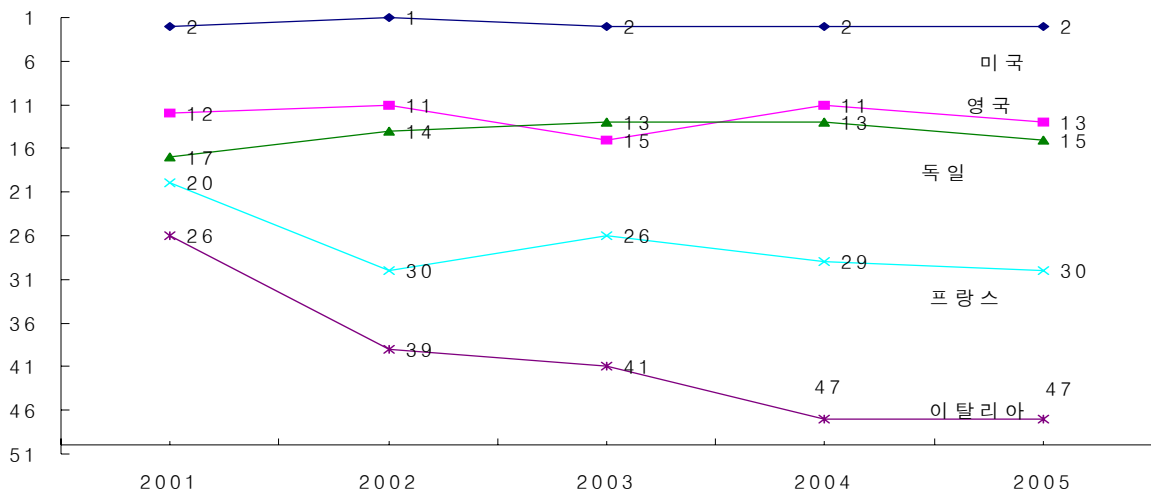
19) IMD와 달리 WEF는 '06년 평가시스템이 재편으로 '05년 이전자료와의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지난 과거 5년간 추세와 '06년 추세를 나누어 비교

<표 6> 주요 선진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2006-2005 대비)

|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
| 2005 | 1 | 9 | 6 | 12 | 38 |
| 2006 | 6(▼5) | 10(▼1) | 8(▼2) | 18(▼6) | 42(▼4) |

주) 2005년 순위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에 의한 순위

<그림 2> 선진국의 과거 WEF 국가경쟁력 순위변화 추이(2001~2005)



주) 2005년 순위는 개편되기 이전 체계에 의한 순위

나. 각 경쟁력 지표 분야·부문별 현황

1) IMD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IMD 종합경쟁력을 구성하는 분야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음.

-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종합순위 추이와 경제운영성과 순위 추이가 동일한 진동으로 변화

<표 7> 주요 선진국의 2006년도 IMD 종합경쟁력 분야별 순위

|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
| 종합순위 | 1(1) | 21(22) | 26(23) | 35(30) | 56(53) |
| 경제운영성과 | 1(1) | 8(14) | 22(23) | 17(9) | 50(37) |
| 정부행정효율 | 14(16) | 26(27) | 33(35) | 48(45) | 60(58) |
| 기업경영효율 | 4(3) | 24(26) | 31(26) | 48(45) | 55(53) |
| 발전인프라 | 1(1) | 23(25) | 10(11) | 21(17) | 39(36) |

주: ()는 '05년도 순위

□ 순위 등락에 상관없이 주요 선진국의 강점과 약점은 비슷하게 도출됨.

- 강점²⁰⁾: 국제투자, 기업관련법, 제도적 여건, 금융, 과학인프라
- 약점²¹⁾: 가격, 공공재정, 재정정책, 노동시장, 고용 등

□ 주요 선진 각국의 분야·부문별 강·약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경제운영성과와 발전인프라분야에서 지속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행정효율분야는 '05년 대비 2단계상승한 14위
 - 강점: 국내경제(1위), 국제투자(1위), 고용(7위), 생산성·효율성(5위), 금융(1위), 기본인프라(1위), 과학 인프라(1위)
 - 약점: 공공정책(41위), 제도적 여건*(41위)

*'05년 13위에서 28단계 하락

- 영국은 경제운영성과가 '05년 대비 6단계 상승한 8위로 우위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3개 분야는 20위권 순위 기록

20) IMD의 4개 분야 20개 부문을 기준으로 10위 이상인 부문을 강점으로 선택
 21) IMD의 4개 분야 20개 부문을 기준으로 40위 이하인 부문을 약점으로 선택

- 강점: 국제투자(3위)와 금융(6위)
- 약점: 가격(49위), 공공재정(44위)
- 독일은 발전인프라에 강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10위 권내 순위를 기록한 반면 정부행정과 기업효율성은 33위와 31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
- 강점: 국제무역(7위), 사회적 제반여건(10위)
- 약점: 고용(44위), 재정정책(54위), 노동시장(40위), 행태가치(47위)
- 프랑스는 경제운영성과가 17위로 '05년 대비 8단계 하락했지만 4개 분야 중 가장 상위, 정부행정과 기업효율은 48위로 열위
- 강점: 국제투자(4위)
- 약점: 고용(52위), 재정정책(59위), 공공재정(54위), 노동시장(53위), 행태가치(61위)
- 이탈리아는 발전인프라가 39위로 중하위권을 기록, 나머지 3개 분야는 50위권 이하로 최하위 수준
-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보건과 환경(29위), 기술(31위)·과학인프라(37위), 국제투자(30위) 및 국제무역(35위)을 제외한 15개 부문이 최하위권

2) WEF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WEF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음.
-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지만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정, 공공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순위하락

- 강점²²⁾: 고등교육과 훈련(5위), 시장효율성(2위), 과학기술수준 (8위), 기업 활동 성숙도(8위), 혁신(2위)
- 약점²³⁾: 거시경제(69위), 보건 및 초등교육(40위)

<표 8> 선진국의 WEF 국가경쟁력 9개 부문별 순위(2006)

|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
| 종합순위 | 6 | 10 | 8 | 18 | 42 |
| 1. 기본요인 | 27 | 14 | 9 | 15 | 48 |
| 제도적 요인 | 27 | 15 | 7 | 24 | 71 |
| 인프라 | 12 | 14 | 1 | 4 | 50 |
| 거시경제 | 69 | 48 | 63 | 56 | 84 |
| 보건 및 초등교육 | 40 | 14 | 71 | 12 | 8 |
| 2. 효율성 증진 | 1 | 7 | 17 | 22 | 40 |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 5 | 11 | 18 | 12 | 35 |
| 시장효율성 | 2 | 3 | 20 | 28 | 78 |
| 과학기술수준 | 8 | 6 | 20 | 25 | 32 |
|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 4 | 10 | 3 | 13 | 31 |
| 기업활동 성숙도 | 8 | 6 | 1 | 10 | 24 |
| 기업혁신 | 2 | 12 | 5 | 14 | 43 |

○ 영국은 교육시스템의 질,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실업률, 금융시장 등 시장효율성 부문에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거시경제 환경의 저조, 공공 부문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자국화 강세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하락

- 강점: 시장효율성(3위), 과학기술수준(6위)
- 약점: 거시경제(48위)

○ 프랑스는 인프라 및 기업 활동 성숙도 부문에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05년 대비 6단계 하락한 18위 기록

- 강점: 인프라(4위), 기업활동 성숙도(10위)
- 약점: 거시경제(56위)

22) WEF의 9개 분야를 기준으로 10위 이상인 부문을 강점으로 선택

23) WEF의 9개 분야를 기준으로 40위 이하인 부문을 약점으로 선택하되 40위 이하의 항목이 없을 때는 가장 낮은 순위의 항목을 기재

- 독일은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적 환경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지표와 기업경영 성숙도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그러나, 노동규제와 높은 실업률, 대규모 공공부문 적자와 높은 국가채무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강점: 제도(7위), 인프라(1위), 기업활동 성숙도(1위), 혁신(5위)
 - 약점: 거시경제(63위), 보건 및 초등교육(7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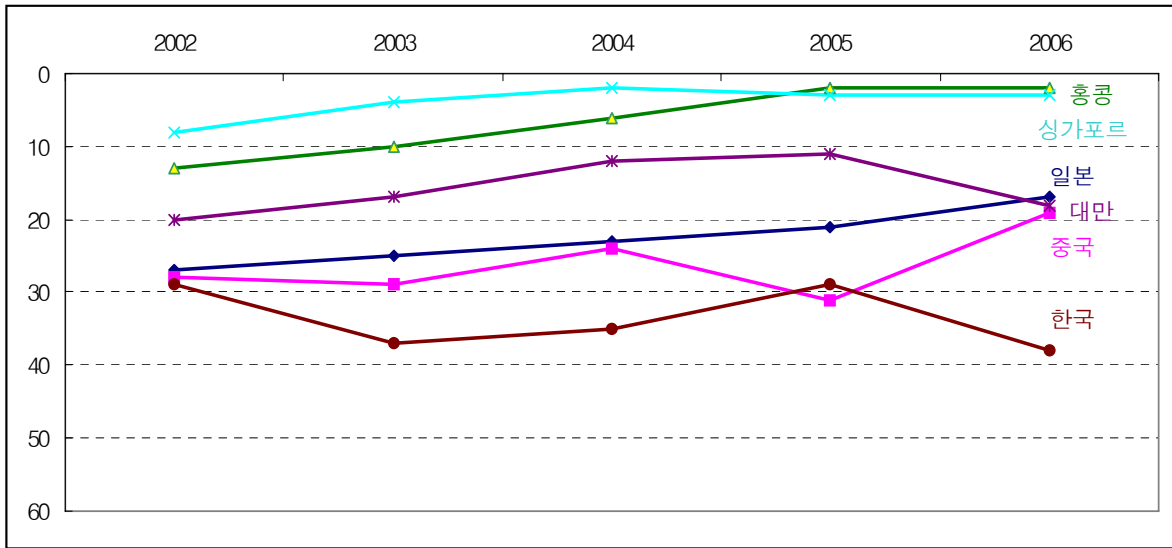
- 과거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누적이 진행되면서 GDP대비 공공부채가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금융시장의 성숙도, 개방 등의 분야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강점: 보건 및 초등교육(8위)
 - 약점: 제도(71위), 인프라(50위), 거시경제(80위), 시장효율성(78위)

2. 아시아 경쟁국

가. 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 IMD 종합경쟁력 순위상으로 볼 때,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지난 5년('02년~'06년)동안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 유지(<그림 3>)

<그림 3> 아시아 경쟁국의 IMD 종합경쟁력 순위변화 추이(2002~2006)



- 2006년도 WEF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에서도, 아시아 경제는 최근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군으로 평가(<표9>)
- 높은 품질의 인프라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및 건강하고 질 높은 노동력 등 기업과 소비자 수준 모두에서 프론티어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표 9> 주요 아시아 경쟁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2006)

| | 일본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
| 2005 | 10 | 48 | 14 | 5 | 8 |
| 2006 | 7(△3) | 54(▼6) | 11(△3) | 5 | 13(▼5) |

주) 2005년 순위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에 의한 순위

- 국가별 추이를 살펴보면,
 -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절대 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두 지표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세적으로도 꾸준한 상승·유지세를 보임.
 - 대만은 올해 두 지표 모두에서 '05년과 대비하여 비슷한 정도로 하락하여,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추이를 보임.

- 다른 국가들의 경우 두 지표의 경쟁력 순위 추세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중국의 경우 IMD는 '05년에 31로 하락했다가 '06년 19위로 급격하게 상승을 나타냈으나, WEF 순위에서는 6단계 하락을 보임.
- 두 지표의 평가체계의 차이가 중국에서 많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각 경쟁력 지표 분야·부문별 현황

1) IMD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분야·부문별 순위를 살펴보면, 각국의 종합경쟁력 순위는 기업경영효율분야의 순위추세와 유사

- 특히, '06년 일본과 중국의 경우 기업경영효율성 분야의 급상승이 종합경쟁력 순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영효율성: 일본(35위→23위), 중국(50위→30위)

<표 10> 아시아 경쟁국의 2006년도 IMD종합경쟁력 분야별 순위

| | 일본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
| 종합순위 | 17(21) | 19(31) | 2(2) | 3(3) | 18(11) |
| 경제운영성과 | 15(21) | 3(3) | 5(4) | 4(5) | 27(18) |
| 정부행정효율 | 31(40) | 17(21) | 1(1) | 2(2) | 24(19) |
| 기업경영효율 | 23(35) | 30(50) | 1(1) | 7(5) | 14(6) |
| 발전인프라 | 2(3) | 37(42) | 16(20) | 5(6) | 20(18) |

주:()는 '05년 순위

□ 아시아 각국의 분야별 '06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은 발전인프라가 2위로 '05년 대비 1단계 상승했으며 기업효율성 분야는 '05년 대비 무려 12단계 상승(35위→ 23위)

- 강점 : 국내경제(4위)와 과학인프라(2위)
- 약점: 가격(56위)과 사회적 제반여건(49위)
- 중국은 경제운영성과가 '05년과 동일한 3위를 기록했으며 기업경영효율성 분야는 '05년 대비 무려 20단계 상승(50위→ 30위)
 - 강점: 국내경제(2위), 국제무역(6위), 고용(1위), 공공재정(1위)노동시장(5위), 재정정책(10위)
 - 약점: 기업관련법(43위), 금융(51위), 보건 및 환경(51위), 교육(51위)
- 홍콩은 4개 분야 모두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부행정과 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속적으로 1위를 고수
 - 강점: 국내경제(5위), 국제무역(3위), 국제투자(5위), 공공재정(4위), 재정정책(1위), 제도적여건(8위), 기업관련법(1위), 생산성·효율성(1위), 노동시장(2위), 금융(2위), 경영활동(2위), 행태가치(2위), 기본인프라(3위), 기술인프라(2위)
 - 약점: 가격(52위)
- 싱가포르는 4개 분야 모두에서 우위를 나타냈으며 기업경영효율성 분야는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
 - 강점: 국제무역(1위), 고용(3위), 가격(10위), 재정정책(3위), 제도적여건(2위), 기업관련법(2위), 노동시장(3위), 경영활동(9위), 행태가치(4위), 기본인프라(1위), 기술인프라(3위)
 - 약점: 없음
- 대만은 기업효율성이 '05년 대비 8단계 하락한 14위를 기록했음에도 4개 분야 중 가장 우위를 나타냈음.

- 강점: 재정정책(9위), 노동시장(10위), 행태가치(8위), 기술인프라(4위), 과학인프라(5위)
- 약점: 국제투자(49위)와 사회적 제반여건(42위)

2) WEF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WEF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이 나타남.

- 일본은 생산 공정의 기술적 성숙도와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등 private 섹터에서의 혁신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재정 등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 상존
- 강점: 인프라(7위), 보건 및 초등교육(1위), 시장효율성(10위), 기업활동 성숙도(2위), 기업혁신(1위)
- 약점: 거시경제(91위)

<표 11> 아시아 경쟁국의 2006년도 WEF 국가경쟁력 분야별 순위

| | 일본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
| 종합순위 | 7 | 54 | 11 | 5 | 13 |
| 1. 기본요인 | 19 | 44 | 4 | 2 | 21 |
| 제도적 요인 | 22 | 80 | 10 | 4 | 32 |
| 인프라 | 7 | 60 | 3 | 6 | 16 |
| 거시경제 | 91 | 6 | 9 | 8 | 27 |
| 보건 및 초등교육 | 1 | 55 | 35 | 20 | 25 |
| 2. 효율성 증진 | 16 | 71 | 11 | 3 | 14 |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 15 | 77 | 25 | 10 | 7 |
| 시장효율성 | 10 | 56 | 1 | 4 | 22 |
| 과학기술수준 | 19 | 75 | 13 | 2 | 14 |
|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 1 | 57 | 18 | 15 | 9 |
| 기업활동 성숙도 | 2 | 65 | 13 | 23 | 15 |
| 기업혁신 | 1 | 46 | 22 | 9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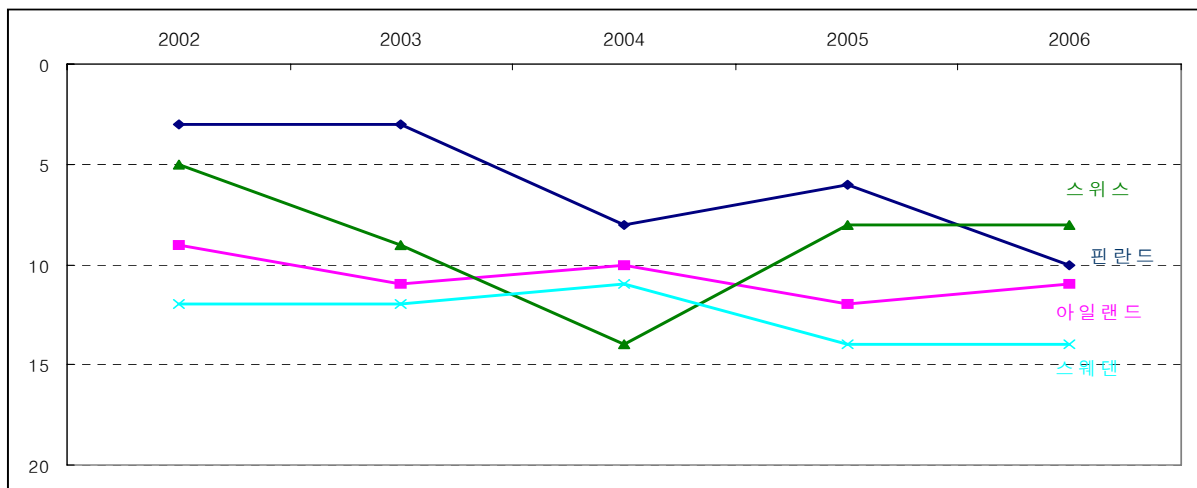
- 중국은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점: 거시경제(6위)
 - 약점: 제도적 요인(80위), 인프라(60위),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77위), 시장 효율성(56위), 과학기술수준(75위), 기업활동 성숙도(65위), 기업혁신(46위)
- 홍콩은 경쟁력 종합순위 11위의 우수국으로, 특히 기본요인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효율성 증진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도 비교적 경쟁력 순위가 상위권임.
 - 강점: 제도적 요인(10위), 인프라(3위), 거시경제(9위), 시장효율성(1위)
 - 약점: 보건 및 초등교육(35위)
- 싱가포르 역시 세 개 분야 모두에서 경쟁력 순위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기본요인(2위)과 효율성 증진(3위) 분야의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짐.
 - 강점: 제도적 요인(4위), 인프라(6위), 거시경제(8위),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10위), 시장효율성(4위), 과학기술수준(2위), 기업혁신(9위)
 - 약점: 기업활동 성숙도(23위)
- 대만은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내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본요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순위가 낮게 평가되어 '05년 대비 5단계 하락한 13위 기록. 또한 대만은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적 인프라의 약점으로 인해 전체 순위는 낮게 평가
 - 강점: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7위), 기업혁신(8위)
 - 약점: 제도적 인프라(32위)

3. 유럽강소국의 경쟁력 현황

가. 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 IMD 종합경쟁력 순위 추세로 볼 때, 강소국들의 경쟁력 순위는 지난 5년('02~'06년)동안 유지 및 소폭 하락세
 - 급격한 상승으로 주목으로 받았던 핀란드(3위→10위)와 아일랜드(9위→11위)는 '02년 이후 다소 주춤
 - 스위스는 '04년까지 하락하다가 '06년 8위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스웨덴(12위→14위)은 미미한 하락세

<그림 4> 주요 강소국의 IMD 종합경쟁력 순위변화 추이(2002~2006)



- 2006년 WEF 분석결과에서,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 순위는 핀란드와 아일랜드는 전년과 동일, 스위스와 스웨덴은 상승세
 - 재정 흑자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채무가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작용
 - 제도적 요인 부문이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에서도 상위권

<표 12> 유럽 강소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2006)

| | 핀란드 | 아일랜드 | 스위스 | 스웨덴 |
|------|-----|------|-------|-------|
| 2005 | 2 | 21 | 4 | 7 |
| 2006 | 2 | 21 | 1(△3) | 3(△4) |

주) 2005년 순위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에 의한 순위

나. 각 경쟁력 지표 분야·부문별 현황

1) IMD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IMD 종합경쟁력을 구성하는 분야별 순위상으로 볼 때, 강소국들은 특성상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운영성과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반면 정부행정·기업효율성, 발전인프라 분야는 높은 순위를 나타냄.

<표 13> 강소국의 2006년도 IMD 종합경쟁력 분야별 순위

| | 핀란드 | 아일랜드 | 스위스 | 스웨덴 |
|-------------|--------------|---------------|-------------|---------------|
| 종합순위 | 10(6) | 11(12) | 8(8) | 14(14) |
| 경제운영성과 | 38(32) | 9(6) | 26(19) | 28(30) |
| 정부행정효율 | 5(3) | 7(10) | 8(7) | 22(22) |
| 기업경영효율 | 10(9) | 6(10) | 11(14) | 12(16) |
| 발전인프라 | 7(4) | 27(31) | 4(2) | 6(8) |

주:()는 '05년 순위

- 강소국들의 경우 특히, 교육, 보건과 환경, 기업관련법, 사회적 제반여건, 제도적 여건 등 사회시스템 분야에 강점

- 핀란드는 정부행정(5위)과 발전인프라(7위)분야가 우위가 있는 반면 경제운영성과가 38위로 낮은 순위 기록

- 강점: 공공재정(8위), 제도적 여건(4위), 기업관련법(6위), 사회적 제반여건(1위), 경영활동(5위), 과학인프라(7위), 보건과 환경(7위), 교육(1위)
 - 약점: 국제투자(51위)
- 아일랜드는 발전인프라(27위)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음.
- 강점: 국내경제(9위), 국제투자(6위), 고용(5위), 재정정책(8위), 제도적 여건(5위), 기업관련법(4위), 생산성·효율성(10위), 경영활동(10위), 행태가치(3위)
 - 약점: 가격(50위)
- 스위스는 정부행정효율성(8위)과 발전인프라(4위) 분야에서 강점을, 경제운영성과분야(26위)에서 중위권 기록
- 강점: 재정정책(2위), 제도적 여건(7위), 금융(3위), 과학인프라(6위), 보건과 환경(2위), 교육(9위)
 - 약점: 가격(53위)
- 스웨덴은 발전인프라 분야가 6위로 강점을 나타냈으며, 경제운영성과 분야가 28위로 상대적 열위
- 강점: 사회적 제반여건(6위), 생산성·효율성(9위), 경영활동(7위), 기술인프라(9위), 과학인프라(3위), 보건과 환경(9위), 교육(4위)
 - 약점: 국제투자(50위), 재정정책(56위)

2) WEF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

- 유럽 강소국들의 WEF 국가경쟁력 분야·부문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이 나타남.

<표 14> 유럽 강소국의 WEF 국가경쟁력 9개 부문별 순위(2006)

| | 핀란드 | 아일랜드 | 스위스 | 스웨덴 |
|---------------|------|--------|------|------|
| 종합순위 | 2(2) | 21(21) | 1(4) | 3(7) |
| 1. 기본요인 | 3 | 23 | 5 | 7 |
| 제도적 요인 | 1 | 17 | 5 | 12 |
| 인프라 | 10 | 31 | 2 | 9 |
| 거시경제 | 12 | 20 | 18 | 15 |
| 보건 및 초등교육 | 7 | 24 | 29 | 9 |
| 2. 효율성 증진 | 4 | 18 | 5 | 2 |
|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 | 1 | 16 | 6 | 3 |
| 시장효율성 | 17 | 13 | 5 | 19 |
| 과학기술수준 | 12 | 24 | 5 | 1 |
|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 6 | 19 | 2 | 5 |
| 기업활동 성숙도 | 11 | 16 | 3 | 5 |
| 기업혁신 | 4 | 20 | 3 | 6 |

주:()는 '05년 순위

○ 스위스는 혁신과 성숙한 기업 활동이 세계 최상급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학간의 밀접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우수한 과학 연구 인프라, 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 등도 기술혁신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음. 또한, 원칙이 적용되는 효율적인 사업시스템과 공공제도의 높은 투명성과 감사시스템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도 최상위 수준이고, 거시경제기초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특히,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공부채의 안정화 노력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 그러나, 국내시장 경쟁이 여러 가지 정부 간섭으로 제한되고 있고, 농업정책지원이 미흡하며 특히 무역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개방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음.

- 강점: 제도(5위), 인프라(2위), 고등교육 및 훈련(6위), 시장효율성(5위), 과학기술수준(5위), 기업활동 성숙도(3위), 혁신(3위)

- 약점: 거시경제(18위), 보건 및 초등교육(29위)

○ 핀란드는 스위스와 같이 비슷한 제도적·구조적 프로파일을 공유한 국가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목표와 과학기술혁신이 중점이 된 투명한 제도와 우수한 거시경제 경영을 보유.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 활동의 성숙도

면에서는 스위스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강점: 제도(1위), 인프라(10위), 보건 및 초등교육(7위), 고등교육 및 훈련(1위), 혁신(4위)
- 약점: 시장효율성(17위)
- 스웨덴은 핀란드와 같이 우수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 기업혁신 활동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강점: 인프라(9위), 보건 및 초등교육(9위), 고등교육 및 훈련(3위), 과학기술수준(1위), 기업활동 성숙도(5위), 혁신(6위)
 - 약점: 거시경제(15위), 시장효율성(19위)
- 아일랜드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으로 인한 시장효율성면에서는 우수하나 인프라 등에서 다른 유럽 강소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강점: 시장효율성(13위)
 - 약점: 인프라(31위), 보건 및 초등교육(24위), 과학기술수준(24위)

Ⅲ.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과 등락요인분석

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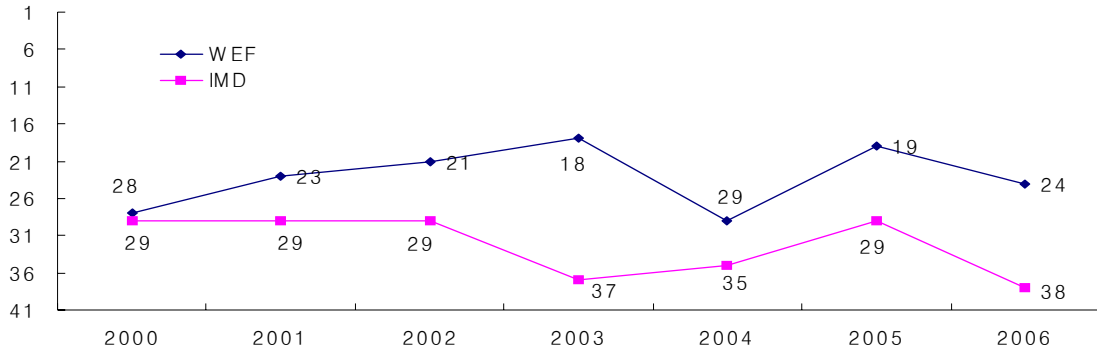
가. 경쟁력 순위 현황

□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경쟁력은 IMD와 WEF 두 지표 모두에서 '05년에 대비하여 하락하였음.

- IMD 9단계 하락 (29위→38위), WEF 5단계 하락 (19위→24위)

- WEF 경쟁력 순위상으로는, '01~'05년 동안은 '0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상승세였으나, '06년에 다시 하락

<그림 5> 우리나라 IMD·WEF 경쟁력 순위 추이



□ IMD와 WEF의 경쟁력 순위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IMD보다는 WEF의 평가에서 더 높고 안정적인 면을 나타냄.

- IMD의 경우 중위권의 불안정 국가로, WEF의 경우는 중위권의 안정국가로 분류²⁴⁾되는데
- IMD는 기업경영환경을, WEF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등 평가의 초점이 다른데 기인하여 양 기관평가간의 순위 격차도 존재하지만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순위도 근접해 지는 경향.

나. 분야별 경쟁력 현황

1) IMD

□ IMD 종합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운영성과분야에서 경제지표의 호전세를 반영하여 소폭 개선(43위→41위)

- 그러나, 정부효율성(31위→47위)) 및 기업경영효율성(30위→45위) 분야는 크게 하락했으며 발전인프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23위→24위)

24) 우천식·서경란, 「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결과와 정책적 함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경제정책연구」

<표 15> 우리나라 IMD 종합경쟁력 추이(2002~2006)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종합순위 | 29 | 37 | 35 | 29 | 38 |
| 경제운영성과 | 32 | 40 | 49 | 43 | 41 |
| 정부행정효율 | 26 | 37 | 36 | 31 | 47 |
| 기업경영효율 | 27 | 45 | 29 | 30 | 45 |
| 발전인프라 | 23 | 30 | 27 | 23 | 24 |

□ 20개 부문별로는

- 국내경제(32→30위)와 국제투자(51→42위), 과학인프라(15→12위)부문이 소폭 개선
- 공공재정(14→25위), 제도적 여건(30→46위), 기업관련법(34→51위), 노동시장(26→43위), 경영활동(26→48위), 행태가치(25→40위) 부문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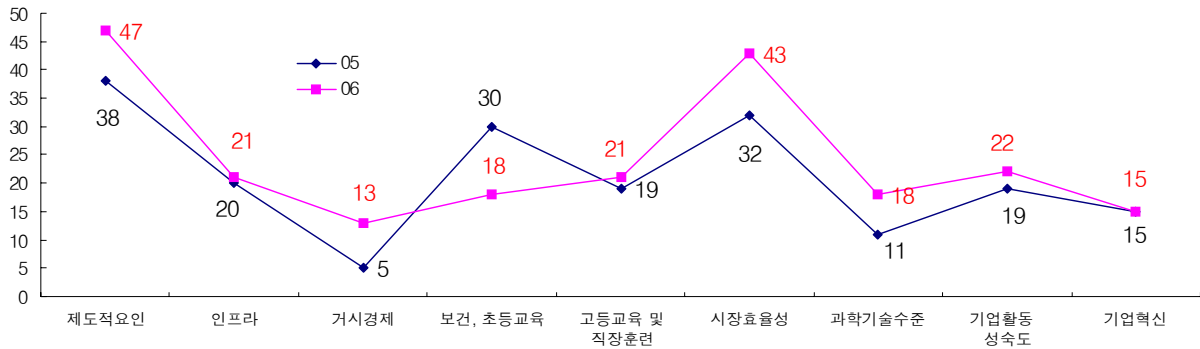
⇒ 경제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논쟁, 양극화논란, 외국자본의 유입 논란 등 대내외적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경쟁력 하락

2) WEF

□ WEF 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볼 때, 기본요인 분야(22위), 효율성 증진 분야(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20위) 등 3대 분야 모두가 '05년 대비 각각 2단계, 5단계, 3단계 하락

- 9개 부문별로는 10위권 안에 한 분야도 들지 못했으며 거시경제 환경(13위), 기업혁신(15위), 과학기술수준(18위) 등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제도적 요인(47위)과 시장효율성(43위)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아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림 6> 우리나라의 9개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 세부 항목별로는 이자율(6위), 고등학교 입학률(2위), 인터넷 이용자수(4위), 기업의 R&D 지출 적극성(9위) 등이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 복잡한 창업절차(85위), 정부규제완화(50위), 정부정책·계약의 정실성 (46위)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86위) 등 민간부문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 개선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개혁(78위)과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 66위), 금융개혁(은행 건전성, 82위)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 등락요인 분석

가. 통계-설문 자료 비교 분석

1) 통계-설문 자료 전체 추이 비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의 등락은 설문 자료의 순위 등락이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

- IMD 지표의 경우, '05년 6단계 순위상승과 '06년 9 단계 순위하락은 통계자료 보다는 설문자료의 순위등락과 깊은 상관관계
- WEF 지표에서도, 통계자료에서는 '05년 대비 1.1등 하락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설문자료에서는 11.7등이 하락함으로써, 전체 국가경쟁력 하락을 주도

⇒ 설문조사 시점이 IMD, WEF 모두 금년초로, 국내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²⁵⁾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표 16> 경쟁력 순위의 자료별 분석 ('04년~'06년)

| 구 분 | '04 | | '05 | | '06 |
|---------------------|-------------|--------------|-------------|---------------|-------------|
| IMD 종합경쟁력 순위 | 35 | ↑ 6 | 29 | ↓ 9 | 38 |
| 통계순위 (n=184) | 24.6 | ↓ 0.6 | 25.2 | ↓ 0.2 | 25.4 |
| 설문순위 (n=113) | 38.1 | ↑ 5.4 | 32.7 | ↓ 8.2 | 40.9 |
| WEF 국가경쟁력 순위 | - | - | 19 | ↓ 5 | 24 |
| 통계순위 (n=23*) | - | - | 31.6 | ↓ 1.1 | 33.6 |
| 설문순위 (n=66) | - | - | 33.6 | ↓ 11.7 | 45.3 |

* WEF 경쟁력 순위 산출에 쓰이는 통계 자료는 24개이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06년에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

2) 경쟁력 지표의 분야·부문별 통계-설문 자료 비교

□ IMD 경쟁력 지표의 분야별 순위 변화 양상도 해당분야의 설문 자료 변화 양상과 유사

25) 국가채무논쟁, 증세논쟁, 양극화 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환율 등의 대외불안요인 등

○ 특히, 설문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경영효율분야의 순위변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영효율 분야의 경우 설문조사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순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인의 인식과 현실(통계)간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표 17> IMD 경쟁력 분야별 통계-설문 자료 비교 분석('04년~'06년)

| 구 분 | | '04 | 전년대비 변화 | '05 | 전년대비 변화량 | '06 |
|------------|-----------|------|------------|------|-------------|------|
| 경제운 영성과 | 경쟁력 순위 | 49 | 6 ↑ | 43 | 2 ↑ | 41 |
| | 통계 (n=68) | 26.0 | 1.1 ↓ | 27.0 | 0.2 ↓ | 27.2 |
| | 설문 (n=4) | 38.0 | 7 ↑ | 37.0 | 4.8 ↑ | 32.3 |
| 정부행 정효율 | 경쟁력 순위 | 36 | 5 ↑ | 31 | 16 ↓ | 47 |
| | 통계 (n=31) | 17.5 | 5.7 ↑ | 23.2 | 2.0 ↓ | 25.1 |
| | 설문 (n=40) | 40.4 | 4.7 ↑ | 35.8 | 7.9 ↓ | 43.7 |
| 기업경 영효율 | 경쟁력 순위 | 29 | 1 ↑ | 30 | 15 ↓ | 45 |
| | 통계 (n=29) | 30.1 | 0.1 ↓ | 30.3 | 2.7 ↑ | 27.6 |
| | 설문 (n=38) | 36.0 | 4.0 ↓ | 32.0 | 10.8 ↓ | 42.8 |
| 발전인 프라 | 경쟁력 순위 | 27 | 4 ↑ | 23 | 1 ↓ | 24 |
| | 통계 (n=58) | 23.4 | 2.1 ↑ | 21.4 | 1.0 ↓ | 22.4 |
| | 설문 (n=31) | 36.8 | 7.7 ↑ | 29.1 | 7.2 ↓ | 36.3 |

□ WEF 경쟁력 지표의 분야에서는,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분야의 설문자료에서 큰 폭의 순위하락이 있었음이 밝혀져

○ '기본요인'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의 통계 자료의 경우, 미미한 정도나마 순위가 상승한 반면,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는 통계 자료에서도 전년대비 순

위가 떨어졌음.

<표 18> WEF 경쟁력 분야별 통계-설문 자료 비교 분석

| 구 분 | | '05 | '06 | 변화 |
|---------------|-----------|------|------|-------|
| 기본요인 | 경쟁력 순위 | 20 | 22 | ▼2 |
| | 통계 (n=12) | 35.8 | 34.2 | △ 1.7 |
| | 설문 (n=23) | 38.0 | 50.1 | ▼12.1 |
| 효율성 증진 | 경쟁력 순위 | 20 | 25 | ▼5 |
| | 통계 (n=10) | 30.6 | 35.4 | ▼ 4.8 |
| | 설문 (n=28) | 37.8 | 53.9 | ▼16.1 |
| 기업혁신 및 성숙도 | 경쟁력 순위 | 17 | 20 | ▼3 |
| | 통계 (n=1) | 11.0 | 9.0 | △ 2.0 |
| | 설문 (n=15) | 19.0 | 21.9 | ▼ 2.9 |

나. 지표의 분야·부문별 등락 요인

1) IMD 경쟁력 지표의 분야·부문별 등락 요인

□ IMD 종합경쟁력 지표에서 '04~'06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항목은 40개(통계 26개, 설문 14개), 상승 추세에 있는 항목은 34개(통계 25개, 설문 9개)로 나타났다.

① 경제운영성과 분야

- '관광수입', '생계비지수', '사무실 임대료' 등은 경쟁력 순위상 하위권이면서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항목들로서,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반면, '민간용역수출 실질증가율'과 '교역비중' 등은 '04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중상위권 이상으로 도약

<표 19> '04년~'06년 주요 하락 / 상승 추세 항목 : 경제운영성과

| 구분 | 항 목 | '04순위 | '05 순위 | '06 순위 | 자료 종류 |
|----|----------------------|-------|-----------|-----------|----------|
| 하락 | 실질 GDP성장률 | 22 | 26 | 31 | 통계 |
| | 정부 최종소비지출 실질성장률 | 16 | 20 | 22 | 통계 |
| | 총국내투자-실질성장률 | 19 | 38 | 42 | 통계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실질 증가율 | 1 | 31 | 38 | 통계 |
| | 관광수입 (GDP비중) | 48 | 49 | 50 | 통계 |
| | 생계비지수 | 55 | 56 | 59 | 통계 |
| | 사무실 임대료 | 45 | 48 | 50 | 통계 |
| 상승 |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 실질성장률 | 58 | 57 | 40 | 통계 |
| | 경제의 탄력성 | 43 | 42 | 38 | 설문 |
| | 민간용역수출 실질증가율 | 52 | 31 | 10 | 통계 |
| | GDP 대비 교역비중 | 49 | 26 | 24 | 통계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36 | 32 | 19 | 통계 |
| | 연구개발시설 재배치의 경제 위협 정도 | 49 | 35 | 27 | 설문 |
| | 취업률 | 25 | 23 | 20 | 통계 |

② 정부행정효율 분야

- '중앙정부의 부채 실질증가율'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05년과 '06년에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표
- 한편, 정부행정효율 분야에서 상승 추세를 보인 항목들은 미미한 수준에서 순위 상승

<표 20> '04년~'06년 주요 하락 / 상승 추세 항목 : 정부행정효율

| 구분 | 항 목 | '04순위 | '05 순위 | '06 순위 | 자료 종류 |
|----|------------------------|-------|-----------|-----------|----------|
| 하락 |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10억불) | 6 | 36 | 37 | 통계 |
| | 중앙정부의 부채-실질증가율 | 12 | 49 | 54 | 통계 |
| | 실질개인부담 | 24 | 32 | 45 | 설문 |
| | 이민관련 법이 회사에 위협되지 않는 정도 | 49 | 53 | 59 | 설문 |
| 상승 | 국가별 신용등급 | 35 | 34 | 33 | 통계 |
| | 정부 정책방향의 일관성 | 54 | 52 | 49 | 설문 |
| | 정치불안 위험 | 55 | 51 | 48 | 설문 |

③ 기업경영효율 분야

- ‘상급 경영진의 국제경험 정도’는 경쟁력 순위 변화가 5위→18→41위로 연
간 하락세가 큰 폭으로 나타남.
- 한편,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 구인 용이도’나 ‘국민문화의 외국에 대한
개방성’ 항목은 기업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지표임.
- 반면, ‘주식시장 계수’,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등은 3년동안 큰 폭의 순위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 통계 자료임.

<표 21> ‘04년~’06년 주요 하락 / 상승 추세 항목 : 기업경영효율

| 구분 | 항 목 | '04순위 | '05 순위 | '06 순위 | 자료 종류 |
|----|---------------------|-------|-----------|-----------|----------|
| 하락 | 금융기법 잘 아는 사람 구인 용이도 | 45 | 46 | 61 | 설문 |
| | 상급 경영진의 국제경험 | 5 | 18 | 41 | 설문 |
| | 국민문화의 외국에 대한 개방성 | 49 | 53 | 55 | 설문 |
| |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 21 | 28 | 48 | 설문 |
| | 사회가치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 14 | 19 | 48 | 설문 |
| 상승 | 제조업단위 노동비용 | 34 | 27 | 23 | 통계 |
| |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 42 | 37 | 32 | 설문 |
| | 경제활동 참가율 | 34 | 32 | 28 | 통계 |
|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47 | 16 | 15 | 통계 |
| | 투자위험 | 36 | 35 | 33 | 통계 |
| | 주식시장의 자본 전입 | 55 | 31 | 27 | 통계 |
| | 주식시장 계수 | 48 | 47 | 9 | 통계 |

④ 발전인프라 분야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 항목이 대표적으로 지속 하락세를 보이는 취약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과학 기술분야 학위 취득자 비중’, ‘과학논문 인용회수’ 등 경쟁력 순위상 상위권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도 이어지는 강점 분야임.

<표 22> '04년~'06년 주요 하락 / 상승 추세 항목 : 발전인프라

| 구분 | 항 목 | '04 순위 | '05 순위 | '06 순위 | 자료 종류 |
|----------------------|--------------------------|-----------|-----------|-----------|----------|
| 하락 |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 14 | 31 | 34 | 설문 |
|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간호사 1인당 환자수) | 42 | 48 | 49 | 통계 |
|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 13 | 22 | 48 | 설문 |
| 상승 | 전화회선수(인구 천명당) | 32 | 20 | 17 | 통계 |
| |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 15 | 12 | 11 | 통계 |
| | 과학 기술분야 학위 취득자 비중 | 14 | 8 | 7 | 통계 |
| | 과학논문 인용회수 | 16 | 14 | 12 | 통계 |
| | 이산화탄소 배출 | 42 | 38 | 36 | 통계 |
| | 중등 교사-학생 비율 | 49 | 45 | 41 | 통계 |
| | 교육체계가 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도 | 52 | 43 | 38 | 설문 |
| 대학교육이 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도 | 59 | 52 | 50 | 설문 | |

2) WEF 경쟁력 지표의 분야·부문별 등락 요인

□ '05년 대비 순위가 하락한 항목은 71개(통계 14개, 설문 57개), 상승 한 항목은 15개(통계 6개, 설문 9개)임.

① 기본요인 분야

- '05년과 대비해 볼 때,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정부 규제완화',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 등 정부 정책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항목들과,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들에서 대폭 순위가 하락. 또한 '실질실효환율'의 경우 통계 자료 중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한 항목
- 반면, '초등교육 순 취학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순위 상승이 있었음. 초등학교 순 취학률이 상승한 것은 '05년 초등교육 총 취학률에서 순취학률로 바뀐 것이 원인

<표 23> 주요 상승 / 하락 항목 : 기본요인

| 구분 | 항목명 | 자료 | '05순위 | '06순위 | 변화 |
|----|-------------------------|----|-------|-------|-----|
|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 | 52 | 40 | 12 |
| |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설문 | 73 | 68 | 5 |
| | 평균수명 | 통계 | 34 | 29 | 5 |
| | 15~49세 인구중 AIDS 환자비율 | 통계 | 5 | 1 | 4 |
| | 초등교육 순 취학률('05년은 총 취학률) | 통계 | 53 | 4 | 49 |
| 하락 |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 설문 | 41 | 51 | -10 |
| |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 | 설문 | 38 | 67 | -29 |
| |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정도 | 설문 | 26 | 46 | -20 |
| |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 설문 | 32 | 73 | -41 |
| | 정부 규제완화 | 설문 | 14 | 50 | -36 |
| |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설문 | 36 | 63 | -27 |
| |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 설문 | 52 | 86 | -34 |
| |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 | 설문 | 45 | 57 | -12 |
| |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 설문 | 43 | 76 | -33 |
| | 실질실효환율 | 통계 | 85 | 111 | -26 |
| | 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설문 | 55 | 68 | -13 |

② 효율성 증진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 ‘조세의 근로 투자욕 저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신기술도입 기여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노사 협력’ 등 설문 항목들에서 대폭 하락함. 또한,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의 경우 통계 자료이지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의 순위하락은 우리의 절차 수 증가가 아니라(변동 없음) 다른 나라의 절차 수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임.
-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 순위 상승이 뚜렷했던 항목은 ‘임금결정의 탄력성’ 정도에 그침.

<표 24> 주요 상승 / 하락 항목 : 효율성 증진

| 분야 | 항목명 | 자료 | '05순위 | '06순위 | 변화 |
|----|---------------------|----|-------|-------|-----|
| 상승 | 임금결정의 탄력성 | 설문 | 42 | 28 | 14 |
| 하락 | 경영대학(원)의 질 | 설문 | 38 | 53 | -15 |
|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정도 | 설문 | 31 | 78 | -47 |
| | 조세의 근로 투자욕 저해정도 | 설문 | 27 | 72 | -45 |
| |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 | 통계 | 74 | 85 | -11 |
| | 무역장벽 정도 | 설문 | 42 | 56 | -14 |
| |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 설문 | 61 | 95 | -34 |
| |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 | 설문 | 41 | 66 | -25 |
| | 노사협력 | 설문 | 81 | 114 | -33 |
| | 고위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임명정도 | 설문 | 37 | 59 | -22 |
| | 고급인력 해외유출 위험 | 설문 | 26 | 45 | -19 |
| | 은행대출의 용이성 | 설문 | 46 | 89 | -43 |
|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설문 | 31 | 69 | -38 |
| | 은행 건전성 | 설문 | 71 | 92 | -21 |
|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 설문 | 48 | 61 | -13 |
| |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기술도입 기여도 | 설문 | 56 | 95 | -39 |

③ 기업혁신 및 성숙도

- 대체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는 순위 변동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항목들이 적은 편임.
- ‘조직원에 대한 권한위임’과 ‘대학-기업간 R&D 연구협력’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순위 하락이 큰 편임.
- 반면,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위 상승이 좀 더 두드러졌던 항목임.

<표 25> 주요 상승 / 하락 항목 : 기업혁신 및 성숙도

| 분야 | 항목명 | 자료 | '05순위 | '06순위 | 변화 |
|----|------------------|----|-------|-------|-----|
| 상승 |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 | 설문 | 33 | 28 | 5 |
| 하락 | 조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 설문 | 23 | 38 | -15 |
| | 대학-기업간 R&D 연구협력 | 설문 | 10 | 16 | -6 |

3. 경쟁력 순위 항목의 IMD · WEF 비교

- 두 기관의 평가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하거나(통계) 유사한 평가항목으로 는 약 25개 항목 정도로 나타났음. 26)
- 통계 자료의 경우 동일한 출처와 수치라 하더라도 평가대상국이 다르고 비교연도의 문제가 있어 각기 다른 순위결과로 평가
- 더욱이 설문 자료의 경우는 평가대상의 상이함뿐만 아니라 설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위결과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나,
- 상승과 하락 즉, 추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26) 이 외에 의미상 일치하는 평가항목도 있었으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가장 유사한 평가항목만을 선별한 것임

□ 대부분 항목의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몇몇 항목에 있어서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거나, 같은 항목이지만 이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요인 혹은 악화요인으로 보는 각 기관의 입장차이 발견

○ 교육시스템의 질, 주식시장의 자본조달 용이성, PC 보유대수 등은 WEF에서는 하락, IMD에서는 상승하는 등 그 추세가 반대로 나타났으며

- 교육시스템의 질을 묻는 항목에서 WEF에서는 '05년 31위에서 '06년 38위로 7단계 하락하였지만, IMD에서는 '05년 43위에서 '06년 38위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식시장의 자본조달 용이성을 묻는 항목에서 WEF는 '05년 48위에서 '06년 61위로 13단계 하락하였지만, IMD에서는 '05년 37위에서 '06년 36위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항목인 PC 보유 대수를 묻는 항목에서도 WEF는 '05년 8위에서 '06년 15위로 7단계 하락하였지만, IMD에서는 '05년 22위에서 '06년 21위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실효환율 절상은 WEF에서는 경쟁력 악화요인으로 평가해 순위하락을, IMD에서는 기초경제 여건의 강화를 반영하는 측면을 고려해 순위상승으로 나타났음.

- 이 항목은 WEF는 '05년 85위에서 '06년 111위로 26단계 하락하였지만, IMD에서는 '05년 39위에서 '06년 36위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 주요 유사항목 비교

| | WEF | | | IMD | | |
|--|------|------|-----|------|------|-----|
| | 2005 | 2006 | 등락 | 2005 | 2006 | 등락 |
| 인구 100명당 전화선 수 | 17 | 14 | △3 | 20 | 17 | △3 |
| 소비자 물가상승률 | 52 | 40 | △12 | 45 | 32 | △13 |
| 평균수명 | 34 | 29 | △5 | 35 | 32 | △3 |
| 기업경영윤리 | 35 | 38 | ▼3 | 36 | 40 | ▼4 |
|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 52 | 86 | ▼34 | 35 | 58 | ▼23 |
| 항만인프라의 질 | 19 | 27 | ▼8 | 27 | 33 | ▼6 |
|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 31 | 32 | ▼1 | 15 | 35 | ▼20 |
| 재정흑자/GDP비율 | 14 | 22 | ▼8 | 14 | 19 | ▼5 |
| 저축률 | 10 | 16 | ▼6 | 9 | 10 | ▼1 |
| 교육시스템의 질 | 31 | 38 | ▼7 | 43 | 38 | 5 |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31 | 69 | ▼38 | 24 | 36 | ▼12 |
|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 48 | 61 | ▼13 | 37 | 36 | △1 |
|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 | 30 | 36 | ▼6 | 33 | 34 | ▼1 |
| 인구 만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 3 | 4 | ▼1 | 6 | 6 | - |
| 인구 100명당 PC대수 | 8 | 15 | ▼7 | 22 | 21 | △1 |
| 기업마케팅활동의 성숙도 | 24 | 27 | ▼3 | 19 | 30 | ▼11 |
|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 | 27 | 31 | ▼4 | 37 | 44 | ▼7 |
| 실질실효환율(WEF) 환율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IMD) | 85 | 111 | ▼26 | 39 | 36 | △3 |
| 기업의 직장훈련 투자정도 | 18 | 19 | ▼1 | 25 | 43 | ▼18 |
| 대학-기업간 R&D 연구 협력 | 10 | 16 | ▼6 | 32 | 51 | ▼19 |
| 수학 과학 교육의 질 | 25 | 23 | △2 | 22 | 25 | ▼3 |
| 재정흑자/GDP 비율 | 14 | 22 | ▼8 | 14 | 19 | ▼5 |
| 고급인력 해외 유출 위험 | 26 | 45 | ▼19 | 25 | 40 | ▼15 |
| 노동자-고용자간 협력 정도 | 81 | 114 | ▼33 | 60 | 61 | ▼1 |
| 고위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임명정도 | 37 | 59 | ▼22 | 32 | 50 | ▼18 |

IV.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1. 요약

□ IMD와 WEF의 경쟁력 순위를 분석해본 결과,

-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거시경제의 불안정, 재정적자, 자국통화 가치상승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유럽 강소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높은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 활동 등으로 인해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 다만, 대만은 '05년 대비하여 '06년의 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하락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양 지표의 순위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부문(통계)과 사회시스템(설문)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국과 강소국은 사회시스템의 안정으로 인해 경제부문의 등락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주는 반면,
- 아시아 경쟁국은 경제보다는 사회시스템 부문의 순위등락에 따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변동한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06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05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주로 설문자료에서 주도된 것으로 분석

- IMD 9단계 하락 (29위→38위), WEF 5단계 하락 (19위→24위)
- '06년 IMD 경쟁력 지표에서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이 8.24등으로 우리나라

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9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볼 때 설문 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효율성 분야의 순위 하락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

- WEF 자료에서 설문자료 평균 순위 하락은 11.7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5단계 하락의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또한, 분야별로는 기본요인 분야와 효율성 증진 분야의 설문자료에서 큰 폭의 순위하락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분야·부문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공공재정, 거시경제안정 등 거시총량 부문과 기술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하드웨어 투자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대외개방, 정부 효율 및 제도적 여건, 노사관계, 교육의 질 등에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IMD·WEF를 비교해본 결과 국가경쟁력 순위와 그 등락 폭은 상이하지만 그 추세나 지적하는 강점과 약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

- IMD·WEF 이외에 NGO,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지닌 국제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이 진단하는 우리의 취약점과 문제점은 역시 대체로 일치

- 물론, 일부항목에서의 추세변화 차이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큰 문제는 아님.

2. 경쟁력 강화 방안

가. 부문별 대응 방향

□ IMD와 WEF 경쟁력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점과 대응 방향은 다음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7> 우리나라의 취약점과 대응 방향

| 부문 | 주요 취약점 | 대응 방향 |
|------------------------|---|---|
| 국제화 개방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지수 및 무역장벽 정도 · 외국인 직접 투자 · 해외직접투자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
| 정부 효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의 일관성 · 중앙은행정책 · 정부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혁신 ·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통해 정책수행의 효율성 극대화 |
| 기업경영 및 노동 부 문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 소액주주 보호 ·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증진 · 노사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정비 ·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 근로환경 개선 |
| 사 회 적 제반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결속 · 사회 정의 ·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의 유용 · 정치 불안 및 정치인의 부패 · 여성의 사회적 지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시스템의 미성숙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 · 공공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정부신뢰 회복 · 지역공동체 육성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스템의 질 · 경영대학원의 질 · 산학연 지식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구조개혁과 인적자원의 국제적 활용체계 구축 |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불리한 교역조건을 개선

○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 및 한·일 FTA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외국인투자의 능동적 유치와 토착화를 지향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잔존 규제와 제도를 조속히 해소

○ 투자관련 제도나 관행의 국제 표준화

-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 마련
- 전방위적 개방화의 추진으로 선진국과의 지식 및 제도격차를 동시에 해결
 -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시행
 - 노사관계법 및 제도의 선진화
- 정부의 투명성 제고
 - 정책수립과정을 공개, 규제대상자들의 제안을 받는 등 규제대상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
 - 내외국민에게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체계 및 정보 공급체계가 필요
- 사회시스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의 경제·사회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규범·제도·관습·문화 등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사회정의, 사회응집력 등 사회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 확보
 -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을 제고
 -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한 평가시스템 전면 개편
- IT관련 서비스 품질 기술 등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나 제반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이 시급
 - 기업간 기술협력, 사이버보안 강화, 기술개발에 대한 법적 환경개선 등 21세기 디지털 경제에 걸 맞는 경쟁력 배양이 필요한 상황

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 IMD·WEF 평가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바탕으로 이들 평가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제도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임.
 -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으로 이미 상당부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 필요
 - 대외적으로는 정확한 통계의 제공과 함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과 비전하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홍보되어야 함.
- 경쟁력 평가 지표 항목들 가운데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등락폭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특히 설문은 경제·사회 환경이 왜곡되지 않고 최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내외적 홍보에 주력
 - 경쟁력 평가기관과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용이한 접근을 위한 홍보체제 도입
 -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개별 홍보보다는 통합된 정보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이제 정책적 역점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
 - 취약점으로 드러난 국제화, 정부효율성, 기업경영 효율성, 사회적 제반여건, 교육 등 경쟁력 평가 주요부문 모두에 걸친 광범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 특히 현 시점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 및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불신 풍조 등임.
-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정부, 국민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우리는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등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
 - 특히 재벌경영의 폐해, 부패로 인한 부의 축적 등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상호불신, 계층간 박탈감 등은 건강한 사회구조형성을 저해
- 시장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부-국민 간 상호신뢰가 전제될 필요
 - 기업의 경영활동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을 국민은 신뢰하고 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시장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경제·사회를 망라한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장, 정부, 국민간의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첨부 1] IMD 종합경쟁력 '04~'06년 순위

□경제운영성과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국내경제 | 국내총생산 (10억불) | 통계 | 10 | 10 | 11 |
| | 국내총생산 (10억불, 실질구매력기준) | 통계 | 14 | 14 | 14 |
| | 민간 최종소비지출 (10억불) | 통계 | 13 | 13 | 12 |
| | 민간 최종소비지출 (% GDP 비중) | 통계 | 45 | 47 | 45 |
| | 정부 최종소비지출 (10억불) | 통계 | 16 | 16 | 14 |
| | 정부 최종소비지출 (% GDP 비중) | 통계 | 42 | 45 | 46 |
| | 국내 총투자 (10억불) | 통계 | 11 | 9 | 9 |
| | 국내 총투자 (% GDP 비중) | 통계 | 6 | 3 | 4 |
| | 국내 총저축 (10억불) | 통계 | 11 | 10 | 10 |
| | 국내 총저축 (% GDP 비중) | 통계 | 10 | 9 | 9 |
| | 산업 구성비율 (% GDP 비중)-농업3%, 제조업36%, 서비스업60% | 통계 | | | |
| | 실질 GDP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31 | 26 | 22 |
| | 1인당 실질 GDP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25 | 24 | 26 |
| |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실질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40 | 57 | 58 |
| | 정부 최종소비지출-실질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22 | 20 | 16 |
| | 총국내투자-실질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42 | 38 | 19 |
| | 국내총저축-실질증가율 (% 자국화폐기준) | 통계 | | 18 | 14 |
| | 경제의 탄력성 (경기순환에 대한 경제의 탄력성) (서베이, 1-10점) | 설문 | 38 | 42 | 43 |
| | 국민1인당 GDP (\$) | 통계 | 33 | 34 | 35 |
| | 1인당 국내총생산 (\$, 실질구매력기준) | 통계 | 33 | 34 | 35 |
| |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 (\$) | 통계 | 34 | 35 | 35 |
| | 1인당 정부 최종소비지출 (\$) | 통계 | 35 | 35 | 35 |
| | 1인당 국내 총투자 (\$) | 통계 | 30 | 30 | 30 |
| | 1인당 국내 총저축 (\$) | 통계 | 27 | 28 | 28 |
| | 거시경제지표 예측-실질GDP 성장률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15 | 22 | 14 |
| | 거시경제지표 예측-인플레이션율 (%) | 통계 | 33 | 37 | 35 |
| 거시경제지표 예측-실업률 (% 근로인구대비) | 통계 | 5 | 3 | 3 | |
| 거시경제지표 예측-경상수지 (% GDP/GNP 대비 비중) | 통계 | 22 | 16 | 22 | |
| 국제무역 | 경상계정수지 (10억불, 마이너스=적자) | 통계 | 15 | 9 | 14 |
| | 경상계정수지 (% GDP비중) | 통계 | 21 | 16 | 25 |
| | 무역수지 (10억불, 마이너스=적자) | 통계 | 15 | 7 | 20 |
| | 무역수지 (% GDP비중) | 통계 | 21 | 17 | 23 |
| | 민간 용역수지 (10억불, 마이너스=적자) | 통계 | 55 | 52 | 53 |
| | 민간 용역수지 (% GDP비중) | 통계 | 48 | 49 | 48 |
| | 상품수출 (10억불) | 통계 | 12 | 12 | 12 |
| | 상품수출 (% GDP비중) | 통계 | 21 | 18 | 23 |
| | 상품수출-실질 증가율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33 | 10 | 13 |
| | 민간용역수출(10억불) | 통계 | 16 | 15 | 16 |
| | 민간용역수출 (% GDP비중) | 통계 | 36 | 34 | 41 |
| 민간용역수출-실질 증가율 (% US\$) | 통계 | 10 | 31 | 52 | |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귀 제 무 요 | 산업부문별 수출액 구성비 (% , 총수출대비)-농업2%, 제조업84%, 서비스업14%) | 통계 | | |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 (10억불) | 통계 | 49 | 48 | 26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 (% , GDP비중) | 통계 | 37 | 34 | 1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38 | 31 | 1 |
| | 산업부문별 수입 구성비 (% , 총수출대비)-농업7%, 제조업74%, 서비스업19%) | 통계 | | | |
| | GDP대비 교역비중 ((수출/수입)/GDP*2) | 통계 | 24 | 26 | 49 |
| | 교역조건지수 ('2000=100지수 ,)(수출단위가격지수/수입단위가격지수) | 통계 | 52 | 52 | 27 |
| | 관광수입 (% ,GDP비중 , 외국인방문 관광수입) | 통계 | 50 | 49 | 48 |
| 귀 제 투 자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10억불) | 통계 | 25 | 23 | 28 |
| | GDP 대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 통계 | 34 | 32 | 38 |
|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10억불) | 통계 | 30 | 32 | 25 |
|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 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37 | 38 | 40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0억불) | 통계 | 19 | 32 | 36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 GDP비중) | 통계 | 41 | 38 | 54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10억불) | 통계 | 33 | 33 | 32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29 | 50 | 38 |
| | 해외 직접투자액 수지 (10억불)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 | 통계 | 44 | 46 | 16 |
| | 해외 직접투자액 수지 (% ,)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 | 통계 | 31 | 35 | 21 |
| | 직접투자스톡의 순포지션 (10억불) (해외투자스톡-외국인투자스톡) | 통계 | 33 | 31 | 21 |
| | GDP 대비 직접투자스톡의 순포지션 (%) (해외투자스톡-외국인투자스톡) | 통계 | 24 | 22 | 21 |
| | 생산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7 | 38 | 45 |
| | 연구개발시설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7 | 35 | 49 |
| | 서비스분야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7 | 33 | 39 |
| | 자산거래 투자 자산 (10억불) | 통계 | 28 | 31 | 23 |
| | 자산거래 투자 부채 (10억불) | 통계 | 18 | 16 | 26 |
| 고 용 | 총 취업자수 (백만명) | 통계 | 16 | 16 | 16 |
| | 취업률 (% , 취업자/전체인구) | 통계 | 20 | 23 | 25 |
| | 고용증가율 (% , 증가율 추정치) | 통계 | 34 | 21 | 42 |
| | 산업별 고용 비중 (%)-농업8.1%, 제조업27.5%, 서비스업64.4% | 통계 | | | |
| | 공공부문 고용 비중 (%) | 통계 | 3 | 2 | 6 |
| | 실업률 (% , 경제활동 인구대비) | 통계 | 6 | 4 | 4 |
| | 장기 실업률 (% , 노동력 인구 기준) | 통계 | 1 | 1 | 1 |
| | 청년 실업률 (% , 24세 이하 실업/전체실업) | 통계 | 11 | 13 | 10 |
| 가 격 |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 연평균 증가율) | 통계 | 32 | 45 | 42 |
| | 생계비지수 (뉴욕=100, 주거비 제외 재화용역구매 번들) | 통계 | 59 | 56 | 55 |
| | 아파트임대료 (\$, 주요도시의 방3개 아파트) | 통계 | 35 | 35 | 35 |
| | 사무실임대료 (\$/평방미터당 연간비용) | 통계 | 50 | 48 | 45 |

□ 정부행정보효율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F0 F0 재정 |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10억불) | 통계 | 9 | 8 | 3 |
| |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 , GDP비중) | 통계 | 19 | 14 | 7 |
| |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10억불) | 통계 | 37 | 36 | 6 |
| |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 , GDP비중) | 통계 | 21 | 14 | 4 |
| |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10억불) | 통계 | | 30 | 29 |
| |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 , GDP비중) | 통계 | 14 | 17 | 17 |
| | 중앙정부의 부채-실질증가율 (%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54 | 49 | 12 |
| | 이자 지급액 (% , 현행세입) | 통계 | 10 | 8 | 9 |
| | 공공재정의 관리 (다음 2년간 개선될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2 | 17 | 27 |
| | 총외환보유고 (금 및 공식리저브 포함)(10억SDR)(금은온스당 35SDR로평가) | 통계 | 4 | 4 | 4 |
| | 일반정부지출 (% , GDP비중) | 통계 | 16 | 17 | 8 |
| | 총일반정부부채(10억불) | 통계 | 37 | | |
| | 총일반정부부채(GDP 비중) | 통계 | 12 | | |
| | 재정 정책 | 총조세수입의 총합 (% , GDP비중) | 통계 | 19 | 23 |
| 개인소득세의 총합 (이윤, 소득, 자본이득)(% , GDP비중) | | 통계 | 19 | 17 | 15 |
| 법인세의 총합 (이윤, 소득, 자본 이득) (% , GDP비중) | | 통계 | 41 | 47 | |
| 간접세 수입의 총합 (제품 및 용역) (% , GDP비중) | | 통계 | 21 | 22 | |
| 자본 및 재산세의 총합 (% , GDP비중) | | 통계 | 49 | 50 | |
| 종업원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의무부담비율)(% , GDP비중) | | 통계 | | 35 | 25 |
|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의무부담비율)(% , GDP비중) | | 통계 | | 16 | 16 |
| (종업원 고용주) 사회보장 기여비율 | | 통계 | 23 | | |
| 유효 개인소득세율 (% , GDP대비, 국민1인당) | | 통계 | 14 | 13 | 13 |
| 기업이윤에 대한 평균 법인세율 (% , 세전이윤대비) | | 통계 | 18 | 16 | 14 |
| 소비세율 (VAT/GST) | | 통계 | 6 | 5 | |
| 종업원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의무부담비율)(% , 1인당 GDP대비) | | 통계 | 26 | 26 | 25 |
|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비율 (의무부담비율)(% , 1인당 GDP대비) | | 통계 | 16 | 16 | 16 |
| 실질개인부담 (환급후 개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45 | 32 | 24 |
| 실질 법인세 (혁신기업가적 활동을 고취시키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6 | 36 | 33 |
| 조세회피 (서베이, 1~10점) | | 설문 | 31 | 31 | 45 |
| 제도적 여건 | | 실질 단기이자율 (실질은행할인율) | 통계 | 9 | 25 |
| | 자본 비용 (경쟁력 있는 사업개발을 어렵게 하지 않는 정도,서베이,1-10점) | 설문 | 42 | 33 | 43 |
| | 이자율 스프레드 (% , 대출금리-예금금리) | 통계 | 11 | 7 | 7 |
| | 국가별 신용등급 (0-100점 기준, 기관투자자전문지 IMI평가) | 통계 | 33 | 34 | 35 |
| | 중앙은행정책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4 | 42 | 38 |
| | 환율정책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6 | 39 | 34 |
| | 환율안정지수 ('01년 대비 '03년의 SDR대비 자국화폐 환가지수) | 통계 | 55 | 2 | 7 |
| | 정부의 정책방향의 일관성(서베이,1-10점) | 설문 | 49 | 52 | 54 |
| | 법과 제도의 틀이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9 | 43 | 40 |
| |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31 | 32 |
| 정부의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2 | 33 | 40 | |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제도적여건 | 정당 (현재 당연한 경제적 도전을 잘 이해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9 | 49 | 54 |
| | 정부의 투명성 (서베이,1~10점) | 설문 | 38 | 34 | 41 |
| | 공공서비스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5 | 20 | 32 |
| | 관료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2 | 22 | 26 |
|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경제에 존재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3 | 33 | 42 |
| 기업관련편 | 관세당국이 상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1 | 38 | 40 |
| | 보호주의가 당신 나라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서베이,1-10점) | 설문 | 55 | 35 | 53 |
| | 공공부문의 발주계약 차여가 외국 입찰자에게 공개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1 | 39 | 56 |
| | 국제 거래에서 해외 파트너와 정부간섭 없이 자유롭게 협상 할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4 | 38 | |
| |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2 | 37 | |
| | 국내 및 해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35 | |
|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0 | 19 | |
| | 정부보조금 (민간기업과 공기업)(%, GDP비중) | 통계 | 4 | 4 | 6 |
| | 보조금이 경제발전을 해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7 | 13 | 25 |
| | 경쟁 입법이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9 | 29 | 32 |
|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법이 사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41 | 46 |
| | 정부의 가격통제가 산업의 제품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7 | 51 | 59 |
| | 암시장, 물물교환, 미등록거래가 경제개발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4 | 29 | 41 |
| | 규제의 정도가 기업의 경쟁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3 | 45 | |
| | 국내 법률에 의해 외국인 회사가 차별을 받지 않는 정도(서베이,1-10점) | 설문 | 42 | 45 | 32 |
| | 회사설립이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1 | 34 | 39 |
| |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날의 수 (일) | 통계 | 51 | 20 | 23 |
| | 노동관련 규제 (고용 및 해고관행, 최저임금제 등)가 충분히 유연한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6 | 44 | 44 |
| | 실업관련법률제정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8 | 20 | 29 |
| | 이민관련 법이 당신의 회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9 | 53 | 49 |
| 사회적제반여건 |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2 | 35 | 41 |
| | 개인적 안전과 사유재산이 적절히 보호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0 | 22 | 30 |
| |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51 | 55 |
| |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34 | 46 |
| | 소득분배-하위 20% (%) | 통계 | | | |
| | 소득분배-상위 20% (%) | 통계 | | | |
| | 차별(인종, 성, 가족배경)없이 기회균등이 부여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8 | 54 | 57 |
| | 전체 의원중 여성의원수 (%) | 통계 | 43 | 57 | 57 |
| | 총 고위관료, 상급 경영자 중에서 여성의 지위수준 정도 (%) | 통계 | 48 | 48 | 46 |
| | 여성의 수입비율 (대비, 전체적인 남녀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 | 통계 | 39 | 38 | 32 |
| 작업현장에서 괴롭힘과 폭행이 심각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4 | 42 | 36 | |

□ 기업경영화율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생 산 배 우 선 | 총생산성(PPP) (실질 구매력 기준) (PPP) (\$, 근로자 1인당GDP생산액) | 통계 | 35 | 35 | 35 |
| | 총생산성 (\$, 근로자1인당GDP생산액) | 통계 | 34 | 35 | 35 |
| | 실질 총생산성 증가율 (%, 종업원 1인당 실질GDP 증가율) | 통계 | 25 | 32 | 16 |
| | 노동생산성 (PPP) (실질 구매력 기준) (\$, 종업원 1인당 시간당 GDP(PPP)) | 통계 | 39 | 41 | 40 |
| | 농업 생산성(PPP) (실질 구매력 기준) (\$,농업종사자 1인당 GDP(PPP)) | 통계 | 35 | 38 | 37 |
| | 공업 생산성(PPP) (실질 구매력 기준) (\$, 근로자 1인당 GDP(PPP)) | 통계 | 25 | 31 | 28 |
| | 서비스업 생산성(PPP) (실질 구매력기준) (\$,서비스업종사자 1인당 GDP(PPP)) | 통계 | 39 | 40 | 39 |
| |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30 | |
| |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8 | 50 | |
| 노 사 시 장 | 보상 수준 (\$) | 통계 | 32 | 32 | 32 |
| | 제조업단위 노동비용 (%, 전년대비 변화율,) | 통계 | 23 | 27 | 34 |
| | 전문서비스직? 연봉(\$) 은행원-37,700 기업체부서장-55,000 초등학교교사-27,200 비서-22,100 | 통계 | | | 39 |
| | 관리임원 연봉(\$) CEO-152,304 엔지니어-65,704 제조업체 임원-110,947 인사담당임원-88,085 | 통계 | | | 16 |
| | 근로시간 (연간 평균 근로시간) | 통계 | 7 | 7 | 7 |
|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61 | 60 | 60 |
| |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중요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2 | 37 | 42 |
| | 노사분규 (노사분규에 의한 거주자 천명당 연간 근로상실일수) | 통계 | 43 | 45 | 44 |
| | 종업원들의 사내직업훈련 (서베이,1-10점) | 설문 | 43 | 25 | 30 |
|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등록자 포함) | 통계 | 18 | 18 | 18 |
| | 경제활동 참가율 (%, 노동인구/전체인구) | 통계 | 28 | 32 | 34 |
|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 통계 | 15 | 16 | 47 |
| | 임시직 고용 (%, 전체고용비중) | 통계 | 34 | 37 | |
| | 여성경제활동인구 (%, 여성노동력/전체노동력) | 통계 | 41 | 40 | 40 |
| |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 외국인노동력/전체노동력) | 통계 | 36 | 34 | 32 |
| | 숙련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7 | 32 | 41 |
| |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노동인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61 | 46 | 45 |
| | 두뇌유출(고학력/기술인력)이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0 | 25 | 44 |
| | 외국인 고숙련자들이 경제의 사업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1 | 27 | 42 |
| | 상급 경영진의 국제경험이 충분한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1 | 18 | 5 |
| 유능한 상급경영진을 노동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0 | 32 | 45 | |
| 금 융 | 은행부문 자산 (%, GDP비중) | 통계 | 28 | 27 | 27 |
| |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10억\$) | 통계 | | 15 | 15 |
| | 신용흐름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9 | 42 | 45 |
| | 신용카드 발급 수 (개, 국민1인당) | 통계 | 21 | 21 | 4 |
| | 신용카드 거래횟수 (거래 횟수, 국민 1인당) | 통계 | 31 | 32 | 28 |
| | 투자위험 (0-100, 유럽통화 국가 신용가치 범위,) | 통계 | 33 | 35 | 36 |
| | 벤처자본이 사업개발에 쉽게 활용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7 | 24 | 33 |
| | 은행업무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2 | 44 | 46 |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기업 | 은행 매출비율? (인구/은행원 수) | 통계 | | | |
| | 은행관련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4 | 48 | 51 |
| | 주식시장이 기업자금조달에 적절한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6 | 37 | 32 |
| | 주식시장의 자본 전입 (10억\$) | 통계 | 18 | 16 | 16 |
| | 주식시장의 자본 전입 (% GDP 비중) | 통계 | 27 | 31 | 55 |
| | 주식시장의 거래가치 (\$, 1인당 주식거래액) | 통계 | 25 | 23 | 13 |
| | 국내 공개기업 수 (공개된 기업 수) | 통계 | 7 | 7 | 8 |
| | 주식시장계수 (%) | 통계 | 9 | 47 | 48 |
| | 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3 | 46 | 55 |
| |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7 | 35 | 44 |
| | 현금흐름이 회사 자기자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1 | 28 | 40 |
| | 회사채가 기업의 경쟁 능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2 | 35 | 48 |
| | 할부금융 (% 제품수출비중) | 통계 | 36 | 53 | 51 |
| | 기업 내부 |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0 | 24 |
| 기업윤리 강령이 회사안에서 실천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40 | 36 | 38 |
|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경제전반에 인정되고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54 | 35 | 51 |
| 기업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의 관리를 감독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56 | 36 | 53 |
| 회계 감사가 기업에서 적절하게 실행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58 | 37 | |
|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52 | 39 | 53 |
| 회사에서 고객만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14 | 4 | 13 |
| 기업가정신이 공유되어진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45 | 28 | 26 |
| 마케팅 관리의 효율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0 | 19 | 18 |
| 경영자들이 그들의 사회에 대해 책임감이 높은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4 | 30 | 30 |
|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대해 경영진이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2 | 30 | 26 |
| 행태 가치 | | 글로벌리제이션이 당신의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13 | 7 |
| | 외국에서 당신 나라의 이미지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4 | 34 | 25 |
| | 국민문화가 외국의 영향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5 | 53 | 49 |
| | 당신 나라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유연하게 적응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28 | 21 |
| | 경제와 사회의 개선의 필요가 사회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지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16 | 11 | 3 |
| | 사회가치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8 | 19 | 14 |
| | 회사의 가치가 고용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4 | 24 | |

□ 발전인프라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기 본 인 프 라 | 토지면적 (km ²) | 통계 | 37 | 36 | 36 |
| | 경작면적 (m ² , 1인당) | 통계 | 52 | 52 | 51 |
| | 도시화가 국가자원을 낭비시키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6 | 27 | 25 |
| | 인구수-시장크기 (백만명) | 통계 | 18 | 17 | 17 |
| | 15세 이하 인구비중 (%) | 통계 | | | |
| | 65세 이상 인구비중 (%) | 통계 | | | |
| | 부양비율 (% , 활동가능인구 (15-64세)의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64세이상 부양율)) | 통계 | 3 | 3 | 4 |
| | 도로 (Km/Km ² , 네트워크 밀도) | 통계 | 25 | 24 | 25 |
| | 철도 (Km/Km ² , 네트워크 밀도) | 통계 | 27 | 26 | 27 |
| | 항공수송 (주항공사별 탑승객 수) | 통계 | 13 | 13 | 11 |
| | 항공수송의 질적 수준의 효율성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5 | 15 | 29 |
| | 상품과 용역의 유통인프라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5 | 33 | 41 |
| | 해운인프라(항구, 운하 등)가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3 | 27 | 33 |
| | 인프라스트럭처의 유지와 개발에 대한 계획과 재원이 적절한 정도(서베이,1-10점) | 설문 | 28 | 18 | 29 |
| |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4 | 22 | 38 |
| | 총에너지 국내 생산 (백만MTOE) | 통계 | | | 24 |
| | 단위당 총에너지 국내 생산 (백만MTOE) | 통계 | 38 | | 37 |
| | 총에너지 국내 생산비중 (% , 유류환산 톤당 전체요소) | 통계 | 43 | 42 | 42 |
| | 총 최종에너지 소비 (백만MTOE) | 통계 | | | |
| | 단위당 총 최종에너지 소비 (백만MTOE) | 통계 | | | |
| 에너지 사용효율 (kilojoules, GDP달러대비 상업용 에너지 소비량) | 통계 | 36 | 39 | 38 | |
| 제조업 고객을 위한 공업용 전력비용 (\$/kwh) | 통계 | 18 | 16 | 26 | |
| 기 술 인 프 라 |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 , GDP대비) | 통계 | 14 | 8 | 27 |
| | 인구천명당 전화회선수 (전화회선수) | 통계 | 17 | 20 | 32 |
| | 3분당 국제전화요금 (\$, 피크시간대 3분간 미국 통화) | 통계 | 37 | 32 | 52 |
| | 인구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가입자수) | 통계 | 34 | 33 | 28 |
| | 3분당 이동전화 요금 (\$, 피크시간대 3분간 미국 통화) | 통계 | | 12 | 9 |
| |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2 | 16 | 23 |
| |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 | 통계 | 11 | 12 | 15 |
| |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 (컴퓨터수) | 통계 | 21 | 22 | 27 |
| |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인터넷 사용자수) | 통계 | 6 | 6 | 5 |
| | 20시간당 인터넷 요금 (\$) | 통계 | 8 | 7 | 7 |
| | 인구 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 (회선) | 통계 | 1 | 1 | 1 |
| | 광대역통신 요금(\$/100kbits/s 매월) | 통계 | 2 | 2 | |
| | 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 (서베이,1-10점) | 설문 | 16 | 8 | 30 |
| | 기업간 기술협력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1 | 19 | 38 |
| |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0 | 20 | 38 |
| |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서베이,1-10점) | 설문 | 29 | 18 | 36 |
|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0 | 30 | |
|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백만\$) | 통계 | 7 | 7 | 9 |
| |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 | 통계 | 7 | 8 | 8 |
| |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5 | 19 | 44 |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 과학인프라 | 총 연구개발비 지출 (백만\$) | 통계 | 9 | 8 | 7 | |
| | 국민 1인당 연구개발비 지출 (\$) | 통계 | 27 | 24 | 25 | |
|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GDP대비) | 통계 | 9 | 8 | 10 | |
| |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백만\$) | 통계 | | 6 | 6 | |
| |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GDP대비) | 통계 | 7 | | | |
| |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백만\$) | 통계 | 7 | | | |
| | 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 지출 (\$) | 통계 | | 21 | 22 | |
| | 총 연구개발인력 (명, 전업연구직 기준) | 통계 | 6 | 6 | 7 | |
| |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명, 전업연구직 기준) | 통계 | 25 | 23 | 24 | |
| | 민간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명, 전업연구직 기준) | 통계 | 7 | 7 | 7 | |
| | 인구 천명당 민간기업 연구개발인력 (명, 전업연구직 기준) | 통계 | 21 | 22 | 23 | |
| |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4 | 31 | 14 | |
| |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학위 취득자의 퍼센트 (%) | 통계 | 7 | 8 | 14 | |
| | 과학논문인용회수 (건) | 통계 | 12 | 14 | 16 | |
| | 학교에서 과학교육의 적절성 (서베이,1-10점) | 설문 | 25 | 22 | 36 | |
| | 청소년의 과학에의 관심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2 | 21 | 49 | |
| | 노벨상 수상자 수 (명, '50년 이후 물리학, 화학, 생의학 및 경제학분야 수상자) | 통계 | 25 | 25 | 24 | |
| |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자 수 (명, '50년 이후 물리학, 화학, 생의학 및 경제학분야 수상자) | 통계 | 25 | 25 | 24 | |
| | 내국인 특허획득수 (건, 2000-2002년 평균) | 통계 | 3 | 4 | 3 | |
| | 해외 특허획득 건수 (건) | 통계 | 6 | 12 | 12 | |
| |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4 | 37 | 37 | |
| | 인구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 (건) | 통계 | 14 | 17 | 17 | |
| | 내국인 특허획득 수 증가율 | 통계 | 2 | 2 | 3 | |
| |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46 | 25 | 38 | |
| | 보건 및 환경 | 총보건관련지출액 (% GDP대비 비중) | 통계 | 47 | 54 | 41 |
| | | 보건관련 공공지출 (% 총보건 지출대비) | 통계 | 44 | 44 | 49 |
| | | 기대 수명 (세, 평균기대수명) | 통계 | 32 | 35 | 36 |
| | | 건강 수명 (세, 건강 수명) | 통계 | 33 | 34 | 34 |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 (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의사-767명, 간호사-623명 | | 통계 | 49 | 48 | 42 | |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 (명, 의사 1인당 환자수) 의사-767명, 간호사-623명 | | 통계 | 50 | | | |
| 보건관련 인프라스트럭처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3 | 29 | 33 | |
| 총인구대비 도시인구비 (% 총인구대비) | | 통계 | 21 | | 18 | |
| 인간개발지수 (HDR이평가한 경제/사회/교육지표의 합성) | | 통계 | 33 | 34 | 34 | |
| 작업현장에서 AIDS, 알코올, 약물남용 등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6 | 23 | 32 | |
|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율 (%, 실질 표면소비 대비) | | 통계 | 9 | 4 | 10 | |
| 오수 정화설비 (% 대상 인구대비) | | 통계 | 20 | 27 | 25 | |
| 이산화탄소 배출 (미터톤, GDP백만달러당 제조공정 CO2 배출량) | | 통계 | 36 | 38 | 42 | |
| 생태 사용량 (헥타르, 1인당 차지하는 면적) | | 통계 | 20 | 20 | 20 | |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48 | 22 | 13 | |
| 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경제가 영향을 받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2 | 44 | 41 | |
| 현행 환경보건 관련법이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지 않는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45 | 42 | 50 | |
| 삶의 질적 수준의 높고 낮음 정도 (서베이,1-10점) | | 설문 | 39 | 41 | 40 | |

| 부문 | 항목명 | 자료 | 06순위 | 05순위 | 04순위 |
|----|---|----|------|------|------|
| 교육 | 총교육비 지출액(% , GNP대비) | 통계 | 48 | 46 | 52 |
| | 초등학생-교사 비율 (명, 교사1인당 학생수) | 통계 | 56 | 54 | 56 |
| | 중등학생-교사 비율 (명, 교사1인당 학생수) | 통계 | 41 | 45 | 49 |
| | 중고등학교 취학율 (%) | 통계 | 33 | 6 | 10 |
| | 고등교육 수학율? (%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대학 이상)수학율) | 통계 | 4 | 4 | 5 |
| | 학업성적-수학, 과학 (15세 학생들의 성적) - 수학 547 , 과학 552 | 통계 | | | |
| |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8 | 43 | 52 |
|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0 | 52 | 59 |
| | 문맹률 (% , 15세 이상 성인 문맹률) | 통계 | 34 | 33 | 34 |
| | 국민들이 경제적 교양이 높은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22 | 18 | 24 |
| | 금융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도(서베이,1-10점) | 설문 | 46 | 46 | 51 |
| | 언어 능력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5 | 38 | |
|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54 | 45 | 52 |
| | 회사와 대학들 사이에 지식이전이 충분한 정도 (서베이,1-10점) | 설문 | 32 | 51 | 42 |

[첨부 2] IMD 종합경쟁력 지속 상승·하락 항목('04~'06년)

1. 상승항목

| 분야 | 항목명 | 자료 | 06 순위 | 05순위 | 04 순위 |
|---------------------------|--------------------------------------|----------|-------|------|-------|
| 경제운영성과 | 정부 최종소비지출 (% , GDP비중) | 통계 | 42 | 45 | 46 |
| |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실질성장을 (% , 실질가격, 자국화폐) | 통계 | 40 | 57 | 58 |
| | 경제의 탄력성 (경기순환에 대한 경제의 탄력성) | 설문 | 38 | 42 | 43 |
| | 국민1인당 GDP (\$) | 통계 | 33 | 34 | 35 |
| | 1인당 국내총생산 (\$, 실질구매력기준) | 통계 | 33 | 34 | 35 |
| | 민간용역수출-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10 | 31 | 52 |
| | GDP대비 교역비중 ((수출/수입)/GDP*2) | 통계 | 24 | 26 | 49 |
|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 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37 | 38 | 40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0억불) | 통계 | 19 | 32 | 36 |
| | 생산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 설문 | 37 | 38 | 45 |
| | 연구개발시설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 설문 | 27 | 35 | 49 |
| | 서비스분야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 설문 | 27 | 33 | 39 |
| | 취업률 (% , 취업자/전체인구) | 통계 | 20 | 23 | 25 |
| | 정부행정을 | 국가별 신용등급 | 통계 | 33 | 34 |
| 정부의 정책방향의 일관성 | | 설문 | 49 | 52 | 54 |
|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 | | 설문 | 48 | 51 | 55 |
| 기업경쟁력을 | 제조업단위 노동비용 (% , 전년대비 변화율) | 통계 | 23 | 27 | 34 |
| |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중요도 | 설문 | 32 | 37 | 42 |
| | 경제활동 참가율 (% , 노동인구/전체인구) | 통계 | 28 | 32 | 34 |
|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 통계 | 15 | 16 | 47 |
| | 투자위험 (0-100, 유럽통화 국가 신용가치 범위) | 통계 | 33 | 35 | 36 |
| | 주식시장의 자본 전입 (% , GDP 비중) | 통계 | 27 | 31 | 55 |
| | 주식시장계수 (%) | 통계 | 9 | 47 | 48 |
| 발전인프라 | 인구천명당 전화회선수 (전화회선수) | 통계 | 17 | 20 | 32 |
| |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 | 통계 | 11 | 12 | 15 |
| |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 (컴퓨터수) | 통계 | 21 | 22 | 27 |
| | 인구 천명당 민간기업 연구개발인력 (명, 전업연구직 기준) | 통계 | 21 | 22 | 23 |
| |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학위 취득자의 퍼센트 (%) | 통계 | 7 | 8 | 14 |
| | 과학논문인용회수 (건) | 통계 | 12 | 14 | 16 |
| | 기대 수명 (세, 평균기대수명) | 통계 | 32 | 35 | 36 |
| | 이산화탄소 배출 (미터톤, GDP백만달러당 제조공정 CO2 배출) | 통계 | 36 | 38 | 42 |
| | 중등학생-교사 비율 (명, 교사1인당 학생수) | 통계 | 41 | 45 | 49 |
| |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 설문 | 38 | 43 | 52 |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 설문 | 50 | 52 | 59 | |
| 개수 | 34 | | | | |

2. 지속하락 항목

| 분야 | 항목 | 자료 | 06순위 | 05년 순위 | 04년 순위 |
|---------------------------------|---------------------------------------|----|------|--------|--------|
| 경제유형성과 | 실질 GDP성장률 (%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31 | 26 | 22 |
| | 정부 최종소비지출-실질성장률 (%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22 | 20 | 16 |
| | 총국내투자-실질성장률 (%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42 | 38 | 19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 (10억불) | 통계 | 49 | 48 | 26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 (% , GDP비중) | 통계 | 37 | 34 | 1 |
| | 상품 및 용역의 수입-실질 증가율 (% , US\$) | 통계 | 38 | 31 | 1 |
| | 관광수입 (% ,GDP비중, 외국인방문 관광수입) | 통계 | 50 | 49 | 48 |
| | 직접투자스톡의 순포지션 (10억불) | 통계 | 33 | 31 | 21 |
| | GDP 대비 직접투자스톡의 순포지션 (%) | 통계 | 24 | 22 | 21 |
| | 생계비지수 (뉴욕=100, 주거비 제외 재화용역구매 번들) | 통계 | 59 | 56 | 55 |
| | 사무실임대료 (\$/평방미터당 연간비용) | 통계 | 50 | 48 | 45 |
| 정부행정부 |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10억불) | 통계 | 9 | 8 | 3 |
| |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 , GDP비중) | 통계 | 19 | 14 | 7 |
| |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10억불) | 통계 | 37 | 36 | 6 |
| |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 , GDP비중) | 통계 | 21 | 14 | 4 |
| | 중앙정부의 부채-실질증가율 (% ,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 통계 | 54 | 49 | 12 |
| | 개인소득세의 총합 (이윤, 소득, 자본이득)(% , GDP비중) | 통계 | 19 | 17 | 15 |
| | 기업이윤에 대한 평균 법인세율 (% , 세전이윤대비) | 통계 | 18 | 16 | 14 |
| | 실질개인부담 (환급후 개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도) | 설문 | 45 | 32 | 24 |
| | 중앙은행정책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 | 설문 | 44 | 42 | 38 |
| | 이민관련 법이 당신의 회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 설문 | 59 | 53 | 49 |
| | 여성의 수입비율 | 통계 | 39 | 38 | 32 |
| 기업경영문화 | 직업현장에서 괴롭힘과 폭행이 심각하지 않는 정도 | 설문 | 44 | 42 | 36 |
| |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 , 외국인노동력/전체노동력) | 통계 | 36 | 34 | 32 |
| |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들 고용 용이성도 | 설문 | 61 | 46 | 45 |
| | 상급 경영진의 국제경험이 충분한 정도 | 설문 | 41 | 18 | 5 |
| | 주식시장의 거래가치 (\$, 1인당 주식거래액) | 통계 | 25 | 23 | 13 |
| | 기업가정신이 공유되어진 정도 | 설문 | 45 | 28 | 26 |
| | 마케팅 관리의 효율적인 정도 | 설문 | 30 | 19 | 18 |
| |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대해 경영진이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지 여부 | 설문 | 32 | 30 | 26 |
| | 국민문화가 외국의 영향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 | 설문 | 55 | 53 | 49 |
| |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유연한 적응 | 설문 | 48 | 28 | 21 |
| | 경제와 사회의 개선의 필요가 사회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지는 정도 | 설문 | 16 | 11 | 3 |
| 발전인프라 | 사회가치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 설문 | 48 | 19 | 14 |
| | 도시화가 국가재원을 낭비시키지 않는 정도 | 설문 | 36 | 27 | 25 |
| | 인구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가입자수) | 통계 | 34 | 33 | 28 |
| | 총 연구개발비 지출 (백만\$) | 통계 | 9 | 8 | 7 |
| |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서베이,1-10점, 2005) | 설문 | 34 | 31 | 14 |
|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 (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2004) 의 | 통계 | 49 | 48 | 42 |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는 정도 | 설문 | 48 | 22 | 13 | |
| 개수 | 40 | | | | |

[첨부 3] 2006년도 우리나라의 WEF의 세계경쟁력 순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05순위 | 06순위 | 순위변동 |
|------|---------|----------------------|------|------|------|
| 기본요인 | | | 20 | 22 | -2 |
| | 제도적 요인 | | 38 | 47 | -9 |
| | | 재산권(금융자산 포함) 보호 정도 | 36 | 34 | 2 |
| | |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 41 | 51 | -10 |
| | |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 | 38 | 67 | -29 |
| | |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 45 | 51 | -6 |
| | |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정도 | 26 | 46 | -20 |
| | |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 32 | 73 | -41 |
| | | 정부 규제완화 | 14 | 50 | -36 |
| | |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36 | 63 | -27 |
| | | 경찰서비스의 신뢰성 | 32 | 39 | -7 |
| | | 범죄,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45 | 46 | -1 |
| | | 조직범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55 | 54 | 1 |
| | | 기업경영윤리 | 35 | 38 | -3 |
| | |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 52 | 86 | -34 |
| | |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 43 | 76 | -33 |
| | | 회계기준 및 감사 강도 | 45 | 57 | -12 |
| | 인프라 | | 20 | 21 | -1 |
| | | 인프라의 전체적 질 | 23 | 29 | -6 |
| | | 철도 인프라 개발 | 12 | 13 | -1 |
| | | 항만 인프라의 질 | 19 | 27 | -8 |
| | |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 31 | 32 | -1 |
| | | 전기 공급의 질 | 27 | 24 | 3 |
| | | 인구 100명당 전화선 수 | 17 | 14 | 3 |
| | 거시경제 | | 5 | 13 | -8 |
| | | 재정흑자/GDP 비율 | 14 | 22 | -8 |
| | | 저축률 | 10 | 16 | -6 |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2 | 40 | 12 |
| | | 평균예금/대출금리차 | 6 | 6 | 0 |
| | | 국가부채/GDP 비율 | 11 | | |
| | | 실질실효환율 | 85 | 111 | -26 |
| | 보건/초등교육 | | 30 | 18 | 12 |

| | | | | |
|---------------|-------------------------|-----------|-----------|------------|
| |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73 | 68 | 5 |
| | 결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59 | 61 | -2 |
| | 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55 | 68 | -13 |
| | 천명당 유아사망률 | 14 | 21 | -7 |
| | 평균수명 | 34 | 29 | 5 |
| |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건수 | 74 | 77 | -3 |
|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 66 | 69 | -3 |
| | 15~49세 인구중 AIDS 환자비율 | 5 | 1 | 4 |
| | 초등교육 순 취학률('05년은 총 취학률) | 53 | 4 | 49 |
| 효율성 증진 | | 20 | 25 | -5 |
| | 고등교육/직장훈련 | 19 | 21 | -2 |
| | 중등교육 총 취학률 | 48 | 49 | -1 |
| | 고등교육 총 취학률 | 2 | 2 | 0 |
| | 교육시스템의 질 | 31 | 38 | -7 |
| | 수학 과학 교육의 질 | 25 | 23 | 2 |
| | 경영대학(원)의 질 | 38 | 53 | -15 |
| | 전문 연구, 훈련서비스의 이용가능성 | 20 | 29 | -9 |
| | 기업의 직장훈련 투자 정도 | 18 | 19 | -1 |
| | 시장효율성 | 32 | 43 | -11 |
|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정도 | 31 | 78 | -47 |
| | 사법제도의 효율성 | 38 | 47 | -9 |
| | 조세의 근로 투자억제 저해정도 | 27 | 72 | -45 |
| |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 | 74 | 85 | -11 |
| | 창업 소요일수 | 22 | 29 | -7 |
| | 시장경쟁의 강도 | 29 | 36 | -7 |
| | 반독점정책의 효과성 | 28 | 35 | -7 |
| | 수입/GDP 비율 | 62 | 69 | -7 |
| | 무역장벽 정도 | 42 | 56 | -14 |
| |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 61 | 95 | -34 |
| | GDP-수출+수입 | 10 | 10 | 0 |
| | 수출/GDP 비율 | 47 | 55 | -8 |
| |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 | 41 | 66 | -25 |
| | 임금결정의 탄력성 | 42 | 28 | 14 |
| | 노동자-고용주간 협력정도 | 81 | 114 | -33 |
| | 고위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임명정도 | 37 | 59 | -22 |
| | 보수의 생산성에 따른 결정정도 | 24 | 21 | 3 |
| | 고급인력 해외유출 위험 | 26 | 45 | -19 |
| | 민간분야 여성인력 고용평등도 | 96 | 104 | -8 |
| | 금융시장 성숙도 | 36 | 42 | -6 |
| | 은행대출의 용이성 | 46 | 89 | -43 |
|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31 | 69 | -38 |

| | | | | | |
|-------------------|----------------------|----------------------|-----------|-----------|-----------|
| | | 은행 건전성 | 71 | 92 | -21 |
| |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 48 | 61 | -13 |
| | 과학기술수준 | | 11 | 18 | -7 |
| | | 과학기술수준 | 16 | 21 | -5 |
| | |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 8 | 11 | -3 |
| | |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발달정도 | 10 | 11 | -1 |
| | |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기술도입 기여도 | 56 | 95 | -39 |
| | |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 | 30 | 36 | -6 |
| | | 인구 만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 3 | 4 | -1 |
| | | 인구 100명당 PC대수 | 8 | 15 | -7 |
| 기업혁신 및 성숙도 | | | 17 | 20 | -3 |
| | 기업활동 성숙도 | | 19 | 22 | -3 |
| | | 물품, 서비스의 국내공급량 충분정도 | 22 | 24 | -2 |
| | | 물품, 서비스 국내 공급자의 효율성 | 24 | 26 | -2 |
| | 8-2. 기업 경영 및 전략의 성숙도 | | | | |
| | |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 | 21 | 22 | -1 |
| | | 기업마케팅 활동의 성숙도 | 24 | 27 | -3 |
| | |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내국기업 점유도 | 16 | 19 | -3 |
| | | 기업의 부하에 대한 권한이양 정도 | 23 | 38 | -15 |
| | |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특성 | 16 | 20 | -4 |
| | | 수출기업의 가치창조 | 18 | 20 | -2 |
| | 기업혁신 | | 15 | 15 | 0 |
| | | 과학연구기관의 수준 | 19 | 22 | -3 |
| | | 기업의 R&D지출 적극성 | 8 | 9 | -1 |
| | | 대학-기업간 R&D 연구협력 | 10 | 16 | -6 |
| | |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 | 10 | 14 | -4 |
| | |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 | 33 | 28 | 5 |
| | | 인구 백만명당 발명특허 건수 | 11 | 9 | 2 |
| | |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 27 | 31 | -4 |
| | |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 14 | 13 | 1 |
| 세계경쟁력 순위 | | | 19 | 24 | -5 |

[첨부 4] WEF 국가경쟁력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2006)

| | | 강점 | 순위 | 약점 | 순위 |
|-----------------|-----------|---------------------|----|----------------------|-----|
| 기본 요인 | 제도적 요인 | | |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 86 |
| | | | |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 76 |
| | | | | 정부지출의 시장기능보완 적절성 | 73 |
| | | | |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 | 67 |
| | | | |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63 |
| | | | | 회계기준 및 감사제도 | 57 |
| | | | | 조직범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54 |
| | | | |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 51 |
| | | | |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 51 |
| | | | | 정부규제완화 | 50 |
| | | | |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정도 | 46 |
| | | | | 범죄,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 46 |
| | | | | 재산권 보호 정도 | 34 |
| | 인프라 | 철도인프라 | 13 | | |
| | 거시경제 | 이자율 | 6 | 실질실효환율 | 111 |
| | | 저축률 | 16 | | |
| | | 정부재정 | 22 | | |
| | 보건초등 | 초등학교 순취학률 | 4 | 결핵발생건수 | 77 |
| 효율성 증진 | 고등직업훈련 | 고등학교 순취학률 | 2 | 경영대학원의 질 | 53 |
| | | 직장훈련 | 18 | 교육시스템의 질 | 38 |
| | | 수학과학 교육의 질 | 23 | | |
| | 시장효율성 | 보수의 생산성에 따른 결정정도 | 21 | 노사 협력 정도 | 114 |
| | | | |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 95 |
| | | | | 은행대출이 용이성 | 89 |
| | | | |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 | 85 |
| | | | | 은행의 건전성 | 82 |
| | | |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정도 | 78 |
| | | | | 조세의 근로투자의욕 저해 정도 | 72 |
| | | |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69 |
| | | | |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 | 66 |
| | | |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 61 |
| | | | | 고위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임명정도 | 59 |
| | | | | 무역장벽 정도 | 56 |
| | | | | 사법제도의 효율성 | 47 |
| | | | | 고급인력 해외유출 위험 | 45 |
| | | | | 금융시장 성숙도 | 42 |
| | | | | 시장경쟁의 강도 | 36 |
| | | | | 반독점정책의 효과성 | 35 |
| | 과학기술 | 인터넷 이용자수 | 4 |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기술도입 기여도 | 95 |
| | |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 11 | | |
| | |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발달정도 | 11 | | |
| 인구 100명당 pc대수 | | 15 | | | |
| 과학기술수준 | | 21 | | | |
| 기업 혁신 성숙도 | 기업활동 | 국제물류 및 마케팅 내국기업 기여도 | 19 |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 31 |
| | |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특성 | 20 | | |
| | | 수출기업의 가치창조 | 20 | | |
| | |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 | 22 | | |
| | 혁신 | 기업의 R&D 지출 적극성 | 9 | | |
| | | 발명특허 건수 | 9 | | |
| | |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 13 | | |
| | |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 | 14 | | |
| | | 대학-기업간 R&D 연구 협력 | 16 | | |
| | | 과학연구기관의 수준 | 22 | | |

[첨부 4] 각 지표별 경쟁력 하락요인 분석

1. IMD

가. 경제운영성과

① 교역조건 지수, terms of trade index(52→52)

- '05년 수출단가의 상승은 소폭에 그친데 반해 수입단가는 크게 오르면서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
- 원유, 비철금속 등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수입단가가 상승했으며 국내 체감 경기 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외구매력이 떨어졌음
- 고부가가치 수출품의 개발로 수출단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

② 관광수입(49→50: 1↓)

- 외국인방문 관광수입의 GDP 비중으로 '05년 62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
- 국내 공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유학, 연수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동반 효과, 골프장 등 국내 여가 관광시설의 절대적 부족, 주 5일제의 본격 시행 등 이 원인으로 구조적인 취약부문
- 관광자원의 선택과 집중, 비자정책의 유연성 검토, 전문적인 홍보사업 확대, 관광산업육성에 대한 근본적 처방 등 적극적 외래 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

③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38→41:3↓)

- 고유가, 달러약세, 조세감면기간 단축(10년→7년) 등으로 '05년 FDI가 전년대비 9.6% 감소
-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나. 정부행정보효율성

① 이민법(53→59:6 ↓)

- 이민법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지의 여부(설문)
-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이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 국경 없는 노동력의 이동시대에 맞게 국적법·이민법을 유연하게 개정하고 국제결혼한 가족,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정착을 위한 법령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② 차별(54→58:4 ↓)

- 인종, 성, 가족배경 등에 차별 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정도(설문)
- ‘하인스워드’로 인한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계층 이동성의 어려움 등이 설문에 영향
- 다양한 생각과 사상의 차이를 수용하는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③ 가격통제(51→57:6 ↓))

- 정부의 가격통제가 산업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설문)
- 최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통제 개입이 본 설문에서 부정적인 영향

④ 환율안정성 지수 (2→52: 50 ↓)

- '03년 대비 '05년의 SDR대비 자국화폐 환가 지수
- '05년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인해 '05년 2위에서 '06년 55로 크게 하락한 항목

⑤ 보호주의 (35→55 : 20 ↓)

- 보호주의가 기업경영을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설문)
- 론스타 등 해외자본의 막대한 매매차익향유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외자정서가 보호주의 강화로 비춰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계약체결 지연 등 경영상 애로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⑥ 사회 응집력 (34→48: 17 ↓)

- 사회응집력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부(설문)
-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 기회균등, 지역·인종적 안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결속력 강화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업인들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논란을 접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⑦ 공공재정관리(17→52: 35 ↓)

- 공공재정관리가 다음 2년간 개선될 가능성 여부(설문)
- 국가채무 및 감세논쟁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

⑧ 정부정책의 수용성(31→48: 17 ↓)

-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수용성이 높은 정도(설문)
-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유가·환율 등 대외적인 외생변수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⑨ 투자 인센티브 (19→50: 31 ↓)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정도(설문)
- '05년 이후부터 외국인투자 대상은 확대(5천달러→ 3천달러)한 반면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다. 기업경영 효율성

① 노사관계(60→61: 1↓)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설문)
- 노사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내외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

② 금융기법(46→61: 15↓)

-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정도(설문)
- 론스타 사건으로 인한 금융전문 인력의 부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순위가 급락

③ 회계 감사 관행(37→58: 21↓)

- 회계감사가 기업에게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설문)
- '05년 이후 나타난 두산,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50→58: 8↓)

- 중소기업들의 국제적인 표준에 근거한 효과적인 활동여부(설문)

-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금지원 효과가 매우 미흡
- 용자 등 금융지원체계를 경영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등 콘텐츠 위주 지원으로 전환 필요

⑤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능(36→56: 20↓)

- 기업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의 관리를 감독하는 정도(설문)
- 최근 잇따른 편법상속과 비자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불투명한 기업경영 행태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⑥ 금융기관의 투명성(35→47: 12↓)

-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도(설문)
- 론스타 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
- 정부와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는 대폭 축소해 나가는 대신,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견제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명성 등을 제고

⑦ 기업가 정신(28→45:17↓)

- 기업가 정신이 공유되어지는 정도(설문)
- 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 등이 더욱 문제

⑧ 사회가치(19→48: 29↓)

- 사회가치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 정부, 기업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대내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부, 기업과 개인의 원활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걸림돌로 작동
- 국가의 경제력수준에 맞는 선진시민의식 배양이 필요

⑨ 문화 개방성(28→48:20↓)

- 자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유연하게 적응하는 정도(설문)
- 국내시장 개방에 인식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소홀한 지원 등이 낮은 글로벌화 사고로 평가

라. 발전인프라

① 법적 환경(20→50:30↓)

-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 IT관련 서비스 품질, 기술 등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나 제반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② 기술규제(30→50: 20↓)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 규제가 복잡·다기하고 불합리하여 국민에게 행정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

③ 사이버 보안(19→45: 26↓)

- 사이버 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설문)

-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과 함께 인터넷 개인정보유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설문에 영향

④ 경제개발(22→48: 26↓)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는 정도(설문)
- 정부 추진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환경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

⑤ 대학교육(52→50:2↑)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정도(설문)
- 구조적인 취약부문으로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

2. WEF

가. 기본요인

① 윤리 및 부패: 낡은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정부, 공공기관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주요 원인

○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41위→51위)

○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정도(38→67위)

② 정부의 비효율성: 정부조직의 비대 및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대와 함께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등이 일어났으며 복잡다기한 정부규제로 인한 행정 불편 초래

- 정부 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2→73위)
- 정부 규제완화(14→50위)
- ③ 안전: 남북경제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으로 증가
 -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36→63위)
- ④ 기업의 책임성: 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 등이 더욱 문제. 또한 최근 잇따른 편법상속과 비자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불투명한 기업경영 형태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경영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52→86위)
 -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43위→76위)
 - 회계기준 및 감사 정도(45→57위)
- ⑤ 거시경제: 실질실효환율 절상을 경쟁력 악화요인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나 환율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 기초여건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음
 - 실질실효환율(85→ 111위)

나. 효율성 증진 분야

- ① 왜곡: 끊임없는 증세논란과 정부조직 비대로 인한 정책진행의 비효율성, 계층간, 도농간 양극화 등이 거론되면서 부정적으로 반영
 - 농업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정도(31→78위)
 - 창업시 행정절차의 수 (74→85위)
 - 조세의 근로 투자욕 저해정도(27→72위)

② 경쟁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과 스틸 파트너스(KT&G) 사건 등이 설문조사 시기와 일치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61→95위)

③ 유연성과 효율성 : 노사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내외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

○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41→66위)

○ 노동자-고용주 간 협력 정도(81위→114위)

○ 고위 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임명정도(37→59위)

④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개방성 : 론스타 사건 등으로 인한 금융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은행 건전성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순위가 급락

○ 은행대출의 용이성(46→89위)

○ 벤처 자본의 이용가능성(31→69위)

○ 은행건전성(71→92위)

○ 국내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의 용이성(48→61위)

⑤ 과학기술수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신기술 유입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체의 경쟁력 기여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

○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기술도입 기여도(56→95위)

다. 기술혁신 및 성숙도

① 기업경영 및 전략의 성숙도: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기업경영전략
과 이를 수행할 종업원의 수준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

○ 기업의 부하에 대한 권한이양 정도 (23위→38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_061201)

유럽강소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2006. 12

정재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I. 핀란드의 경쟁전략

1. 역사적 배경

□ 탈냉전과 위기발발 이전의 핀란드

- 13세기 말부터 스웨덴의 지배 하에 있다가
 - 1809년부터 1917년 말 독립하기까지 러시아의 자치령으로 존속
- 1918년 초 발발한 내전은 지역간 불신을 초래하였으나,
 - 연립정부의 유화정책과 1939년 소련과의 전쟁을 통해 회복
- 냉전시대 하에서 등거리 중립외교정책 및 동서 진영간 평화를 지향
 - 미국의 마샬플랜을 거부, 소련과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체결
 - EFTA, EEC, CSCE 등 대서구 접근은 지속적으로 추진
- 전후 대소련 현물배상 과정을 통해 농업에서 공업중심으로 전환.
 - 동구권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잠재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는
 -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대 소련 수출이 70% 이상 급감하면서, 위기가 발발하였던 바, 1991년에는 실업률이 17%를 육박하였음

□ 탈냉전과 위기발발 이후의 핀란드

-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구축
 - 결과적으로 위기는 안정적 개혁에 성공요인으로 작용
- 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영구화를 통한 장기 안정성장 전략의 모색
 - 임업·제지 등 1차산업에서 ICT 등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추진
 - * 핀란드 정부는 1993년 “정보화 사회”를 신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생명·환경 분야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안보위협 감소로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 필요성 또한 감소함에 따라,
 - 1994년 지역발전법 제정,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를 지역별 조정체도로 설치, 산·학·연 연계와 지역밀착형 혁신체계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강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 200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제로 국가지배구조를 전환하였던 바,
 - 분권형 정책결정구조는 내적 갈등요인의 사전적 감축과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

- EU와 국제기구의 적극참여를 통해 공동 외교안보 기반을 구축
 - 소련의 붕괴로 인해 평화유지 비용 감축 (peace dividend)
 - 1994년 EU 가입 가결 이후 EU 의장국 역임 (1999년, 2006년)
 - 2008년부터 OSCE 의장국 수임 예정 등 갈등조정자 역할 강화

2. 주요 전략과 정책

□ 핀란드의 국가장기전략 (Finish Government's Report on the Future)

- 총리실이 미래상임위의 요청으로 정부 미래보고서 작성
 - “핀란드의 미래 선택” (*Finland's Future Options*, 1993)
 - “핀란드와 유럽의 미래” (*Finland and the Future of Europe*, 1996)
 - “기술과 공정경쟁” (*Skill and Fair Play*, 1997)
 - “핀란드 2015” (*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 2001)
 - * EU의 미래 관련 3개* 시나리오를 설정, 핀란드의 미래 분석 시도:
 - * ①통합·단일화, ②분열·다양화, ③위기·교착화
 - “핀란드와 세계화” (*Finland in the Global Economy*, 2004)

- 최근 작성된 정부 미래보고서로는 고령화 문제 관련 “모든 연령층을 위한 핀란드” (*Finland for People of All Ages*, 2004)를 들 수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개발
 -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개선 방안 강구
 - 아동 대상 영양공급 환경의 조성
 - 소득이전 체계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지역발전을 위한 구조 개혁
- 노령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 핀란드의 사회경제 정책 : 노사간 자율협상을 촉진

- 자율협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제공하되,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최대한 중립을 유지.
 - 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노사간 합의에 도달할 경우 세제개편 공약 등 소득정책 시행
 - 정책수단으로는 휴일수당 보전, 소득연계 실업수당, 노동시간 단축, 조세 감축 등이 있음
 - 소득정책 협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
 - ② 노동부에 국가조정관을 두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③ 노사간 분쟁을 심판하기 위한 독립적 노동법원을 설치 운영.
- 최근 협약들은 실업감소와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경제정책의 틀 또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최근 핀란드의 국가전략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통한 고용의 유지와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핀란드의 산업기술 정책

- 거시경제 정책수단에서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
 - 금융통화 부문은 EU체제와의 연동, 국제무역 부문은 WTO 등 국제규범의 준수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거시적 정책수단의 운용은 한계
 - 미시적 정책수단으로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 인프라 구축, 국가 및 지역혁신 체제의 구축 등이 있음
 - * 기술혁신체제는 OECD의 정책 권장사항
- 미래기술 예측(Technology Foresight)을 위한 개발계획
 - 2001년 통상산업부는 기술혁신지원청(TEKES), 기술연구센터(VTT), 연구개발기금(SITRA)과 긴밀한 협조하에 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기반으로써 미래기술의 예측 관련 정보 수집, 방법론 개발, 전문가들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Finnsight 2015 - 2010년대 핀란드의 과학기술 예측 (Science and Technology in Finland in the 2010s)
 - 2005-6년에 학술원(AoF), 기술혁신지원청(TEKES)와 공동으로 실시한 예측 프로젝트로 핀란드의 경제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미래 환경변화, 에너지 환경 등 세계적 위험의 관리, 국가경쟁력과 웰빙(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혁신 등에 대해 예측하였음.

3. 정책의 추진체계

가. 추진부서

□ 의회 미래상임위원회

- 1993년 임시위원회로 설치되었으나, 2002년 상설위원회로 격상
 - 1992년 의회는 핀란드 미래사회에 대한 정부의 장기비전과 대안을 포함하는 국가미래예측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 1993년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 미래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예측보고서 검토 외에도 미래 기후, 인구, 기술발전, 정보사회 관련 국정과제 수행, 미래예측방법론 연구, 전문가 연계 네트워크를 추진해 왔음

□ 총리실

- 2000년 개헌에 의해 총리의 권한·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실제로 책임지게 되었음
 - 새로 집권하는 정권은 15년 후의 미래환경을 예측하여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의회에 제시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정부의 미래예측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정부부처 산하 정부기관의 관리는 개별 주무부처의 기능을 약화하고, 총리실을 통한 총괄조정 기능은 강화하고 있음
 - 국영기업경영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직접 보고
 - * 통상산업부, 재무부, 교통통신부의 국장급 간부로 구성
- 그러나, 실제 정책입안 및 집행 권한은 상당 부분 하부 주무부처 및 실행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분권형(decentralized) 정책결정 구조 보유

※ 총리와 각료들의 권한과 책무

- 17명의 각료(13개 부처)에 대한 제청 권한 (대통령이 임명).
- 총리 및 각료 임명시 국회의 사전 동의와 선출절차가 필요함.
- 총리는 국무회의와 각료회의 주재 등 행정부 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고, 각료들은 해당 정부부처의 행정업무를 관장함.
- 총리실 수장으로써 행정부 간의 업무관련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총괄함.
- 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 및 승인권 뿐 아니라, 행정감독권, 질의권,, 조약비준동의권 등을 보유하며, 국회보고 책무를 통해 정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
- 국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나 각료를 해임할 수 있음.

□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경제위원회 수장은 총리로 정부부처, 중앙은행(Bank of Finland),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경제 성장, 균형, 구조 정책 논의와 결정을 위한 기구로, 의회 요청 시 사회 동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론을 수렴
- 재무부는 경제현황 분석 및 장기전망 예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재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부처가 재정운용 계획을 제출하면 재무부는 정책우선순위, 재정건전성,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4개년 재정지출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한편, 지역개발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국토계획 지침에 의거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가 4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내무부가 총괄 조정, 모니터링, 사전 및 사후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 학술원(AoF: Academy of Finland)

- 1918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상 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
 - 1970년 현재 형태의 AoF로 전환되었음
- 이사회와 사무국, 4개* 연구위원회로 구성
 -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평가에 의해 객관성,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 * ①생물과학·환경, ②문화·사회, ③사회·보건, ④자연과학·공학
- 재원은 정부예산: 2.18억Euro(2005년), 2.57억Euro(2006년)

□ 기술혁신지원청(TEKES: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 1983년 설립된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으로 특히 중소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응용연구 자금을 지원
 - 혁신적이며 모험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장기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TEKES 지원 프로젝트의 약 1/3은 실패
- 기술혁신지원청은 청장, 이사회*, 8개** 부서로 구성
 - * 이사장은 연구개발기금(SITRA), 부이사장은 전경련(EK)에 할당
 - ** ①Technology and Research Areas, ②Regional Network, ③International Networks, ④Activation, ⑤Technology Programmes, ⑥Project Funding, ⑦Industrial Branches and Support for Core Processes, ⑧Finance and Administration
- Technology Programme은 잠재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들을 조기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집중지원
 - 2005년 현재 25개의 기술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

- 14개 고용경제개발센터 내 설치된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프로젝트의 지원 심사시 선정기준* 공시를 통해 혁신과 균형발전 도모
 - 클러스터링과 상호연계성 강화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①프로젝트의 질적 수준, ②산학연 공동협력, ③대기업의 경우 하청기업 활용도
 ④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경제적(고용, 수출) 기여도,
 ⑥신청 주체의 경쟁력과 재정능력, ⑦TEKES의 기술지원 원칙과 부합성
- 정부 예산과 EU의 구조조정자금을 재원으로 2005년 4.29억Euro 지원

□ 연구개발기금(SITRA: Finnish National Fu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1967년 중앙은행 기금으로 설립되었으나, 1991년 의회 공공기금으로 전환되었던 바, 핀란드 경제의 안정적 균형성장,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Finland 2015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표 등 의회의 연구기관(think tank) 역할도 담당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동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조직자 혹은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Bio, ICT 분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하는 국영 벤처회사
 - TEKES가 기술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다면, SITRA는 이의 초기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자체기금운용과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2004년까지 1.5억Euro 투자

□ 기술연구센터(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 1942년 설립된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으로 AoF, TEKES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요 지향적인 계약연구기관
 - 민간기업 수입은 약 30%이며, 해외서비스 수입도 14%에 달함

- 사장, 이사회, R&D조직, 5개* 부서로 구성
 - * ①Business Solutions, ②Strategic Research, ③Expert Services, ④Ventures, ⑤Corporate Services
- 2005년 수입은 2.25억Euro*
 - * 통상산업부의 지원금 0.78억Eur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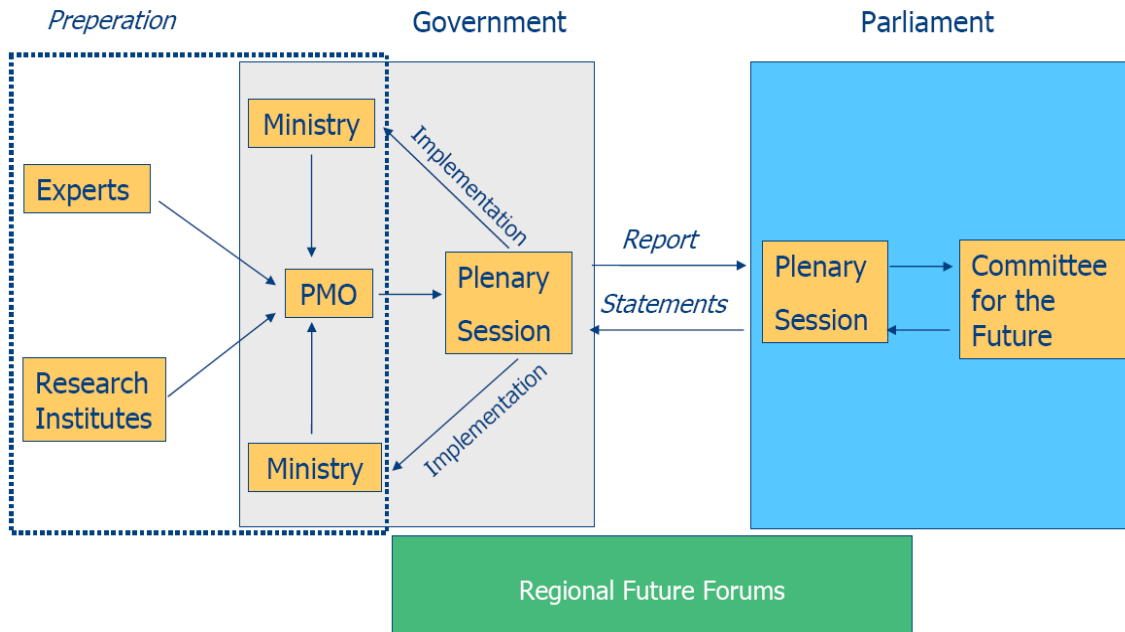
<표1> 핀란드 3대 R&D 및 혁신 자금지원 기관의 주요 특성 요약

| | AoF | TEKES | SITRA |
|----------|---------------------|------------------------------------|-----------------------------------|
| 주무 부처 | 교육부 | 통상산업부 | 국회 |
| 중점 지원분야 | 기초과학연구 (인문과학 포함) | 응용과학연구 (기술개발) | 벤처캐피탈 (사업화) |
| 중점 지원대상 | 대학 및 연구소 | 민간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 민간기업 (특히, Bio·ICT 분야) |
| 재원 조달 | 정부예산 | 정부예산 및 EU의 구조조정자금 (2.1억Euro) | 자체기금 운용소득 및 투자소득 |
| 예산 규모 | 2.57억Euro('06) | 4.29억Euro('05) | 매년 약 5백만Euro 1.5억Euro('04말 누계) |
| 지적재산권 관리 | 로열티 지급의무 없음 | | 투자이익 환수 |

나. 업무조정 및 평가환류

- 총리실의 국가미래전략 총괄 관리

<그림1> 국가미래전략 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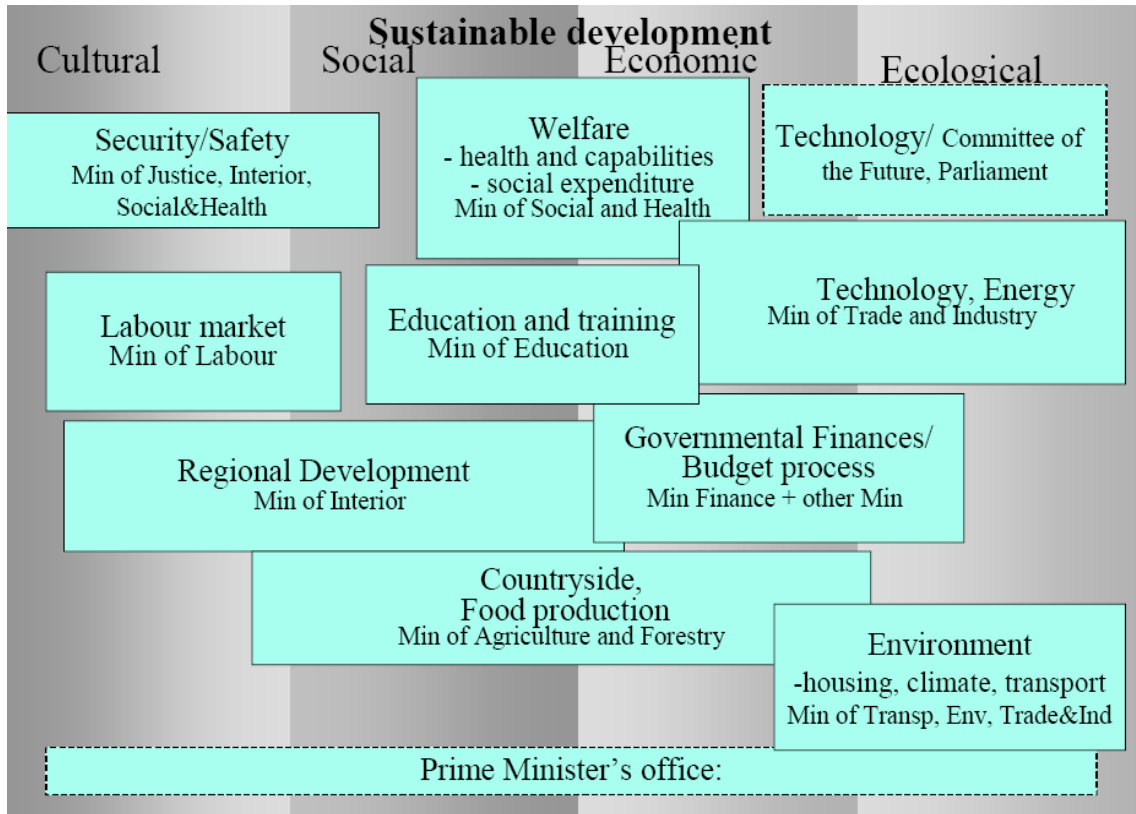
출처: *Foresight and Policy-Making : Finish Experience*, Kirjavainen. R., 2006.10.

※ 국가미래전략의 수립 및 실행 과정

- ① 총리가 선택한 과제에 대해서 총리실은 보고서를 작성
 - 준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반영
- ② 완성된 국가미래전략 보고서는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
- ③ 총리실과 미래상임위원회는 지역미래포럼을 공동개최하여 여론수렴
- ④ 총리실은 최종 보고서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1993년부터 총리실은 부처별 미래전략을 종합, 국가미래전략 수립
 - 1993년 이전은 부처 혹은 연구소에서 별도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1993년 이후 동일한 미래환경 예측과 목표에 근거, 전략을 수립
 - ⇒ 즉, 부처별 접근방법으로부터 수평적 접근방법으로 전환
- 미래예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처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조직

<그림2> 부처간 미래예측 네트워크



출처: *Foresight and Policy-Making : Finish Experience*, Kirjavainen. R., 2006.10.

※ 미래예측 전문가 네트워크

- 정부 미래예측 네트워크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 2004.3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총리실 포함 정부부처의 미래예측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정부 미래예측 네트워크를 구성.
 - 정부부처들의 미래예측 관련 견해차이 조정, 지역수준 미래예측 업무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동 위원회는 2007.5월까지 활동 예정
 -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미래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회의 (연5-7회) 및 포럼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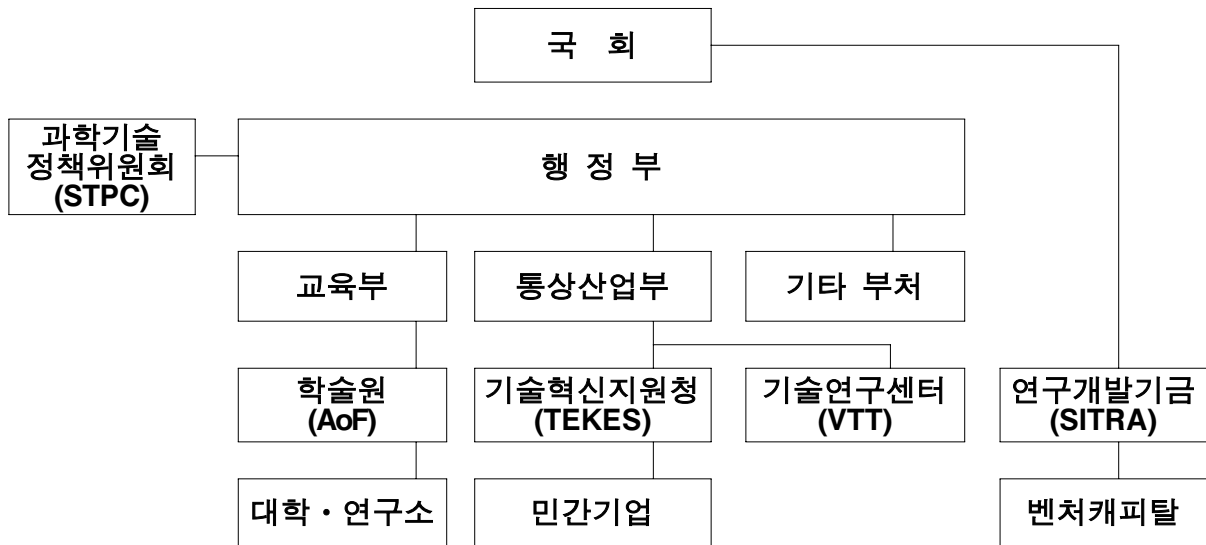
- 국가 미래예측 네트워크 (National Foresight Network)
 - 연구개발기금(SITRA)은 미래의 도전을 먼저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혁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 미래 예측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음.
 - 통상산업부의 미래예측 포럼(Foresight Forum), 총리실의 미래예측 네트워크(Foresight Network), AoF와 TEKES 공동 Finnsight 2015 프로젝트 등 기존 미래예측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과학기술정책위원회(STPC: S&T Policy Council)의 총괄 조정

- 1987년 설립된 자문기구로 총리가 의장, 주무부처인 교육부 및 통상산업부의 장관들이 부의장으로 혁신전략 수립, 우선순위 설정 및 부처간 정책조정을 담당
 - 하부 기구인 AoF, TEKES, SITRA 등에 집행권한이 상당히 위임되어 있으며, 산업정책에서 지역혁신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정부 역할 또한 증대 추세

-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 및 문화부 장관, TEKES 청장 뿐 아니라, Nokia 사장, 노조 대표,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도 참여.
 - 산업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요 사회세력 간 정책협의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
 - 실행조직과 긴밀히 연계된 관계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가이드라인은 거의 100%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

<그림3> 핀란드의 산업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 1980년대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등장하고, 1990년대 연구 개발 체계의 평가로 바뀌는 추세에 있는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제도가 발전되어 있음
-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정책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완화하고 공동 분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Working Group: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 working group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일정 과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대표, 유관 이익단체들의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최신의 정책 사고를 도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의 작업그룹(working group) 결성.
- 결성 후 언론의 상세 보도를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받게 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비판이 자율협상의 유인으로 작용.
- working group은 통상 일정시한을 정하고 활동하며, 협상에 의해 도달한 합의사항은 입법과정 혹은 행정부의 집행과정을 통해 구체화.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 2005년 원전 건설을 시작한 working group의 성공 사례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Economist, 2006.7.8.)

- 정부 주도 R&D 투자는 효과적이었으나, 민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의 민간 포함 총 R&D 투자 대비 비율 감소 추세
 - 1970년대의 GDP 대비 R&D투자는 여타 산업국가들 대비 낮았으나, 1983년 TEKES, 1984년 지역기술단지 설립 이후 R&D 투자 증가
 -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R&D/GDP 비율을 1992년까지 2.2%로 증액한다는 목표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추진하여 달성
 - 2003년 핀란드의 R&D/GDP 비율은 3.5%로 세계 2위 수준
 - 정부R&D의 비율: 20.9%(1991)→13.2%(1998)→10.2%(2004)

□ AoF, TEKES, SITRA, VTT 의 기관장 회의

- 매년 약 3회의 회합을 통해 협의하고 정책 조정을 하고 있음.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통상산업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산하기관인 AoF와 TEKES를 통해 집행되며,
- 자금지원은 기업-대학-연구소간 협력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배분.
 - TEKES의 민간기업 지원사업 중 80%는 산학연 협력 포함
 -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협력 의무화
- VTT는 AoF, TEKES, 민간기업 등과의 연구개발 계약을 수행하면서, 대학과의 협력 체계 또한 활용
- TEKES와 VTT가 구축한 광범위한 지방사무소 망은 지방소재 기업 대상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4. 정책 시사점

□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전망

- 핀란드 혁신체제는 합의(선택과 집중), 균형, 협력(연계), 신뢰를 통한 효율성과 통합성(시너지효과)에 근본적인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기 요인은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에 있음

〈표2〉 핀란드 혁신체제의 강점

| 강점 요인 | 주요 내용 |
|---------|---|
| 합의 | - 기회에 대한 역량의 집중 - 교육, 연구, 개발, 실행(상업화) |
| 균형 | - 목표 : 경제-환경-웰빙(삶의 질) - 지원목표 : 기초-응용-산업 연구개발 - 지원수단 : 경쟁-배분 |
| 협력 네트워크 | - 대학-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전략적 동반자) - 지역-전국-세계 - 혁신체제 참여자간 연계 - 기술예측-공공연구-산업연구 |
| 신뢰 | - 반부패, 성향(성격) - 전략적 사회 동반자 의식 - 자금지원 기관의 독립성 - 전략적 예산배분, 권한이양 |

출처: *Foresight and Policy-Making : Finish Experience*, Kirjavainen. R., 2006.10.

- 국가경쟁력 평가 1위의 배경에는 상기 강점 요인들이 기여하였으나, 애국심 또한 작용했다는 의구심은 핀란드 언론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
 - 핀란드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압도적인 외부 위협세력의 존재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
 - 핀란드는 자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부 평가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 바 있음
- 한편,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들은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對 핀란드 직접투자는 역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말 핀란드의 對 외국 직접투자는 약 600억 Euro에 달하는데 비해 핀란드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400억Euro에 불과함
 - 국제경쟁력평가 지수는 직접투자 매력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내수규모,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 독일 Deutsche 은행이 평가한 2006-20년 기간 중 성장잠재력 조사대상 34개 국가 중 핀란드는 28위에 (한국은 10위) 불과하였던 바, 폐쇄성을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지적한 바 있음
- 201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저하 및 복지부담 증가를 최대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 “경제참여율 제고”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였던 바, 노령 노동자 경제참여율, 출산율과 여성취업율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음
 - * 노령인구의 경제참여율 제고, 노령연금 개혁
 - * 출산장려 및 가정-직장 병행 촉진 정책
 -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2003-7년 동안 1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던 바, 최근 달성가능 예상 증가 추세
- 과도한 청년실업률은 핀란드로써도 여전히 난제이며, 장기적으로 신규 성장동력의 발굴 및 성공적 이행 여부가 장기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한 관건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 Hard But Possible

- 핀란드의 노사정 협력은 법적 구속력을 통해 강제되기 보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인해 관행화되었다는 특성이 있으며, 소규모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조정 전통 수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TI 발표 공무원청렴도에서 정상을 차지할 만큼 공공부문의 높은 도덕성, 이에 따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높은 준법정신과 시민의식, 사회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적 갈등조정 관행, 정책정당 제도의 정착 등 장기간에 걸쳐 사회자본을 축적해 왔음
 -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팀 중심 교육제도 및 시민교육 또한 핀란드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해 왔음
 - 갈등조정과 합의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사회비용은 인구 등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급증하는 바, 갈등조정에 있어 소규모는 강점으로 작용
- ⇒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요인들 중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는 사회자본, 소규모로 인한 갈등조정능력 우위는 핀란드 모형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

고에 단순 활용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로 인한 역사적 유산으로 대립구도 (핀란드-스웨덴계, 좌-우파 간 갈등)의 전통이 내재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의 도래로 인해 활성화된 공동체 인식을 통해 내재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음
 - 1970년대 초반 해도 협상테이블에서 쉽게 철수하고, 작은 이견에도 연립정부가 붕괴하는 등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는 어려웠음
 - 빈곤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안보위협 상시성, 국가적 경제위기의 발발 등 부정적 요인들은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성공하였음

- ⇒ 핀란드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구도, 빈곤한 천연자원, 상시적 안보위협, 경제위기의 발발은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과 유사한 바, 핀란드가 위함을 기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경험은 우리나라 또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II. 아일랜드의 경쟁전략

1. 역사적 배경

- 아일랜드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합의를 중시하는 북구형 조합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국가의 전략적인 개입을 중시하는 독자적 발전모델 개발에 성공
 - 1920년대 높은 관세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1930년대 기업 설립과 소유 관련 국수주의적 법안 도입 등 폐쇄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개방주의로 전환하여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으나,
 -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과 석유위기를 당한 후 침체가 장기화되다가 1980년대 경제·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소규모 개방체제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취약성과 함께 생존을 위한 국내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1987년 대타협을 달성
 -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집권정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 체결은 20년 넘게 지속되는 등 정당과 정파를 넘는 협력체제 구축.
 - IRA 또한 1998년 Good Friday 협약을 통해 남북통합 기반을 제공
 - 2005년 7월 IRA는 무장투쟁의 종식 선언 (9월 국제감시단 감사)
 -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가의 전략기획, 정책개발 및 총괄조정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농업기반 경제로부터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 아일랜드의 금융부문은 영·미형 시장주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3자 조합주의 방식 임금협상의 집중화,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입 등은 북구형 시민주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2. 주요 전략과 정책

- 사회경제 정책

- 사회연대협약의 목표는 초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으로 부터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분배, 형평 등 포괄적인 사회통합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음
- 참여대상 다원화와 분권화로 인해 이질성이 증가하면서, 합의도출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민주적인 이견조정 과정, 노조에 대해 경직적인 정부와 해외 자본의 이탈 위협 등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포괄적 합의로 인한 특정 이해집단 주장의 희석화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의 상생적 타결에 기여하고 있음

<표3>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 1987-2015

| 사회협약 | 유효기간 | 주요내용 |
|--|-----------|--|
| 국가재건 프로그램 (PNR, 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 1987-1990 | -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전략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소득세 인하) - 저임금 노동자 보호/ 특별상여금 (공공서비스) - 사회복지 이전지출 유지/ 공공지출 통제 |
| 경제·사회 진보 프로그램 (PESP, Program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 1991-1994 | - PNR 정책 기조 유지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용증대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정부부채/GNP 비율 감축 |
| 경쟁력·직업 프로그램 (PCW, Program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 1994-1996 |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
| 통합·고용·경쟁력을 위한 연대 (P2000, 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 1997-2000 |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사회연대의 참여 폭 확장 (사회적 배제 척결) - 사용자 수준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 확대 - 소득세 감면 및 사회통합 예산(4억 IEP) 확보 |
| 번영·공평 프로그램 (PPF, Program for Prosperity and Fairness) | 2000-2003 | -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보상 (세금 감면 확대) -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사회 불평등 해소 - 공공부문의 임금 형평성 제고 -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 |
|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SP, Sustainable Progress) | 2003-2005 | - 임금 상승 자제/ 퇴직수당 인상 - 물가 상승 억제 및 주택공급 확대 -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 2016년을 향하여 (T2016, Towards 2016) | 2006-2015 | - 임금 상승 억제 및 최저 임금 인상 - 노사간 협력, 불법분규 자제, 생산성과 연계 - 공공부문 임금 인상은 유연성 제고와 연계 - 수명주기 맞춤형 지원(Life-cycle Framework)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정보수집 및 평가환류 등 거버넌스 체계 현대화 |

□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Regulating Better, 2004.1)

- 총리실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써 공공부문 효율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연대협약인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Progr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략적 관리 선도” (Strategic Management Initiative) 등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음
- 아일랜드 총리실 발간 백서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지침은 다음과 같음

<표4> 아일랜드 정부의 규제개혁 지침

| 원칙 | 지침 | 수단 |
|---------------------------------|--|--|
| 필요성 (Necessity) | - 규제 도입 기준 강화 - 불요불급한 규제 감축 - 규제기관 및 제도의 재고 | - 규제충격분석 활용, 통계의 신뢰도 제고 - Customer Service Initiative, IT 활용 - 규제동학, 경쟁구조, 시장동향 반영 |
| 효과성 (Effectiveness) | - 규제목표의 효과적 설정 - 규제집행 및 준수의 적절성 - 핵심부분 기존규제의 가치 재확인 | - 목표 설명의 명확성, 정책수단의 유연성 - 유인부합적인 규제구조의 설계 - 경제사회 부문 주요 규제들의 정기 점검 |
| 효율성 (Proportionality) | - 규제의 최소화, 대안의 최대화 - 준수비용과 위반벌칙 간 형평성 - 규제 도입 전 객관적 효과분석 | - 광범위한 대안 모색을 전부처에 걸쳐 권장 - 중소기업들의 규제준수 비용 적합성 검토 - 규제충격분석 활용의 점진적 확대 |
| 투명성 (Transparency) | - 규제도입 이전 광범위한 의견수렴 - 공적 서비스 책무의 명시 - 규제의 명쾌성 및 접근성 제고 | - 정부 부처들 간 시민 심의과정의 통일성 - 공적책무 서비스/비용의 구체적 명시 - 평이한 일상 용어를 사용한 지침 발간 |
| 책무성 (Accountability) | - 규제 과정상 책무성 강화 - 항소 등 이견조정 절차 개선 | - 규제수립/집행기관의 대국민 책무의 명시 - 형평성, 전문성, 신속성 간 적절한 균형 |
| 일관성 (Consistency) | - 규제기관들 간 일관성 확보 - 부문별 규제의 일관성 확보 | - 규제기관들 간 책무, 방법론 차이 최소화 - 유관 규제들의 간소화, 통합 |

출처: *Regulating Better*, p10, Department of Taoiseach, 2004.1

□ 사회 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적 배분과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

- 장기(10년) 계획인 국가공간계획(NSS, National Spatial Strategy)을 고려하면서 국가개발계획의 재원을 배분.

- (운송 21: Transport 21, 2006-2015) 경제발전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더블린 광역시의 교통·운송망의 개선을 위한 10개년 계획
 - 2006년부터 10년간 344억Euro를 투자,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
 - * 고속도로 건설, 철도·전차·지하철 노선의 확장 및 환승역 신설

□ 국가개발계획 (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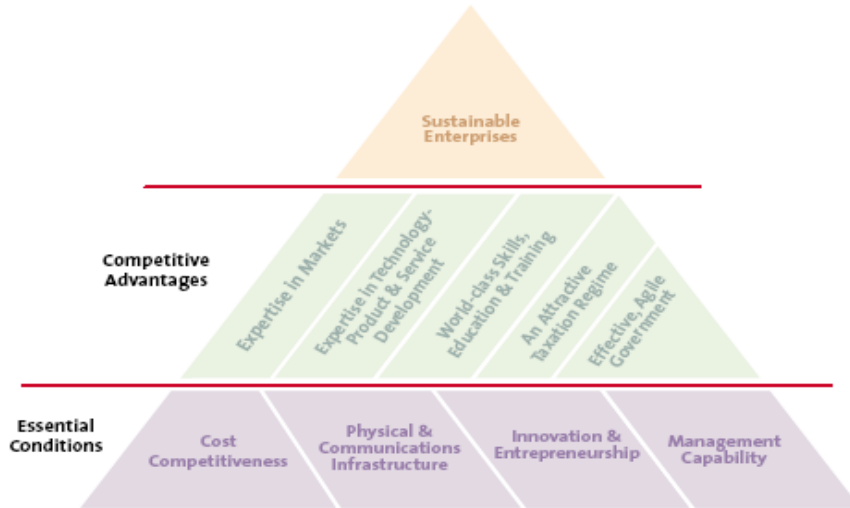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기(5년) 자원배분 계획으로 재무부 주도하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consultation)를 거쳐 결정
- 1958년부터 폐쇄형 농업경제에서 개방형 산업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해 왔으나, 제4차 계획(1977-1980년)이 오일쇼크로 실패하면서 중단되었으나, 1988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음
- 제6차 계획(1994-1999년) 기간 중 임금인상 억제, 건축 예산, FDI 확대에 힘입어 평균 8.7% 성장, 실업률 하락, 재정적자의 흑자전환, 정부부채 축소 등 기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제7차 계획(2000-2006) 기간 중 경쟁력의 제고 및 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교육 훈련, 산업육성, 지역개발, 평화정착 등을 추진해 왔음
- 제7차 계획(2007-2013)은 심의 중으로 2006.11월말 발표 예정:
 - 지속가능성, 경쟁력 극대화, 지역간 균형발전,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 투자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 간접자본 및 인적자본 위주 투자.

□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

- 부동산가격 급등, 고임금, 고비용 등 고속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동유럽의 EU시장 편입과 법인세 인하경쟁 가속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겸 부총리는 자문그룹인 기업전략그룹에 향후 10년간 아일랜드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제시를 주문
 - 기업전략그룹(ESG, Enterprise Strategy Group)은 전문가[총리실 산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의 사무처장 포함] 및 학자로 구성
- 기업전략그룹은 보고서 "Ahead of the Curve"에서 아일랜드 기업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5개 경쟁우위가 유지와 함께, 이의 지지를 위한 4개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림4>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쟁우위 및 필요조건



출처: *Ahead of the Curve*, Enterprise Strategy Group, 2004.7, pXIV

- 기업전략그룹이 상기 5개 부문의 경쟁우위와 4개 부문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장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표5> 기업전략그룹 권장 경쟁우위별 정책과제

| 경쟁 우위 | 정책 과제 |
|-------------------------|---|
| 시장 관련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 내부에 수출시장의 정보수집과 개척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I.D.A.는 기존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을 국제화 초기에 활용 - 무역 요원 1000명 증원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비용은 분담) |
| 기술 관련 전문성: 상품·서비스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 내부에 시장중심 연구개발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기업통상노동부의 기초연구 지원에 상응, 응용연구 투자 증대 -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존 에이전시 예산 중 1억Euro 이전) |
| 세계 일류 기술: 교육 및 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기술개발 권장을 위해 전국적인 “1단계 향상” 운동 전개 - 해외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대학원 교육의 양 및 질적 제고 |
| 매력적인 조세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의한 법인세 12.5% 유지 의지 입장 재천명 필요성 |
| 정부의 효과성, 신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회 내 기업평가과정 신설 |

출처: *Ahead of the Curve*. Enterprise Strategy Group, 2004.7

<표6> 기업전략그룹 권장 필수요건별 정책과제

| 필수 요건 | 정책 과제 |
|-------------|---|
| 비용 경쟁력 | - 반경쟁적 규제의 재평가 (시장진입의 양적인 제한 규제는 철폐) - 규제충격분석(R.I.A.)의 과정상 투명성 확보 - 기업 내 경영진/종업원 참여 재무적 유인체계 도입 의무화 |
| 사회 간접자본 | - 주요 거점 중심 인프라 구축 선도 (국토공간계획 우선순위 준수) |
| 혁신 및 기업가 정신 | - 자율과 책임 강화를 통한 기존 공공부문 혁신 운동의 활성화 |
| 경영 능력 | - 능력개발 훈련의 수요 파악과 공급은 기업 네트워크가 주도 |

출처: *Ahead of the Curve*. Enterprise Strategy Group, 2004.7

3. 정책의 추진체계

가. 추진부서

□ 국가경제사회위원회 (NESC, National Economic Social Council)

- 노사정 관계 조정을 담당하던 국가산업경제위원회(NIEC)를 대신하여 1973년 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정책자문기구로 균형발전, 사회보장 등 현안 뿐 아니라 21세기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또한 작성
 - NESC는 아일랜드의 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
 - NESC는 법적 기구가 아니므로, 합의사항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노사정 대표간 협의기구로부터 1998년 농민대표, NGO,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확장되었으며, 수장은 총리실의 사무총장
 - NESC는 노동자(5), 사용자(5), 농민(5), NGO(5), 정부(5)로 구성된 위원회(25) 및 전문가(5)로 구성된 사무국(5)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총리실 소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
- NESC가 매 3년 작성해 온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 보고서들은 사회동반자들 간 심층토론과 협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사회연대협약들이 도출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왔음

※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의 전략보고서과 사회연대협약 간의 관계

- * 1986년 “발전 전략” (Strategy for Development) ⇒ PNR (1987-1990)
- * 1990년 “90년대 전략” (Strategy for the Nineties) ⇒ PESP (1991-1994)
- * 1993년 “경쟁력·성장·고용 전략” (Strategy for Competitiveness, Growth and Employment) ⇒ PCW (1994-1996)
- * 1997년 “21세기를 향한 전략” (Strategy into 21st Century) ⇒ P2000 (1997-2000)
- * 1999년 “선택을 위한 기회, 도전과 역량”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Capacities for Choice) ⇒ PPF (2000-2003)
- * 2003년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 서비스, 포용 및 기업” (An Investment in Quality: Service, Inclusion and Enterprise) ⇒ SP (2003-2005)
- * 2006년 “NESC 전략 2016: 사람, 생산성과 목표” (NESC Strategy 2016: People, Productivity and Purpose) ⇒ T2016 (2006-2015)

□ 국가경제사회포럼(NES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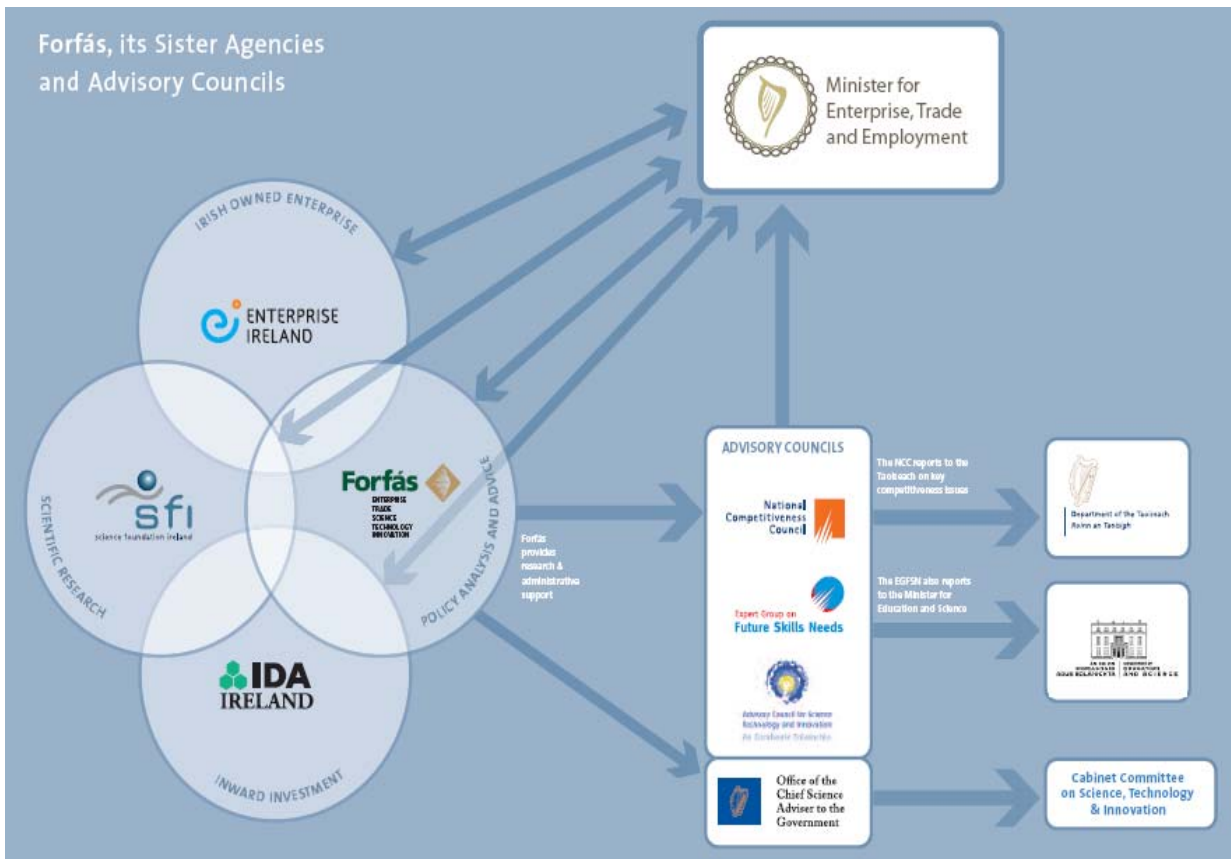
- 노사정 대표 뿐 아니라 야당 대표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의기구로 경제·사회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1993년 설립
 - ①국회(15: 정당별 비례 배분), ②노동자(5), 사용자(5), 농민(5), ③NGO(15), ④중앙정부(5), 지방정부(5), 전문가(5) 등, 각 부문별 대표 60명과 의장, 부의장을 포함 총 62명으로 구성
 -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 가능
- 토론과 다수결원칙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며, 총리의 중재안 제시 가능
 - 본회의, 경영위원회, 프로젝트팀, 임시 작업그룹을 통해 의견 수렴
 -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의 의견 또한 별도 회의*를 통해 반영
 - * NESF는 2003.1월 NAPS 사회통합포럼을 출범 (연 1회 소집)
 - 6차협약 협상갈등은 2003.1월 총리의 중재안 전격수용으로 타결
- 포괄적이며 투명한 의견수렴과정은 사회협약의 안정성 요인으로 작용
 - 집권정당 등 정치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협약 체결은 지속

- 1998년 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중심으로 사회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2003년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공론화를 통한 국론의 수렴 과정에서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2000년 말 사회협약의 이행, 특히 임금조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협약이행기구(NIB, National Implementation Body)를 설치

□ Forfás

- 1952년 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조언과 조정을 위해 설립된 전략기획 본부로 산업통상, 국가경쟁력,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 산하 기관의 정책 개발 및 조정에 대해 관계 장관에 조언하고 있음
 - 이사회는 민간기업, 산하기관, 국가경쟁력위원회, 기업통상고용부와 포파스의 장으로 구성

<그림5> Forfás의 자문 위원회 및 산하 정책 집행기관



출처: Forfás Annual Report 2005

- 자문 위원회 : Forfás가 조언을 받으며, 사무국과 연구기능을 제공
 - ① 국가경쟁력위원회(NCC) : 1977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사용자, 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리에게 보고
 - ② 과학기술혁신위원회(ICSTI) : 1997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민간, 정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
 - ③ FSN전문가그룹(EGFSN) : 미래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조언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민간, 정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회 및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보고

- Forfás 산하 정책 집행기관
 - ①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 ② EI (Enterprise Ireland): 내국인 기업의 혁신, 기업화, 국제화 지원
 - ③ SFI (Science Foundation Ireland): ICT · Bio 기술 연구기금 관리

- Forfás와 산하 정책 집행기관의 직접적인 주무부처는 기업통상고용부 (Ministry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이나, 자문그룹의 조언을 받고 연구 및 사무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총리, 관계 장관 및 의회에도 간접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에 의한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개발청 (ID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 1949년 관세 및 쿼터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고, 1952년 관장 업무가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내 기업창업의 촉진으로 확대되었으나, 1994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담기구로 재설정되었음

- 법인세 특혜(2002년까지 10%, 이후 12.5%)로 조세회피성 투자 유치
 - 투자분야 및 공장입지 선정, 자금조달, 직업훈련, 기술이전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및 행정지원(신고, 주택, 자녀교육)을 원스톱 서비스

-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토공간계획(NSS)에 의거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과 균형발전 유도
 - R&D Capability Grant Scheme: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 Inno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국내 연구기반과 공동연구 지원

- 고성장으로 임금·비용이 상승하고 동구권과 시장통합이 진전되면서 첨단 고부가 외국기업 집중지원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하였음

※ 국제금융서비스센터 (IFSC,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

- 1987년 더블린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적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지원
 - IFSC내 금융회사의 법인세율을 특혜적 10%로 이중 적용하였던 바, EU 집행위와 협상결과 2006년부터 일반 법인세율(12.5%)을 적용
 - 이중과세방지에 의거 비거주자의 이자·배당금에 대해 원천 징수를 면제(혹은 10%) 부과하며, 금융거래 관련 인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 지주회사일 경우 제3국 소재 자회사 매각 시 자본소득세 면제
 - 금융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식당, 공연장 등 편의시설 완비
- 2006년 현재 450개 금융기관을 수용하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금융회사 중 절반 이상이 입주해 있고, IFSC에 근무하는 총 고용인원이 2만 여명에 달하는 등 더블린의 국제금융 허브화에 성공
 - 런던의 미들·백 오피스(증권보관 및 대여, 거래정산과 결제) 이전, 펀드의 등록(launching) 및 관리 등 노동집약적 틈새시장을 공략

□ 기업진흥청 (EI, Enterprise Ireland)

- 1992년 킬리톤보고서(Culliton Report)에서 내국인 기업 육성 기능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분리, 틈새분야의 군집화(Clustering) 전략을 권고함에 따라 1993년 산업개발청(IDA)으로부터 국내기업의 육성 및 수출지원 전담기구로 분리되었음
 - 국내 기업들의 교육훈련, 기술개발, 기업설립, 경영전략, 및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현재 국내 13개 및 해외 33개 사무소 운영
- 해외자본의 유치를 토대로 연계 및 공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성장 지원
 - 자국 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외국기업의 이탈을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기업과 호혜적인 발전 유도
 - 국내 진출 기업과 연계강화 정책 (National Linkage Programme), 외국

기업과 공동연구 지원, 외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자국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 허용

- 기반이 취약하여 저항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자국 산업의 독자 발전은 역차별로 인해 상당기간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자국 산업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해외지향이 불가피한 상황
 - 2002년까지 국내기업의 법인세율은 32%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10% 대비 역차별 되었으나, 2003년 법인세율을 12.5%로 단일화

나. 업무조정 및 평가환류

□ 총리실(Department of Taoiseach)의 방향설정 및 총괄조정

- 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장으로 의회(하원)의 승인 혹은 지명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된 후 각료의 임명 관련 제청권을 보유하는 등 아일랜드는 핀란드와 유사한 이원집정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총리는 포괄적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을 총괄하며,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총리실의 사회연대협약 관련 총괄조정 절차

- ① NESC는 경제·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총리실에 보고
- ②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총리실은 사회공동체 대표들과 협의 및 포럼을 통해 정책 목표와 수단 관련 여론을 종합, 사회연대협약안을 제시
 - NESC와 NESF은 부의장이 통일하며, 참여 위원 또한 상당부문 중첩
 - NESC, NESF, 총리실 간에 연락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 상호 보완
- ③ 정부가 제시한 협약안에 대해 노·사·농과 NGO 등이 전국적 표결을 실시하여 수용을 가결할 경우 사회연대협약은 최종 확정됨
- ④ 협약의 평가는 중앙평가위원회(Central Review Committee)가 담당해 왔으나, P2000부터 감시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로 대체되었음.

- 총리실이 설정한 2005-7년의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Strategy Statement 2005-2007, Department of Taoiseach)

- 전략목표 : ①정부지원, ②총리지원
- 우선순위 :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유럽연합(EU)과 외교: 유럽과 세계에서의 위상 제고
 ㉢경제사회정책: 경제효율성과 공평포용성의 균형 발전
 ㉣사회연대: 산업관계의 타협과 안정을 통한 지속 발전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총리실은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각각에 대하여 핵심목표, 실행계획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재무부와 재원배분을 협상하며,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표7> NESC, NESF, NCPP의 예산과 인원 비교 (2007년 예산)

| | NESC | NESF | NCPP |
|----|-----------|------------|------------|
| 예산 | 1.1백만Euro | 0.88백만Euro | 1.62백만Euro |
| 인원 | 9 | 6 | 9 |

※ NESC, NESF, NCPP는 국가경제사회개발처(NESDO,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로 통합 예정

□ 국가개발계획(NDP)의 실행 및 평가환류 체계

- 재무부 총책임 하에 주무부처(Managing Authority)들은 NDP 실행을 프로그램 별로 실무부서(Implementation Body)에 위임하고 있음.
 - 예 : 고용, 인적자원 개발, 생산적 투자 부문의 주무 부처는 .기업·통상·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 주무부처 대표로 구성된 감시위원회(Monitoring Committee)가 감독하며, 독립적 평가 부서(Evaluation Unit)가 사전·중간·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시.
 - 평가기준은 빈곤, 차별, 환경, 지역발전으로 필요할 경우 환경변화에 따라 재원 재배분 가능.
- 2006년까지는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지원을 받은 관계로 NDP의 지역지원체계(CSF, community Support Framework)에 대한 사전·중간·사후 평가보고서를 EC에 추가 제출할 의무가 있었음
 - 평가기준은 타당성, 효과성, 유관성, 효율성, 사회경제 충격(Impact)

□ Forfás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발전 부문 전략본부 역할

- 포파스는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사무처로써, 국가경쟁력 연차보고서(ACR, Annual Competitiveness Report) 2권을 작성, 총리에게 보고.
 - 1권은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환경(Policy Inputs), 필수조건(Essential Condition) 관련 지표들을 한국 포함 15개 경쟁국가와 비교하고,
 - 2권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대응전략을 제시
-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법적으로는 포파스의 총괄 책임 하에 있으나, 법적인 통제수단과 M.O.U.가 없으므로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수준에서 해결
 - 기업전략그룹의 보고서는 포파스 및 산하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상당 부분 상호검임의 허용과 이사장의 통일을 권장한 바 있음
 - * 상기 권장 사항은 NESCF와 NESF 간 관계와 유사한 구도
- 포파스는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제고하는 한편, 산하 실행기관들의 정책개발, 업무조정, 실적평가에 보다 주력할 예정

※ Forfás의 산업발전정책 평가환류 체계

- 포파스는 국가경쟁력, 과학기술,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산업발전 정책 관련 전주기적인 환류체계(정책개발→정책조언→평가조정)를 총괄하고 있음.
 - ① 산하 실행기관들과 함께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을 한 후 정부에 조언
 - 특정사안 관련 정책개발 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결성
 - ② 산하기관들로부터 정책실행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환류 받음
 - 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공급하고 있음
 - ③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및 실행기관들과 개선책을 강구, 정부에 조언
 - 즉, 상기 절차 ①로 회귀, 동일 과정을 반복

<표8> Forfás 및 산하 정책 집행기관의 예산과 인원 비교 (2005년)

| | Forfás | EI | IDA | SFI |
|----|-----------|-----------|--------|------------|
| 예산 | 6천1백만Euro | 2억7천만Euro | 2억Euro | 1억1천만Euro* |
| 인원 | 120 | 800 | 350 | 45 |

* 2000-2006년간 6억4천6백만Euro의 연 평균

4. 정책 시사점

□ 아일랜드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아일랜드의 역사적 유산은 장기에 걸친 외세의 정복과 지배로 인한 비산업화 과정과 종속발전, 장기에 걸친 내전, 강성노조와 무장투쟁등 한 많은 오랜 세월로 이민을 통한 인구의 감소와 정체에 반영.
-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국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사회적 동반자 간의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는 기반으로 삼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 주도 수출을 성장 동력화 하는 등 세계화 추세를 오히려 활용하면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역사적 유산에서 탈피, 비교적 단기간에 근본적인 체질 전환에 성공하였음.
- 사회연대협약 체결과정과 국가산업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NESC와 Forfás를 중심으로 관료조직이 정치권보다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① 정부의 Think Tank로써 장기전략 수립과 실행의 적합성과 적시성
 - ②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어 수립 전략과 정책 실행가능성 지대
 - ③ 다층적 지배구조를 통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 ④ 독립성과 중립성은 공평한 중재자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
 - ⑤ 전략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실행과정의 동반자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분권화와 파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의 성장으로 소국개방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은 향후 중대 예상
- 아일랜드 정부 또한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음
 - 이익의 공유 등 임금구조의 유인부합성 제고
 -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특정 이해집단의 갈등을 희석화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범사회적 대타협 과정은 그자체가 사회적 동반자, 즉 더불어 사는 시민을 교육하는 과정

□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과 통합의 중요성

- 국가사회경제위원회(NESC)의 오도넬(O'Donnell, Roy) 사무총장은 유럽의 소규모 개방체제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적 동반자 정책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개 조건을 제시하였던 바, 이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① 거시적 조건 : 낮은 물가상승률과 총수요의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
 - ② 미시적 조건 : 경쟁력, 공평성, 산업평화의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
 - ③ 구조적 정책 :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측면 정책

(O'Donnell, R., *The Future of Social Partnership in Ireland*,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2001.5)

- 동 보고서는 또한 사회적 동반자 간 합의와 상호이해 심화는 협의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절충을 통해 협의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사회협약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의 진로와 운영에 대한 공통의 분석과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 있음
- 핀란드 총리실의 키자바이넨(Kirjavainen, R.) 연구위원 또한 혁신 체제의 강점으로 사회통합적인 4개 요인을 지적하였던 바, 혁신과 통합은 국가경쟁력의 필수불가결한 중요 요소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 추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_061201)

아시아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2006. 12

김 동 루

한국개발연구원

I. 아시아 강소국의 특징

1. 국가가 처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

□ 세계화 및 세계경제 통합의 지속적 진전

- 세계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정보화 혁명 등으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음. 이러한 단일시장 통합으로 인해, 경쟁에 기초한 시장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유연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세계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조세 감축 등 공적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촉진되고 있음.

□ 중국 및 기타 BRIC국가의 부상

- 중국의 급성장에 힘입어 아시아권 경제력은 2020년 경 미국, 유럽에 근접한 수준으로 신장할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연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부상과 함께, 최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여타 BRICs 국가,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도 시장경제로서의 체제전환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됨. BRICs 4국은 세계인구의 42.6%, 면적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세계경제규모의 순위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될 것으로 전망됨.²⁷⁾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 정보통신기술에 이어 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산업의 융합 및 기존산업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세계 산업계는 시장을 과점하는 소수의 글로벌기업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특화기업군으로 재편되고, 여타 기업의 입지는 계속 약화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범세계적인 시장구조조정예 대비한 국가 차원의 산업기

27) Goldman Sachs,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2003.10.

술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왜 아시아 강소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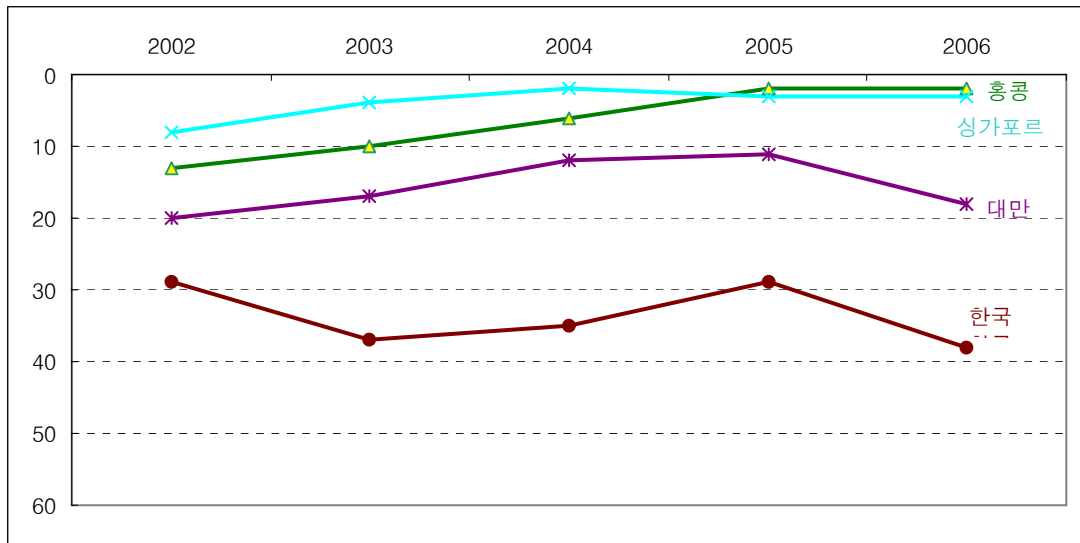
□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한계를 가져옴.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은 경쟁력 순위 20~40위권 수준에 있지만, 사회분야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임. 이는 한국의 발전격차가 경제사회 환경에 관한 기존제도 전반의 질의 낙후성, 즉 제도 격차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에 대한 '발전격차' 자체가 아니라, 험난한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여 앞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아시아 강소국의 특징

- 강소국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국가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키우고자 함.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틈새시장(Niche Market)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비록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였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2만달러가 넘는 GDP를 유지하고 있으며, IMD,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국가경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외적, 내적 환경을 고려하면 강소국은 우리나라가 미래를 대비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IMD 경쟁력 평가의 아시아 경쟁국의 순위변화 (2002~2006)



〈그림 2〉 WEF 경쟁력 평가의 아시아 경쟁국 순위변화 (2001~2005)



II. 싱가포르의 경쟁전략

1. 싱가포르경제 발전의 특징

2005년 주요경제지표

| | |
|----------------------------------|----------------|
| 실질 GDP 증가 (%) | 6.4 |
|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평균, %) | 0.5 |
| current account balance (싱가포르\$) | 55,373,000,000 |
| 환율 (싱가포르\$: 1 미국\$) | 1.664 |
| 인구(거주자 기준) | 3,600,000 |

가. 싱가포르 경제의 개요

-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로,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2005년 명목 GDP의 26.8%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계통(반도체,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가장 중요한 분야임.
 - 최근에는 세계적인 수요에 따라 석유정제와 화학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정 제약 분야가 성장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과 훌륭한 항만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재수출(re-export)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싱가포르의 산업 기반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몇몇의 정부관련 거대 국내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약 5000여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의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적음.

나.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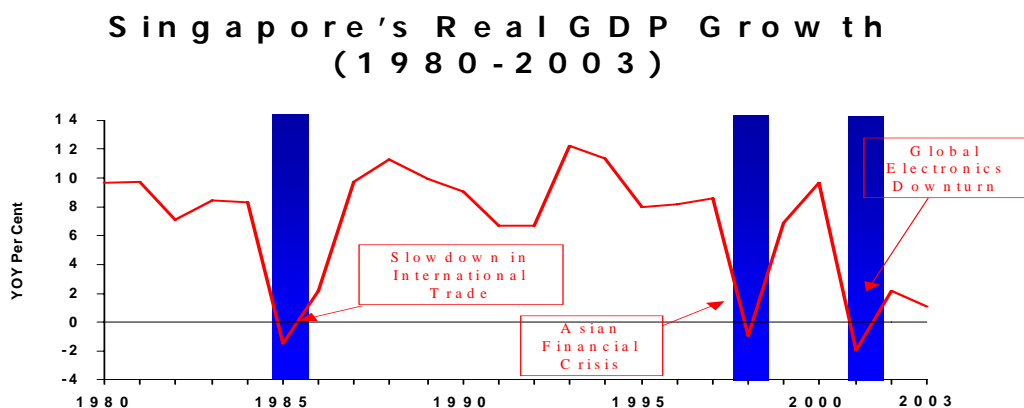
-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부가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 왔음.

- 경제 정책을 통해 개별 산업을 고무시키고 시장경제에 깊게 개입함. 거시 및 미시 경제 정책 모두에 깊게 개입하며, 정부가 상당수의 기업을 소유함.
 -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싱가포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효과적인 기반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싱가포르는 작은 규모의 경제와 제한적인 국내 시장과 인구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고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 기반 시설을 개발해 왔음.
 - 제조업 성장을 위해 1967년 제조업 세무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투자를 향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특정산업을 고부가 가치의 자본집중화된 산업으로 성장시킴.
 - 1988년부터는 특정 분야에 세무혜택을 주어 성장을 도모하였음.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금융서비스 성장, R&D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외국계 기업의 “싱가포르 지역 기지화”를 지원함.
- =>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싱가포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꾸려왔음.

2. 미래비전 전략의 등장

가. 배경

<그림3> 싱가포르의 실질 GDP 변화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http://www.singstat.gov.sg>)

- 싱가포르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경제전략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철수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변국가보다 경쟁력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음.
- 싱가포르는 1980년대 중반에 들면서 이전까지 평균 약 9%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급작스럽게 떨어짐.
 - 70년대에 완전 고용을 달성한 싱가포르 정부가 산업의 기계화와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해 임금성장 정책을 펼침. 이에 따라 높아진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진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며 1985~86년 경제의 하락세를 경험함.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략기관을 설립하여, 경제정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언기관으로 활용.
 - 1980년대 초반 Economic Committee를 설립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 기관으로 활용하였고, 이후 1990년에는 Report of the Cost Review Committee 등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싱가포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함.
- =>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요점은 “효율성(Efficiency)”으로, 적절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높아진 임금 및 제반비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의 비용을 줄임으로서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달성하려는 것이 싱가포르의 목표였음.

나. 경제 정책의 방향성 변화

- 외부환경에 대한 대처에서 내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게 됨.
 - 1997년 5월에 싱가포르의 경제적 경쟁력을 검토하고 이후 10년간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이하 CSC)가 설립됨.
 - 경제상황을 검토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작업을 하던 도중,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가 발생,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인해 싱가포르의 제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싱가포르 달러의 환율이 주변 국가에 비해 높아지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

지게 됨.

=> 이로 인해, CSC의 경제상황 검토와 전략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이는 기존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국가의 경제적 하락 원인이 외부환경 변화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내부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문제의식이 변했기 때문임.

□ 이후 21세기의 달라진 외부경제 상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및 과학기술 개발 정책을 수립함.

○ 2001년 Economic Review Committee(이하 ERC)를 설립하여, 싱가포르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와 1990년대 후반에 경험한 외환위기로부터의 불안정한 회복에 대한 현재 경제 상황의 검토, 그리고 2001년의 경제 후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어 2003년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외부 환경에 맞춘 효율성보다 내부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창조적이며 기업가적인 국가”를 강조하고 “연구 투자”를 강조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로 서술함.

○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는, 현재의 R&D투자를 GDP의 3%까지 끌어올리고, 새롭게 과학기술 재정 지원 기관인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이하 NRF)를 설립하는 등 내부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

3. 주요 전략과 정책

가. 종합계획

□ “미래 경쟁력 전략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 : Vision - A Competitive, Knowledge Economy)”

○ 1998년 11월 싱가포르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 이하 CSC)는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세계적 거점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적 세계시민 사회(Open Cosmopolitan Society)”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전략 1) 서비스와 제조업을 싱가포르 경제 발전을 위한 두 개의 엔진으로 상징:이로써 하나의 산업, 섹터, 시장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폭넓은 경제 기반을 제공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줄인다.
 - 전략2) 대외경제부문 강화: 비록 외환위기로 짧게나마 어려움이 따르다 하더라도, 대외경제부문은 싱가포르의 장기적 경제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 분야가 약해지더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세계적 규모의 협력을 통해 대외시장 참여를 강화한다.
 - 전략3) 세계 수준의 기업 설립: 다국적 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만의 세계 수준의 기업을 설립하여 세계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전략4) 지방 중소기업의 기반을 강화: 지방 중소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 중소기업 자체가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략5) 주요한 경쟁 이점으로서 인적·지적 자본의 활용: 기술, 창의성을 기를 뿐 아니라, 사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데까지 폭넓은 지적 자원 개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확대하여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국내 노동력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
 - 전략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투자: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을 개발하여, 현존하는 산업 및 경제 분야를 더 혁신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갖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싱가포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IT 허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 전략7) 자원 감독의 활용: 자원의 공급 증진과 효율적 사용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쟁적인 가격 책정과 세계 수준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토지를 적절히 공급한다. 물은 전략적 경제 자원이므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전략8) 사업 촉진자로서 기능하는 정부: 정부는 건전한 경제정책과 사업에 적합한 환경 정비를 통해, 민간 섹터가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New Challenges, Fresh Goals: Report of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

- 2001년 12월 조직된 경제재고 위원회(Economic Review Committee, 이하 ERC)가 2003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로서, 향후 15년간 싱가포르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권고안으로 발표함.
- 이 ERC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는 “효율”의 강조에서 “혁신”의 강조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수정함.
- 즉각적인 대응책과 장기적인 대응책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① 즉각적인 대응책

- 전략1) 정부가 사업비용(business cost)을 구성하는 요소들(근로자 임금, 물가 등)을 통제하여, 싱가포르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위치를 유지한다.
- 전략2) 앞으로 2년간 정부가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²⁸⁾ 기여율을 동결하여 현재수준인 36%로 유지시키도록 하여, 기업의 사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의욕을 높이도록 한다.
- 전략3) 평생교육 및 훈련의 확대와 빈곤층 원조 프로그램의 개혁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공적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장기적인 전략

- 전략1) 외부와의 연대강화: 국제기구와의 관계, 타국과의 FTA 및 ASEAN

28) 1955년 직장인들의 재정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의 CPF제도는 사회적 안정 저축시스템, 가족 건강관리, 주택구입, 가족보호, 재산증식 등 더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총 납부액의 일정비율 각각 부담하여 CPF Board에 납부한다.

과 같은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전략2) 경쟁력과 유연성 유지: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능력과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한다.
- 전략3) 기업가정신 고양과 싱가포르 기업의 육성: 기업가정신과 창조성을 고양하고, 기업이 도전과 다양성, 실패를 받아들이고 도약하도록 육성한다.
- 전략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싱가포르의 두 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과 시장개척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 전략5) 인력투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인력관리 계획과 훈련계획을 개혁한다.

나. 과학기술정책

- “혁신주도를 위한 과학기술 2010계획 (Sustaining Innovation-Driven Growth: Science and Technology 2010 Plan)”
- 통상산업부의 하위 위원회인 과학기술연구처(이하 A*STAR-the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가 1991년부터 시행한 5개년 계획의 4차 계획임.
- 싱가포르는 1991년 국가기술계획(the National Technology Plan)을 통해 싱가포르의 과학과 기술발전의 방향을 잡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립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의 주도하에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왔음. 국립과학기술위원회의 후신인 A*STAR는 R&D전략과 방향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국가적 수준에서 R&D에 대한 일관된 전략적 개요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R&D 프로그램에 재정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월 싱가포르 수상이 설립하여 의장으로 있는 연구혁신및 기업 협의회(이하 RIEC-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Council)로 부터 재정을 지원받음.

다. 사회정책

□ 싱가포르의 재건설 Remaking Singapore

- 2002년 2월에는 21세기 싱가포르 전략을 검토한 ERC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싱가포르 재건 위원회(Remaking Singapore Committee)가 설립되어, 2003년 7월 사회·문화·교육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전략과 권고안을 수록한 보고서를 제출함.
- 국가개발부(Ministry of State for National Development)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및 부처 구성원, 공공 과 민간분야 대표자, 시민단체와 제3 기관의 구성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5개의 하부 위원회가 특정 분야에 대한 검토를 담당함.
- 이 보고서는 단순히 싱가포르의 회생을 위한 단기 전략이 아니라, 시민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함.
 -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고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정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결정적인 역할, 그리고 정부와 시민간의 협력 관계, 신뢰, 열린 의사소통 채널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싱가포르 사회·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함.
 - 전략1) 모든 싱가포르인을 위한 가정(A Home for All Singaporeans)
: 국가의 정체성을 증진하고 집단 간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싱가포르인의 통합을 도모한다. 싱가포르인의 국제적 네트워크 개발과 교육을 통해 재능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전략2) 나를 위한 가정 (A Home Owned)
: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기회와 유연성, 더 많은 표현의 방식, 그리고 국가와 지역의 삶에 의미 있는 참여의 여지를 넓히고 국가정치와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 전략3) 언제나 보살펴 주는 가정 (A Home for All Seasons)
: 정확히 타겟이 맞춰진 사회안전망을 통해, 구조적인 실업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자비롭고 동정

적인 사회를 만든다.

- 전략4) 번영하는 가정(A Home to Cherish)

: 국가로서의 성숙은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발전되어온 사회와 문화도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 역사적 유산과 싱가포르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특성간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동일한 기회의 증진, 참여와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여건 조성에 진력한다.

4. 정책의 추진체계

가. 종합정책

1) 업무추진 및 평가

□ 경쟁력 전략계획의 수립

- 수상의 지시로 통상산업부(이하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안에 일시적인 경쟁력 제고 전략 계획 기구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함.기업가와 노동자, 공적 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기업, 싱가포르내외에 거주하는 학계 인사 등 3년간 10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여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쟁력 제고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략 수립 단계에서 이끌어냄

- 경제재고 위원회(ERC)에서 주요 연구분야를 설정하여 하위위원회 조직

- 하위 위원회에서 각 패널을 조직하여 분야별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하위 위원회에서 취합된 패널 보고서를 검토 및 수정하여 하위위원회 또는 분야별 보고서 발간

- 하위위원회의 보고서를 정부가 검토하여 이에 대한 피드백 전달 과정을 거침

- 7개의 하부위원회는 각자 활동을 통해 분야별 보고서를 만들어냄.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지속

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짐.

- 2003년 2월 의회에서 수상의 공식 발언을 통해 정부가 보고서의 제안을 수락하였음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함.

통상산업부(MTI)를 통한 정부계획의 실행

- 향후 15년간의 장기계획을 제시한 경제재고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하여, 2018년까지 달성할 통상산업부의 비전과 미션, 목표를 설정
- 7개의 반 독립적인 하부 위원회가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
 - 통상산업부의 개별 부서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비전과 미션

- 비전
 - 2018년까지 능력, 도전, 혁신의 선도적인 글로벌 시티로서, 세계화되고, 기업가적이며, 다양화된 경제를 가진 싱가포르를 실현한다.
- 미션
 - 강한 성장 잠재력과 기반을 갖추어 고유산업 발전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조성
 - 싱가포르의 국제 무역 이익을 보호하여, 싱가포르 재화의 국제시장 진입 기회를 증진
 - 정책 형성과 조정을 통하여 싱가포르 경제의 현 상태와 전망에 대한 이해 제공

2) 추진부서

경제재고 위원회(Economic Review Committee)

- 현재의 싱가포르 경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싱가포르 경제발전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수상의 지시에 따라 통상산업부 내에 설립된 위원회
- 싱가포르 수상을 의장으로 한 중심 위원회와, 주요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7개의 하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 12월 결성되어 2003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후 해산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재정부의 한 부서인 개발부를 확대·신설하여, 1979년 3월 싱가포르 국가 성장 정책, 현 정책의 평가,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로 신설함.
- 국가경쟁력 전략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제재고 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결정해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 싱가포르 경제성장, 통상 확대, 산업발전, 기업친화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4가지 주요 업무를 담당함.
 - 그 밖에 주요경제지표, 보고서, 특허 뉴스 등 싱가포르 경제와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10개의 부서와 10개의 반독립적인 하위 위원회(법정위원회)가 존재하며, 현재 203명의 직원이 본부에 근무하고 있음.
 - 하위위원회는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음. 이러한 업무는 산업환경 변화, 시장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민·관의 R&D 개발 및 기술혁신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음.
 - 하위부서는 고유의 업무와 함께, 관련 하위위원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거나, 하위위원회를 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함.

나. 과학기술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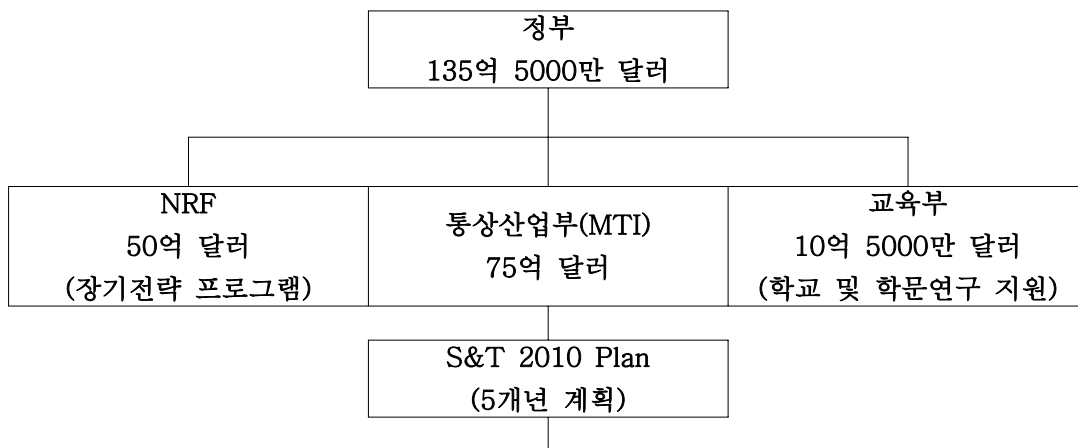
1) 업무추진 및 평가

□ R&D 혁신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

- 2004년 8월, 부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기술발전을 위한 장관회의(Ministerial Committee on Research & Development)를 통해 싱가포르 R&D 강화를 위한 5대 주요 전략을 선정.
- 2006년 1월 연구혁신 및 기업 협의회(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Council, 이하 RIEC)를 총리실 내에 설립하여 국책 연구, 혁신, 기업 전략에 대한 조언기관으로 활용함. 이 기관을 통해 주요한 R&D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함.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선별된 R&D분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킴.

- 선별된 전략 분야에 대해, 과학적 우수성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에서부터 산업과의 연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적 연구에 까지, 전 범위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개발.
 - R&D에 대한 민간 영역의 비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R&D와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
- 국립 연구 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이하 NRF)를 통해 실질적인 R&D분야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함.
- NRF는 RIEC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R&D사업을 조정, 관리하고, 각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NRF의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업진행에 대한 NRF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 NRF의 결정사항과 사업내용은 RIEC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과학기술 권고 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이하SAB)
- NRF와 함께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업무를 함.
 - NRF의 사업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함. 특히 재정지원과 지원연구의 성과 및 R&D 감독업무를 수행함.

<그림4>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지원자금의 흐름





2) 추진기관

총리실

- 국가의 주요 경제 및 과학정책 전략 위원회가 총리실의 지시를 통해 설립됨.
 - R&D 전략의 주요 조언 기관인 RIEC와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NRF는 총리실 산하에 있음.
 - 경제정책의 실제 실행은 부처인 MTI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연구혁신 및 기업 협의회(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Council)

- 싱가포르 행정부에 국가 R&D 정책과 전략에 대한 조언을 통해 싱가포르를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새로운 경제성장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싱가포르의 혁신, 연구, 비즈니스 증진을 도모함.
- 수상을 의장으로 하며, 각 부처 장관과 지역 및 외국의 학계, 비즈니스, 과학기술 전문집단의 대표자를 멤버로 하고 있음.

국립 연구 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 국가차원의 R&D 지원 및 강화를 위해 2006년 1월 1일 총리실 산하에 설립
 - RIEC(Research Innovation & Enterprise Council) 에 의해 승인된 국책연구, 혁신, 기업 전략을 수행하고, NRF의 전략과 부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
 - NRF는 2010년까지 국가 R&D지출을 GDP의 3%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004년 기준 GDP의 2.25%)
- 계획 및 정책부서, 프로젝트 부서, 전략 프로그램 부서, 기업 서비스 부서 등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음.

- 계획 및 정책 부서: RIEC 계획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다양한 기관에서 행해지는 R&D 사업을 통합하여 연계 전략 및 정책을 구성함.
- 프로젝트 부서: 프로젝트 제안서를 평가, 재정 지원 조정,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함. 프로젝트는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해 NRF에 제출됨.
- 전략 프로그램 부서: 장기적인 기술, 사회인구 경향을 조사하고 싱가포르 R&D 투자의 주요 전략 분야를 파악함.

□ 과학기술 연구처(A*STAR, the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 1991년부터 계획·시행된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기관.
- MTI의 하위 위원회 중 하나로, 학교 연구소 지원, 국가 R&D 기관 지원 등 공적 R&D 지원 계획에 대해 NRF에서 재정을 지원받음.
- 전신이었던 국립 과학기술 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A*STAR는 R&D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과 개발에 초점을 맞춤.

□ 경제 발전 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GDP 성장과 고용 창출, 사업 기회 창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1961년 만들어진 기관.
- 싱가포르의 중점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두 분야의 혁신 및 기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음: 산업군 강화, 새로운 산업군 생성 및 성장, 기업을 혁신으로 이끌고 키움, 새로운 산업지형 개발, 싱가포르의 환경을 세계 경제에 적절하며 경쟁력 있게 만들
- 싱가포르 기업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투자도 지원함.

- MTI의 하위 위원회 중 하나이며, NRF에서 민간 분야 R&D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다. 사회정책

1) 추진기관

□ Remaking Singapore Committee

- 2002년 2월, 21세기 싱가포르의 전략을 검토하는 경제재고 위원회(Economic Review Committee)의 보고서를 보충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
 - 사회·문화·정치 등에 대한 전략을 검토한 보고서를 만들어 2003년 7월 정부에 제출하였음.
- 국가발전처장이 의장을 맡았으며, 의회 및 부처대표자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표자, 시민단체 및 제3 섹터 대표자를 멤버로 위원회를 구성함
- 5개의 하위 위원회가 특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5. 정책적 시사점

- 싱가포르는 IMD, WEF 등 경쟁력 평가기구의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음.
 -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비전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 그리고 사회·문화적 균열 치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싱가포르 비전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비전과 전략의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정규 정부 부서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설치한 위원회나 협의회, 공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연구소라는 시스템을 주로 활용

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 think tank들이 전략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나뉠대로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비전·전략은 주변의 상황 변화에 기민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소규모의 도시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이렇게 싱가포르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정부구조임.
-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기구와 공무원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
 - 한 편은 정규 부서와 공무원들로서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교육부, 보건부, 내무부 등이 이러한 부서들로 60%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됨.
 - 그러나 실제 경제 발전이나 사회 정책 수립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나 협의회, 공기업 등에 의해 수행됨. 이러한 기구들의 특징은 관료적 행정 절차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며, 의회도 이러한 기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렇게 두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정부 기구들은 싱가포르의 정치제도 안에서 상이하면서도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정규 부서와 공무원들이 제도적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세금 징수나 수도·의료·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공기업이나 위원회, 협의회 등 특수 부서들은 유연성과 혁신,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러한 부서들이 미래 비전과 전략을 기민하게 수립하고 정규 부서들은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유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싱가포르의 경쟁력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

Ⅲ. 대만의 경쟁전략

1. 대만 경제 발전의 특징

2005년 주요경제지표

| | |
|--------------------------------|----------------|
| 실질 GDP 증가 (%) | 4.1 |
|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평균, %) | 2.3 |
| current account balance (미국\$) | 16,400,000,000 |
| 환율 (싱가포르\$: 1 미국\$) | 32.1 |
| 인구(거주자 기준) | 22,800,000 |

가. 대만경제의 개요

□ 대만 경제의 개요

- 1949년 중국에서 넘어온 국민당이 농업중심국가인 대만을 제조업과 수출주도형 산업을 통해 발전시켰으며,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평균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1980년대 임금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인력중심의 제조업에서 자본과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함.
 - 특히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에 주력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관련제품 생산자 중 하나가 됨.
 - 1980년대 신주 과학단지를 건립하여 대만의 IT 하드웨어 산업을 키웠으며, 이후 두 개의 하이테크 단지를 만들어 전자기술에 초점을 맞춘 산업발전에 투자함.
- IT계열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LCD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자가 되었음. 그러나 1980년대 임금인상으로 인해 생산기지가 해외 및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산업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음.

나. 대만경제정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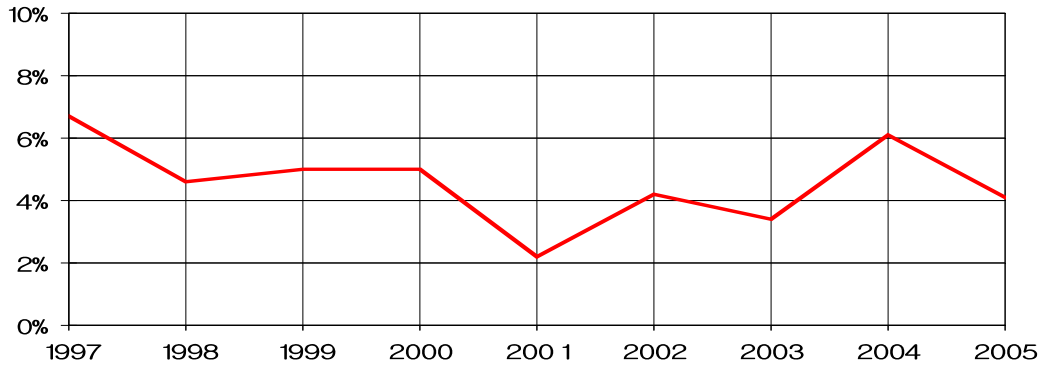
- 정부가 탈규제와 강력한 경제개입을 통해 발전을 주도함.
 - 노동시장과 같은 영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최소분야에 대한 최소규제를 고수하여, 수출지향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움.
 - 한편으로 경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과 규제, 관료적 강권정책을 사용함.
 - 정부는 산업단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새로운 산업개발이 유발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일정부분 감당하면서 산업을 보호함.
 - 증시규제와 환율조정 등의 규제를 통해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 : 2004년 기준, 상업은행 분야의 60%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음.
-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활동에 대해 제한을 둠.
 - 중국과의 관계설정과 정권의 정당성 문제 등,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중국과의 상거래 활동을 제한함.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배경

- 1992년 GDP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정권교체 후 정치혼란이 지속됐고 노사분규와 지역갈등이 급증하여, 2000년 이후 GDP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그림5> 대만의 GDP성장을 변화



- 대만 독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을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여, 국제사회에서 좁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경제환경이 좋지 않음.
- 대기업 및 자본집약 산업의 부재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기지의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됨.
- 1980년대 후반 국내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대만의 제조업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동함. 생산기지 이전으로, 제조업분야의 비중이 1986년 GDP의 39.4%에서 2004년 25.5%로 하락. 반면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상승하여, 동 기간 동안 GDP의 47.3%에서 2/3까지 높아짐.
- 2001년 타이완 정부가 대중국 투자 규제를 완화한 이후, 1990년대 말부터 하이테크 놀로지 기업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응분야(counterpart)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비중을 상당부분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대중국 사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대중국 사업을 하는 지역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이 저하됨.
- 대만 경제정책이 부작용을 낳게 됨.
 - 정책적 산업보호로 인해, 특정산업이 오히려 국제화 경향에 뒤처지거나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 금융분야의 국가 규제로 인해 자본흐름이 제한되어 비효율성이 나타남.
 - : 2004년 현재, 상업은행의 60%를 통제하고 있음.

- 최소분야 최소규제의 적용이 점점 어려워짐.
- : 낮은 임금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커지고, 포괄적인 복지급여의 제공과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짐.
- 한편으로, 부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국민당 정권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더 이상 강력한 정부 통제의 경제 환경 유지가 어려워짐.

나.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 관리로의 전환 노력

경제의 자유화를 시도함.

-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경제를 자유화하고자 노력함.

- 1989년부터 대만정부소유의 기업을 매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매각액은 약 4,000억 대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상업은행의 60%를 통제하고 있는 수준에서, 2006년 말까지 정부소유의 은행 수를 6개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함.
- 1990년 WTO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WTO에 가입함. WTO 가입과 함께 대만시장을 해외에 개방함.

시장개방과 탈규제화

- 대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Asia-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re-APROC)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
 - 6개 분야 “제조업, 전자통신, 항공운송, 해양운동, 금융서비스와 미디어”의 아시아 중심지로 대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개방과 탈규제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대만의 경제 개방을 알리고자 함.
- * 실제로 이 계획의 추진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중국과의 직접 교역 제한으로 인해 대만이 지역센터로 기능하는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

적극적인 하이테크 산업정책

- 1980년대 대만의 대표산업으로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린것을 계기로, 대만정부는 세계 수준의 하이테크놀로지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1950~60년대의 제조업에서 80~90년대의 혁신산업을 거쳐, 21세기 대만을 지식사회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산업단지과 연구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적극적인 해외기업과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함.
- 산업기술연구소 (이하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하여 대만의 혁신산업연구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통한 산업발전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3. 주요 전략과 정책

가. 종합계획

1) 매 4년마다 종합적인 중기계획 발표

-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매 4년마다 종합적인 중기계획을 발표함.

* 종합적인 정책이 중기계획으로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지수 중 “정책의 안정성”부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 계획은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실행목표와 예산은 매년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천수이벤(Chun Shui Ben)이 집권을 시작한 2001년에 제 13차 중기계획이 발표됨. 최근 2번의 4개년 계획(13차와 14차)은 현 대통령의 연임으로 인해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발전 계획 (Pla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new Century: Four-year for 2001-2004 and outlook for 2011)

: 이 계획은 대만의 발전에서 환경과 경제 발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 새로운 세기를 위한 두 번째 국가발전 계획 (Second-term pla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new century: Four-year plan for 2005-2008 and outlook for 2015)

: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강조한 “환경친화적인 대만섬 Green Silicon Island”에 더하여, 새로운 “Taiwan Dream”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국가발전계획- 도전2008 (Challenge 2008- National Development Plan)

- 2002년, 대만을 둘러싼 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계획.
- 세계화, 지역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외적변화에 대응하고, 과거 노동집약 산업이 중심이었던 대만을 “지식기반 산업”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 주요 3분야의 개혁과 10개의 개별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약 750억불의 예산을 설정하였음.
 - 3분야의 개혁: 국민당의 오랜 집권으로 부패한 정치에 대한 “정치적 개혁”, 국가의 오랜 통제를 받았던 “금융개혁”,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재정개혁”을 대표적인 개혁 3분야로 설정함.
 - 10개의 주요 계획: 1) e세대 인력 배양 계획, 2)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산업 발전 계획 3) 국제적인 혁신과 R&D 기반설립 계획 4) 산업가치 향상을 위한 계획 5) 관광객 2배 유치를 위한 계획 6) e타이완 설립 계획 7) 지역 중심 센터 개발 계획 8) 지역 중심 물류 센터 건립 계획 9) 자연친화적 환경 건설 계획 10)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개발 계획

나. 과학기술 정책

1)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lan, 2005~2008)

- 1978년 이후 4년 단위로 발표되는 과학기술 발전정책으로, 2005년 계획은 7차 계획에 해당됨.
- 법령에 따라 국립 과학 위원회(National Science Council)가 컨퍼런스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는 대만의 현재 과학기술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전체목표,

전략, 자원, 그에 따른 국가의 목표전략 등과 특정분야의 목표 및 기타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사안을 토론했다. 수립된 의견을 기본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웠다.

- 회의에는 과학기술 각 분야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대표자, 국가 재정 담당관 및 학계 대표자 등이 참가했다.

○ 7차 계획에서 6개의 전략과 주요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 전체 목표: 1) 지식혁신 시스템을 강화 2) 산업경쟁의 우월성 창조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 4) 지속적인 개발의 증진 5) 시민의 과학기술 기준을 높임. 6) 자주적 방위 기술의 강화.
- 실천 전략1: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여 건전한 기반하에 과학기술 정책시스템을 세운다.
- 실천 전략2: 인력관리계획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력을 증대시켜 활용한다.
- 실천 전략3: 학문연구 기준을 확립하여 뛰어난 학문분야를 개발한다.
- 실천 전략4: 지식혁신을 조장하고 산업개발의 장애를 극복한다.
- 실천 전략5: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 지원하고 사회와의 연계성을 증진시킨다.
- 실천 전략6: 방위기술 시스템을 발전시켜 방위 무기개발을 증진한다.

4. 정책의 추진체계

가. 종합계획

1) 업무추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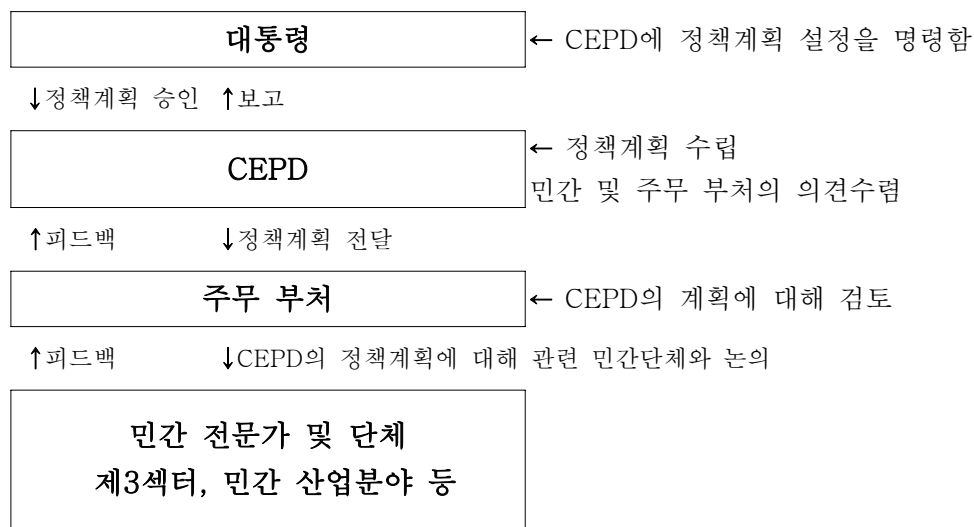
□ 경제건설위원회(이하CEPD)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 CEPD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발전계획은 상위 및 하위 기관을 통해 검토 및 보충됨.

- CEPD는 포괄적인 계획안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는 관련 비즈니스 섹터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함.

- 각 부처의 리뷰가 끝난 계획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계획안이 완성됨.
- 부처 및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CEPD 상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의 설립 및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각 분야 간 업무협의를 함.
-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매 분기별 포괄적인 리뷰를 함.

<그림6> 종합전략 수립의 전달체계



2) 추진체계

- 경제건설 위원회 (CEPD: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
- 효과적인 경제 계획 수립과 포괄적인 국가 경제개발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진 기관으로, 1948년 설립.
 - 경제계획 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계획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지수관리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도 담당하고 있음.

- 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관련 부처의 장관 및 금융, 노조, 행정부 등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학계대표자가 맡고 있음.
- 행정부의 자문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짐
 - 국가 경제개발의 전체 계획을 제시
 - 행정부에 제출된 개발계획, 제안서, 프로그램 등을 평가
 - 관련부처의 경제정책 입안 활동을 조정함
 - 발전 계획, 방법, 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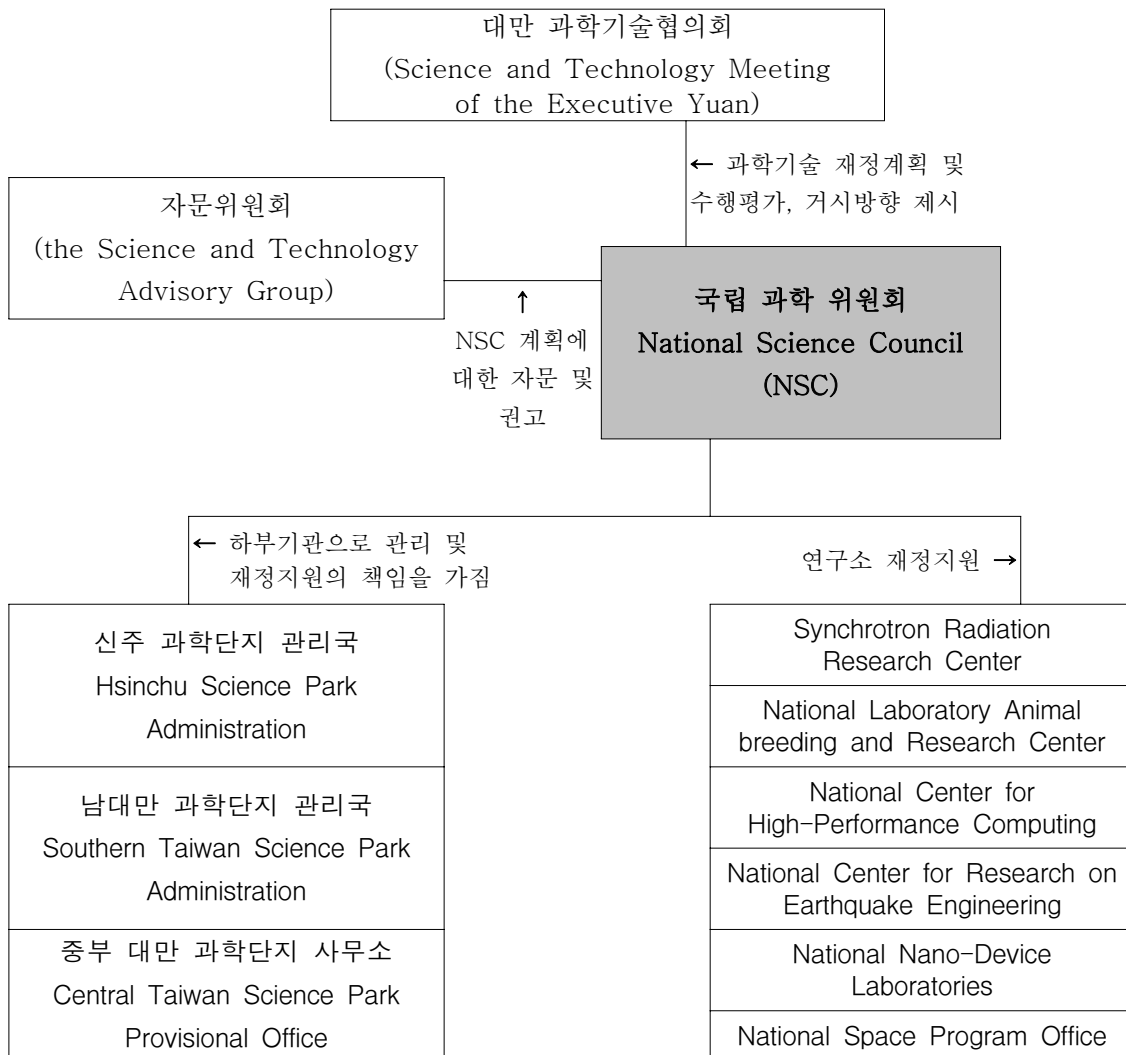
나. 과학정책

1) 업무추진 및 평가

- 국립 과학위원회(이하 NSC, National Science Council)가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
 - 1999년 제정된 “기초과학기술 증진에 관한 법률(The Funda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Act)”에 따라, 2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상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발전방향과 계획안을 제시해야하는 의무를 지님.
- 1978년부터 매 4년마다 과학기술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1999년 제정된 “기초과학기술 증진에 관한 법률(The Funda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Act)”에 따라, 과학기술 4개년 계획은 실행연도 초기에 실시되는 컨퍼런스에서 합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2001년 1월 제6차 과학기술발전계획 (2001~2004)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림.
 - 컨퍼런스에서 합의된 의견을 통해 만들어진 과학기술발전계획은 행정부 정례회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됨.
 - NSC의 계획안을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 2년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년 계획 추진 중에 백서를 발간함.
- 1998년 6월부터 대만 과학기술협의회(Science and Technology Meeting of the Executive Yuan)가 행정부 단위에서 열림.
 -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고위 회의로, 3달에 한번씩 열림.
 - 재정계획 및 계획 수행의 총괄평가, 과학기술의 보호방안 등 과학기술계획의 수행을 돕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림.
- 정책 수행은 과학기술 권고 모임(the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Group, 이하STAG)가 평가 및 검토함.
 - STAG는 매년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주요 R&D분야와 국가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제출한 정책 권고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를 염.

<그림7> 대만 과학기술계획 의사결정 및 재정지원



2) 추진체계

□ 국립 과학 협의회 (NSC: National Science Council)

- 1959년 세워진 기관으로, 과학 및 기술발전을 증진시키는 책임을 지닌 최상위의 국가 기관임.
- 학계 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부서와 국, 3개의 관계기관(과학단지 관리국, 남부 과학단지 관리국, 중앙 과학단지 관리사무소)을 가지고 있음.

- 포괄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한 6개 연구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미션을 가짐.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증진
 - 과학기술의 학문적 연구 지원
 - 과학단지 개발

□ 산업 기술 연구소(ITRI: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1973년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R&D 센터임. 이후 대만이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그밖의 많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산업발전의 기회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설정, 이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1973년 정부 지원으로 3개의 연구소를 가진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7개의 연구소와 4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음. 본부는 의장(chairman), 대표(president), 두 명의 수행 부대표(executive vice president), 두 명의 부대표(vice president), 특별자문관 1명, 선임 자문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재정은 경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음.
 - 대만의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응용 연구와 기술 서비스 활성화
 - 산업육구를 충족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양립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개발
 - 연구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정성과 개방성에 바탕을 두어 전파함.
 -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산업기술 인력을 배양할 것

- 1973년 이후, ITRI는 대만의 기술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옴. ITRI 연구로부터 나온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 확립: IC 디자인, 평면 기술, CD 드라이브 등의 영역을 확장함
 - 전통산업의 향상: 식물, 자전거, 항공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산업의 향상을 주도함
 -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이끔: 산업 발전과 관련된 환경, 안전, 건강 이슈 등 넓은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숙련된 기술의 인적 자원 개발: 근로자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모두 제공함. 이중 다수가 대만 산업의 대들보가 됨.

5. 정책적 시사점

□ IMD 경쟁력 지수에서 하락세를 보임.

- 특히 기업효율성 부분에서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만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천수이벤 대통령 가족의 부패로 인해, 국내의 반대여론이 거세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이는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정치의 혼란이 국가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독립 기관을 통한 전략 및 비전의 수립

- 대만은 4년의 짧은 대통령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국가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정책적 안정성 부문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이기도 함.
- 그러나 학계 출신의 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는 “경제건설 위원회”를 통해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체제를 가지고 있음. 이

기관을 통해 대만은 경제전략 수립을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음.

□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난관에 빠진 측면이 있음.

- 대통령의 임기에 따른 정책 일관성의 부재와 불안정성, 국민복지와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내적 갈등 등, 단순 경제성장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음.
- 장기간 일인당 GDP 1만 달러의 수준에서 벗어나고자 최근 대만경제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내부적으로 정치개혁, 금융규제 완화, 재정개혁 등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음.

IV. 홍콩의 경쟁전략

1. 홍콩 경제발전의 특징

가. 역사적 배경

- 전통적인 중개무역항에서 영국 식민지를 거쳐, '97년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로 자치 행정시스템 유지
- 홍콩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인도의 면화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중개무역항으로 성장해 왔음.
-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1839~43) 시기인 1841년에 청왕조와의 교역을 위한 무역항으로 홍콩섬(Hong Kong Island)을 점령한 이후, 심천에 인접한 쿨롱(Kowloon)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
- 1984년 중국-영국간 공동선언에 의해 영국은 1997년 중국에게 홍콩을 양도하고,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하에 홍콩을 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
- 1997년 7월 1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중국의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이하 SAR)로 지정되어 SAR 자체의 입법, 사법 시스템을 보장해 주는 미니헌법인 기본법(Basic Law)에 의해 통치
- 홍콩 반환 이후, 중국정부의 내정간섭에 반대하여 정치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 요소 잠재
- 중국정부의 홍콩정부에 대한 직간접 통제 및 영향력 강화로 인한 홍콩의 사회·정치적 불안 소요 잔존

나. 홍콩경제의 발전과정

- 중국의 197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발 정책을 계기로 홍콩의 임가공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변화
- 1950년 이후 홍콩총독부는 자유무역항 기능을 활용하고 산업기반을 갖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 중국 내륙이 원료 공급과 저임의 노동자 유입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을 토대로 섬유산업과 플라스틱, 전자산업이 중점 육성되었음.

- 그러나 연평균 10% 내외에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던 홍콩은 1970년대 들어 관련 산업의 국제시장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 확산으로 침체기를 맞이함. 이는 임가공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 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함.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려 홍콩의 제조업이 배후지역인 심천특구로 이전하면서 홍콩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영국의 식민지시대의 자유무역항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금융·유통·관광·부동산업 등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
-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 임가공 형태의 섬유·플라스틱·신발 등 기존의 주력 수출 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화학·시계·식품·목재·가구·기계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 계산기 및 컴퓨터 등 기술집약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으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펼침.
- 전통적으로 정부의 의도적 시장개입을 자제해 온 홍콩정부도 홍콩 서비스산업을 진흥시켜 홍콩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차원의 전략 추진
- 1995년 홍콩 서비스 산업 진작을 위한 공식 작업반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97년 3월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
- 즉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① 서비스 수출진흥, ② 서비스부문 투자유치 강화, ③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 제고, ④ 서비스 효율성 제고, ⑤ 지원 인프라 제공, ⑥ 교육 및 훈련에의 투자, ⑦ 세계적, 지역적 서비스 센터로서의 홍콩의 강점 신장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추진, ⑧ 정부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다원적 지원을 조정, 감독할 전담기구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진흥단(Business and Services Promotion Unit)'의 설치 등에 있음.
- 서비스 산업 진흥 결과, 홍콩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1980년 67%에서 1990년 74%, 2000년에는 86%로 증가(동기간 제조업은 24%→18%→6% 감소)
- 2000년 7월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서 홍콩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

로 중요한 투자를 홍콩에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홍콩 투자단 (Invest HK)'을 설립

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파트너십 강화협정)

□ 추진경과 및 배경

- 2001년 12월 등젠화(董建華) 홍콩특별행정구(HKSAR) 행정장관이 중국본토와 홍콩간 일종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하면서, '02~'03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통해 '03년 6월 29일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CEPA 체결.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
- 홍콩의 입장에서는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부동산 가격 침체,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지속 등 경기침체 탈출의 돌파구로 삼고자 함.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 효과와 홍콩을 통한 중국의 제품, 자금, 인력이동 확대에 따른 홍콩의 중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홍콩이 중국 진출의 관문역할에 있어 독점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됨
-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은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과 관계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단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CEPA를 통해 시장개방 적응기를 갖고자 함.
- 중국의존도가 심화되어 자생력을 잃어가는 홍콩경제 상황이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 본토의 정치적 입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홍콩경제의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 안정을 꾀하고, 중화권 통일정책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됨.

□ 주요 내용

- CEP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대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중국은 273개 품목에 대한 대홍콩 수입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경영컨설팅, 법률, 의료, 관광, 금융 등 18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
- 특히 서비스 분야 관련 홍콩기업은 중국이 WTO와 합의한 일정보다 앞당겨 중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일부 분야(건축, 부동산, 물류서비스, 법률 등)는 WTO에 합의한 내용보다 훨씬 관대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관, 검역, 중소기업간 협력, 의약, 전자상거래, 무역

과 투자 촉진, 법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의 7가지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

□ 향후 전망

- 홍콩산 제품에 대한 조기 무관세 조치로 중국의 수출기지로서, 위탁가공기지로서의 홍콩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중국의 무관세 혜택을 기대한 외국 기업들의 홍콩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실제로도 중국과의 CEPA 체결로 홍콩의 중국관련 수출이 크게 확대
- WTO에서 합의한 것보다 앞선 시장 자유화로 홍콩기업의 대중국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전망
- 중국인민은행이 개인에 대한 위안화 업무를 '04년 2월 25일부터 홍콩은행들에게 허용함에 따라 국제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입지도 개선
- 향후에도 홍콩경제는 중국경제의 고성장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면서 호조를 지속할 전망.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호기를 보이고 외국인직업투자 유치도 증가 추세
 - 중국정부의 홍콩으로의 개인여행 자유화 조치도 홍콩경제의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

2. 미래비전 전략의 등장

가. '홍콩 2030(Hong Kong 2030)'의 추진배경

- 홍콩은 1970년대 초반부터 'Hong Kong Outline Plan'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국가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음
- 1984년 첫 번째 국토개발전략(TDS; Territorial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1990년대를 대비한 홍콩의 국토이용 및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1986~88년 동안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두 차례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종합적인 국토개발전략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1996년까지 기술적 검토 완료, 이후 2년간의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거쳐 1998년 2월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중국본토로부터 홍콩으로의 대량 이주민 발생,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TDS 최종보고서의 전면 검토의 필요성 대두
- 홍콩의 미래전략, 특히 물적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 'Hong kong 2030: Planning Vision and Strategy' 수립을 시작
- 홍콩의 새로운 비전은 중국의 주요도시 뿐 아니라, 뉴욕이나 런던에 필적할 만한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 1998년과 1999년에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등젠화의 정책연설에서 구체화
- 이 비전의 실현과 더불어 TDS에서 제안된 물적계획을 보완·수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시작됨
- 1998년 초에 설립된 행정장관 자문위원회인 전략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trategic Development)가 이 임무를 위임받아, 특히 홍콩의 SWOT 분석을 통해 홍콩의 경쟁력과 역동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중국본토와 아시아, 세계의 변화 추세에 뒤처지지 않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나. 추진단계

- '홍콩 2030' 비전은 네 개의 핵심적인 추진 단계를 거침
 - 제1단계: 아젠다 설정 및 핵심과제 도출
 - 비공식적 자문 및 해외 경험 검토를 통해, 부문별 계획과제 검토
 - 중국 본토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정부 정책 및 전략계획 수립
 - 2001년 2월, 계획의 목적과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초안보고서(inception Report) 제출하여 첫 번째 공식자문 받음. 공적·이해관계 집단, 관련 법적 및 자문기구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
 - 제2단계: 핵심과제 검토
 - 장래인구 추계, 주거용 택지 요구량 및 개발가능성 등을 추정
 - 새로운 개발 기회 검토 및 중국 본토와의 사회·경제적 통합 고려

- 환경적 고려와 보존 문제, 관광객 유인 및 전통문화 보호
-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국토이용의 관계
- 이러한 핵심과제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2차 공식 자문 진행
- 제3단계: 시나리오 및 선택지(option) 수립 및 평가
 - 부문별 평가에 대한 방법론 수립
 - 각 시나리오를 설명해 줄 핵심적인 매개변수 설정

| | 시나리오 A | 시나리오 B | 시나리오 C |
|----------------------|--------|--------|--------|
| 홍콩의 인구증가율 | 낮음 | 낮음 | 높음 |
| 홍콩의 GDP 증가율 | 높음 | 낮음 | 낮음 |
| 국경간(홍콩-중국본토) 이동의 용이성 | 현상유지 | 높음 | 높음 |
| 중국의 경제성장률 | 높음 | 높음 | 낮음 |

- 각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서 환경적 고려, 전략개발 개념의 변화, 인구 및 고용의 분포, 전략적 운송시스템, 별개의 운송방법의 적용 및 항만 편의시설과 같은 특별 토지 사용의 분포 등과 관련된 가능한 선택지(options) 발굴
- 2010, 2020, 203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 및 일자리 통계 구축
-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사용 및 운송 모형 검증 및 설정
- 실현될 수 있는 재정가능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선택지에 대한 폭넓은 평가
- 이를 토대로 선택지의 개선 및 평가
- 개발된 시나리오 및 선택지에 대한 검증, 선택지 구성요소 등을 토대로 '홍콩 2030'의 준비 정도나 대응계획에 대한 제3단계 공식 자문 진행
- 제4단계: 개발 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 단기(2000~2010), 중기(2011~2020), 장기(2021~2030) 전략 수립
 - 대응계획 및 제3의 시나리오 수립

- 모니터링 및 검토 기제 수립
- 최종보고서 준비 및 요약보고서 제출

3. 주요 정책과 전략

가. '홍콩 2030'의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고수

- 1999년과 2000년 행정장관의 정책연설에서 홍콩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욕구를 균형있게 충족시킴으로써 활기찬 경제, 사회적 진보, 환경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있음.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홍콩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토보존

- 홍콩이 갖고 있는 유연성, 중개도시로서의 위상, 국제도시로서의 면모 등을 살려 세계 및 지역의 중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 추진
- 특히 다음과 같은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① 전세계 및 지역의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 ② 다국적기업의 지역 중심지, ③ 중국 남부로 진입하는 교역의 관문지, ④ 항공과 해운교통의 국제 및 지역 중심, ⑤ 관광객들의 주된 목적지, ⑥ 남부 중국의 혁신 및 기술 중심지, ⑦ 지역의 방송, 통신, 인터넷의 중심지, ⑧ 아시아의 예술·문화·오락·스포츠의 중심지
- 허브기능을 강화 및 기업의 중국본토 진출에서의 강점, 홍콩주민의 기업가 정신, 홍콩의 국제도시의 특성을 적극 살리는 것이 홍콩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인 금융 및 교역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임

더 나은 생활환경 제공

- 홍콩 주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목표
- 자연환경의 보존: 홍콩 전체 면적의 3/4에 달하는 비도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을 별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환경파괴 방지에

주력

-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경관 미화: 신개발 지역은 창조적 디자인과 고도의 경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살려 전통건축과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 도시 경관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자와 건물주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채택을 장려하고 있음
- 'HK 2030'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항만계획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포함하여 진행 중
- 금융부담 및 다소유 건축물로 인해 적극적인 도시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재개발 적극 지원

□ 주택 및 기반시설 확충

- 홍콩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생활수준을 갖춘 도시로 육성
- 홍콩 주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춘 욕구 충족과 국제도시로서 부합하는 현대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상승효과 기대

□ 관광 진흥

- '동양의 진주', 아태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로 알려진 관광 명소로서 홍콩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홍콩만의 매력 발굴
-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중국 내륙과 연결된 교외 자연관광, 현대적 테마파크, 영화산업, 문화거리 등을 적극 발굴

□ 중국 본토와의 교류 강화

- 전략계획의 수립에 있어 홍콩과 중국 본토가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 보행자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이 갖춰진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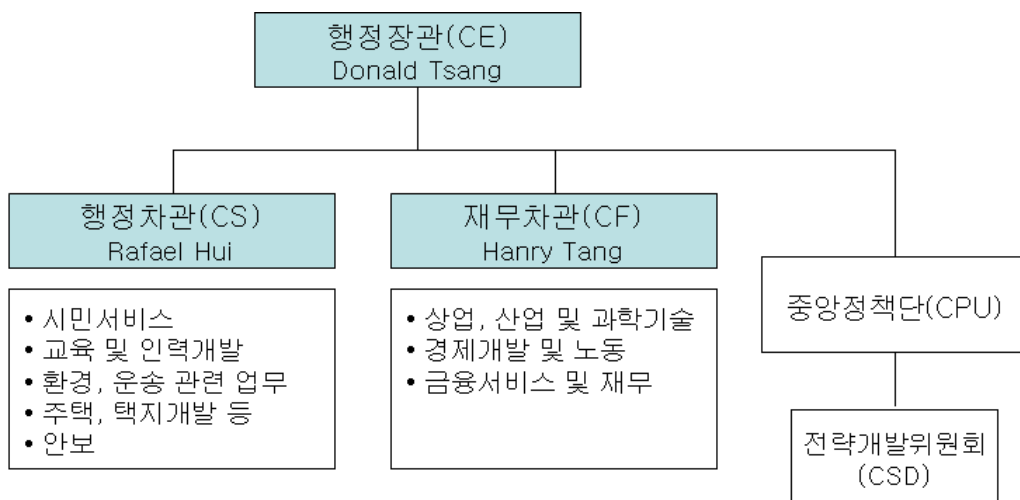
- 교외통근자를 위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 내 저소음과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제공

4. 정책의 추진체계

가. Central Policy Unit(이하 CPU)

- 중앙정책단(CPU)은 홍콩의 주요 정책 아젠더의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의 핵심 역할
 - CPU는 1989년에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7년 이후에도 그 조직이 유지됨
 - 주된 기능은 행정장관(Chief Executive; CE), 행정차관(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CS) 및 재무차관(Financial Secretary; CF)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음.
 - CPU는 정책 분석과 권고를 위해서 매우 유연하고 단순한 조직으로, LAU Siu-kai 교수를 단장으로 두 명의 차장과 4명의 임원, 그리고 선임연구위원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상근직 핵심멤버 모두 계약직으로 이루어졌고, 각기 다른 분야의 40여 명의 파트타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되어 있음
 - CPU의 주된 업무는 정책연구의 수행, 홍콩시장의 연간 정책연설(annual Policy Address) 초안 작성, 홍콩 내 관심과 여론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홍콩과 광둥지역 전략적 개발연구단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략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trategic Development)의 사무국 운영 등에 있음.

<그림 8> 홍콩의 전략 추진체계



나. Commission on Strategic Development(이하 CSD)

- 홍콩의 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HKSAR 내 가장 중요한 자문기구임.
- 홍콩의 장기발전에 대한 주요 정부 정책이슈들을 모든 분야의 이익집단으로부터 검토, 자문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 정책형성 초기 단계에서 폭넓게 관련 이익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형성에 반영하는 것을 중시
 - 위원회는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과학적 절차를 보장해 주고, 대중적 참여와 수용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 위원회는 기본법(Basic Law)에 근거한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네 개의 하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기능 등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CPU 산하에 두고 있음
- 홍콩의 경제, 인적자원, 교육, 주거, 택지공급, 환경보호 그리고 홍콩의 활력있는 경제발전 지속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한 전망과 연구 수행
 - CPU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최고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국가지배구조 및 정치발전위원회(Committee on Governacne & Political Development)', '사회개발 및 삶의 질 위원회(Committee on Social Development ad Quallity of Life)', '경제개발 및 중국 본토와의 협력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Mainland)'로 네 개의 위원회로 운영됨.

5. 정책적 시사점

- 높은 국가경쟁력 지수를 기록함.
- 홍콩정부의 의도적인 시장 불개입으로 인해, 시장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비록 중국으로의 반환과 동시에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중국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음. 내수시장의 부족과 국내산업의 서비스업 극화현상은 극복해야할 장애물이나, 떠오르는 신흥 공업국인 중국을 잘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홍콩은 내적으로 홍콩자체의 개발을 통해, 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구상하고 있음.
 - 홍콩은 국토개발 계획을 통해 홍콩을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 국토개발 계획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한편,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경기침체 탈출의 돌파구로 마카오·중국·홍콩간에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이용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 특히 홍콩의 부족한 내수와 제조업 기지를 중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좀더 혁신적이고 발전된 기술의 개발보다는 상용가능한 기술개발과 서비스업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음.
 - 상용가능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기술개발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짐.
 -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거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기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 정책중 하나임.
 - 홍콩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홍콩을 서비스업의 최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참고문헌 및 관련 웹사이트

■ 싱가포르

EIU(2006), "*Country Profile 2006: Singapore*"

Kim-Song Tan & Sock-Yong Phang(2005), "*From Efficiency-Driven to 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 Perspective from Singapor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569, April, 2005

Economic Review Committee(2003), "*New Challenges, Fresh Goals: Report of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1998),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 : Vision - A Competitive,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06), "*Sustaining Innovation-Driven Growth: Science and Technology 2010 Pla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http://app.mti.gov.sg/>

■ 대만

EIU(2006), "*Country Profile 2006: Taiwan*"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2002), "*Challenge 2008- National Development Plan*",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 Taiwan, R.O.C.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2001), "*Pla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new Century: Four-year for 2001-2004 and outlook for 2011*",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 Taiwan, R.O.C.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2005), "*Second-term plan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new century: Four-year plan for 2005-2008 and outlook for 2015*",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 Taiwan, R.O.C.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CEPD) : <http://www.cepd.gov.tw/>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ITRI) : <http://www.itri.org.tw/>

National Science Council(NSC) : <http://web.nsc.gov.tw/>

■ 홍콩

박변순(2004),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투자부진 현상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오동윤(2003), *중국·홍콩 「경제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2003), *中·HK 경제협력 강화 협정(CEPA)의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4), *중국, 홍콩·마카오와 자유무역협정(CEPA) 발효*.

한국은행(2004), *중국의 뒷받침으로 호기를 보이는 홍콩경제*, 해외경제정보 제2004-104호

EIU(2005), *Country Profile 2005: Hong Kong*.

IMF(2006),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elected Issue*.

Hong Kong 2030-Inception Report(2001.2) : <http://www.hk2030.gov.hk/eng/inception/>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KSAR) : <http://www.info.gov.hk/>

The Central Policy Unit : <http://www.cpu.gov.hk/>

Commerce, Industry and Technology Bureau : <http://www.citb.gov.hk/>